

연구보고서 2006-10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현주 김미곤 노대명

강석훈 손병돈

유진영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빈곤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학문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 등으로 빈곤에 대한 접근은 변화하였지만 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사회나 시대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쉽게 완화되지 않는 빈곤의 심각성은 빈곤문제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빈곤의 규모와 원인 등 빈곤에 대한 연구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빈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도 우리나라 빈곤의 정체를 밝히고 이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의 내부 구조를 분석의 초점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 역시 빈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겪는 자료의 한계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었으나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되 가능한 최근으로 분석 시점을 확대하여 빈곤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빈곤의 구조를 다양한 제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빈곤 내부의 총체적인 특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빈곤의 양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제 요인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과 빈곤위험이 높은 제 집단의 빈곤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들이 그 간 빈곤연구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접근하는 본 연구는 또 다른 빈곤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빈곤에 대한 연구가 빈곤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빈곤의 내부 구조를 규명하는 작업이 나름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빈곤과 관련된 제 요인들이 빈곤이라는 양상에 작용하여 어떻게 현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방향정립이나 배열설계에 또 다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빈곤에 대한 연구 및 정책마련에서 본 보고서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후 빈곤연구의 발전에 일 기여가 되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본 원의 이현주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본 원의 김미곤 연구위원, 노대명 연구위원, 유진영 선임연구원, 임완섭 연구원, 그리고 원 외 성신여자대학 강석훈 교수, 평택대학 손병돈 교수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으며 이 분들의 정성이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싶다. 본고를 세심하게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인하대학 강병규 교수, 경기대학 박능후 교수,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 엄규숙 교수와 원내의 김안나 연구위원, 여유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빈곤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홍의선선생님과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준 홍세영 선생님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싶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3
요 약	15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6
제3절 기대효과	34
제2장 빈곤연구의 동향분석	36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36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39
제3절 빈곤연구의 총량 변화	43
제4절 연구주제별 연구규모 변화	47
제5절 연구방법의 변화	51
제6절 분석결과의 함의	52
제3장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54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54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56
제3절 빈곤지표 추이	60
제4절 빈곤 심도에 따른 빈곤층의 구성	64
제5절 소득분배와 빈곤층의 구성	67
제6절 분석결과의 함의	70

제4장 빈곤의 공간적 구조	72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72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80
제3절 빈곤율 추정모델	83
제4절 빈곤의 공간적 분포	87
제5절 빈곤지역 표적화 요인	93
제6절 분석결과에의 함의	99
제5장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101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01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05
제3절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109
제4절 인구학적 구성 변화와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	112
제5절 분석결과에의 함의	120
제6장 근로빈곤층의 구조	122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22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26
제3절 근로빈곤층의 규모추정과 추이	130
제4절 근로빈곤층의 노동경제적 특성	139
제5절 분석결과에의 함의	162
제7장 빈곤 역동성 구조	165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65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67
제3절 기초분석결과	176
제4절 빈곤율 변화와 빈곤회수	177
제5절 빈곤탈출과 진입	183
제6절 분석결과에의 함의	190

제8장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192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92
제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93
제3절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변화 추이	198
제4절 빈곤수준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	202
제5절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변화 추이	221
제6절 분석결과의 함의	227
제9장 결론	230
제1절 결과의 요약	230
제2절 정책적 함의	233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표 목 차

〈표 2- 1〉 빈곤연구의 분류	41
〈표 2- 2〉 빈곤연구의 주제별 시기별 분류	50
〈표 2- 3〉 과거 10년간 연구방법 변화	51
〈표 3- 1〉 1996~2006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59
〈표 3- 2〉 빈곤율 변화 추이	61
〈표 3- 3〉 빈곤격차비율 변화 추이	62
〈표 3- 4〉 센지수 변화 추이	63
〈표 3- 5〉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	65
〈표 3- 6〉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66
〈표 3- 7〉 전계층과 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67
〈표 3- 8〉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	69
〈표 3- 9〉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70
〈표 4- 1〉 서베이와 센서스의 공통된 설명변수	81
〈표 4- 2〉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84
〈표 4- 3〉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85
〈표 4- 4〉 빈곤율 추정결과 - 1996년 서베이와 1995년 센서스자료 결합	88
〈표 4- 5〉 빈곤율 추정결과 - 2003년 서베이와 2000년 센서스자료 결합	89
〈표 4- 6〉 지역 빈곤율 관련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94
〈표 4- 7〉 지역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98
〈표 5- 1〉 인구학적 구성 변화	114
〈표 5- 2〉 인구학적 구성 변화 비교(추계치와 분석결과치)	115
〈표 5- 3〉 1996-2006년간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	117
〈표 6- 1〉 ‘노동’ 개념에 대한 구분	128

〈표 6- 2〉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2003년)	131
〈표 6- 3〉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유형화	132
〈표 6- 4〉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소득계층별 분포)	134
〈표 6- 5〉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취업상태별 분포)	135
〈표 6- 6〉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136
〈표 6- 7〉 <기준 C>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138
〈표 6- 8〉 연도별 빈곤가구 취업가구의 업종별 분포	145
〈표 6- 9〉 연도별 취업빈곤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147
〈표 6-10〉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 비교	149
〈표 6-11〉 취업자 수에 따른 연도별 빈곤위험률	151
〈표 6-12〉 가구의 취업상태 비중 변화	152
〈표 6-13〉 2003년 가구의 취업상태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율	153
〈표 6-14〉 연도별 취업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 비교	156
〈표 6-15〉 취업빈곤가구 가구의 종사지위별 인구학적 분포 (2003년)	157
〈표 6-16〉 취업빈곤가구 가구의 종사지위별 인구학적 분포 (2003년)	158
〈표 6-17〉 소득계층별 가구의 평균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60
〈표 6-18〉 가구의 종사지위별 평균소득 및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61
〈표 6-19〉 가구의 소득계층별 종사지위별 사회보장부담금 및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62
〈표 7- 1〉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가구소득비교	169
〈표 7- 2〉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절대 빈곤율 비교	170
〈표 7- 3〉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171
〈표 7- 4〉 2003년도 KLIPS표본과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표본구성 비교	173
〈표 7- 5〉 소득변수들의 기초통계량	176
〈표 7- 6〉 빈곤선 추정(연간소득, 단위 : 만원)	177
〈표 7- 7〉 전체 및 유형별 빈곤율(시장소득 기준)	180
〈표 7- 8〉 전체 및 유형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80
〈표 7- 9〉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181

〈표 7-10〉 전체 및 유형별 빈곤횡수(시장소득 기준)	183
〈표 7-11〉 전체 및 유형별 빈곤횡수(경상소득 기준)	183
〈표 7-12〉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3차 웨이브, 시장소득 기준)	186
〈표 7-13〉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3차 웨이브, 경상소득 기준)	186
〈표 7-14〉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7차 웨이브, 시장소득 기준)	189
〈표 7-15〉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7차 웨이브, 경상소득 기준)	190
〈표 8- 1〉 분석년도별 빈곤정도별 집단구분의 기준소득	198
〈표 8- 2〉 빈곤집단의 빈곤정도별 분포	200
〈표 8- 3〉 빈곤정도별 인구 구성의 추이	201
〈표 8- 4〉 연금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204
〈표 8- 5〉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206
〈표 8- 6〉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208
〈표 8- 7〉 사회보장수혜 사각지대 규모의 변화	209
〈표 8- 8〉 빈곤정도별 연금 평균소득 비교(수급자만)	211
〈표 8- 9〉 빈곤정도별 기타 사회보장 평균소득 비교(수급자만)	212
〈표 8-10〉 빈곤정도별 전체 사회보장 평균 소득 비교(수급자만)	215
〈표 8-11〉 연금소득자의 추이	216
〈표 8-12〉 연금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217
〈표 8-13〉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219
〈표 8-14〉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220
〈표 8-15〉 빈곤정도별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222
〈표 8-16〉 빈곤정도별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224
〈표 8-17〉 빈곤정도별 전체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225
〈표 8-18〉 사회보장 소득 전후 빈곤층의 규모 변화 추이	226

그림목차

[그림 1-1] 통계청과 OECD 소득구분 비교	30
[그림 2-1] 과거 10년 단위 빈곤연구 총량 변화	43
[그림 2-2] 빈곤율(상대빈곤율) 변화와 빈곤연구의 규모변화	44
[그림 2-3] 경기변동과 빈곤연구의 규모변화	45
[그림 2-4] 빈곤연구의 주제별 연구 규모	48
[그림 2-5] 과거 10년간 연구방법 변화	52
[그림 4-1] 1996년 서베이-1995년 센서스 결합자료 빈곤도	91
[그림 4-2] 2003년 서베이-2000년 센서스 결합자료 빈곤도	92
[그림 4-3] 2003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도	95
[그림 4-4] 2003년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순위도	96
[그림 5-1] 정책 범주별 빈곤가구의 구성	111
[그림 5-2] 가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118
[그림 5-3]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119
[그림 5-4]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119
[그림 6-1]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빈곤 격차의 비교	133
[그림 6-2] 빈곤·비빈곤층 내 종사지위별 분포	137
[그림 6-3]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종사지위별 분포	139
[그림 6-4]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에 있어 노동문제의 분해	141
[그림 6-5]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 비교	149
[그림 6-6] 취업자 수에 따른 연도별 빈곤위험률	151

부표목차

〈부표 1〉 빈곤율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49
〈부표 2〉 빈곤격차비율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49
〈부표 3〉 센지수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50
〈부표 4〉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	250
〈부표 5〉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	251
〈부표 6〉 전계층과 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51
〈부표 7〉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	252
〈부표 8〉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	252

Abstract

The Structure of Poverty in Korea

□ Research Aims

- The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people in poverty from various direction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poverty policy of Korea.
- This research's approach to the inner structure of the poor has an important valu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detailed poverty policies.

□ Main Research Results

-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7 sections
 - Analysis on the poverty studies
 - Analysis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poor
 - Study on poverty according to spaces
 - Demographic study on poverty
 - Structural analysis on the working poor
 - Analysis on the poverty dynamics
 - Study on poverty policy recipients
- It has been considered that previous poverty stud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economic cycle, poverty level, basic data production, and political situation. It is also deemed that studies on poverty areas, demographic studies and dynamics of poverty and assessment of the effect of poverty policies are lagged areas.
- The polarization has been appeared among the poor. Poverty policy must be diversified to match with the position of the poor.

- The poverty level tends to be high in the mountain areas and low in the areas near main roads and temporarily there are changes in its distribution.
-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old age poverty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the poor who are capable to work is increasing. It is discovered that increase in the poor with capacity to work is not only related to the rate of unemployment but also affected by the low income. The scale of the working poor is large. Then, a policy response is needed.
- There are higher chances for women and the aged to enter the poverty level while much less chances to escape it. Due to the inner structural differences, prevention measures against entering and support measure for escaping poverty need to be considered differently.
- Despite increases in the quantity of poverty policies, the number of the poor in the blind area has increased. Especially the aged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form a large group in the blind area.

□ Expected Results

-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target in designing the poverty policy.
- Not only to estimate the scale of the policy but also to enable to decide the policy priority.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빈곤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빈곤층의 구조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공공부조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등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이 될 것임
- 최근 빈곤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빈곤규모의 변화, 원인규명, 특정집단 집중 분석 및 대빈곤정책 설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빈곤층의 전반적 구조를 다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빈곤문제와 관련된 제 요인들의 영향을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통하여 재 해석함으로써 빈곤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본 연구는 기존의 요인분석에서 구조분석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빈곤층의 구조를 주제별로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시도하였음.

□ 연구내용과 연구의 구성

- 빈곤층의 구조분석은 빈곤층의 내부적 특성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함.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 연구의 본론은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 빈곤층의 기본적인 내부 구성 분석,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분석,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 빈곤역동성의 구조분석,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으로 이루어짐.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원자료 분석을 주연구방법으로 함.
- 빈곤의 측정
 -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기준선 ‘미만’을 빈곤상태로 간주함.
 - 경상소득을 주로 활용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함.
 -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단위 분석을 주로 실시함.
- 분석시점과 자료의 선택
 - 분석시점은 크게 4개 시기(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전(A), 빈곤급증 기간(B), 빈곤 완화시기(C), 빈곤의 재심화시기(D)가 구분될 수 있는 시점으로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일함.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가계조사상반기자료(통계청)를 주로 이용함
 - 단, 분석목적에 따라 기타의 자료가 추가 사용됨. 대표적 예로 빈곤역동성 분석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빈곤층의 내부 구조를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대빈곤정책의 설계에서 정책 표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임.
-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빈곤층의 구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구성이나 방향설정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대상 상의 상계 규모, 정책대상 하위범주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제2장 빈곤연구의 동향분석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분석대상이 되는 빈곤연구는 1960년대부터 2006년 상반기(6월까지)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여 빈곤연구의 총량과 연구주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동향을 분석함.
- 빈곤연구의 배경을 밝히고, 연구주제에서 도외시 되었던 영역을 찾아,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이후 빈곤연구의 방향을 제시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빈곤연구의 총량은 빈곤율의 증감이나 경기변동, 그리고 기초 데이터의 생산이나 정치적 상황 등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는 빈곤의 지역적 구성이나 빈곤의 인구학적 구성의 전면, 그리고 빈곤의 동태성과 빈곤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영역으로 나타났고, 연구방법에서는 질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초점이 된 주제들이 아직 풍부하게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영역이었음.

제3장 빈곤의 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빈곤층의 기본구조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빈곤개념과 빈곤관련 지수들의 원리에 기초한 빈곤층 내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더함.
- 빈곤격차비율이나 센지수 변화추이 및 빈곤층의 소득수준별 구성비, 빈곤층의 소득분배 상태, 빈곤층 내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등을 분석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지난 10년간(1996~2006)의 빈곤지표 추이 분석 결과,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센지수 모두 악화되고 있어 빈곤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증가하고 있음.
- 빈곤층 중 소득하위구간의 인구비중 증가, 소득점유율 악화 등 내부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양상이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음.
- 결국 단순한 빈곤율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빈곤의 양상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제4장 빈곤의 공간적 구조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빈곤층의 공간적 구조분석에서는 소지역단위인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빈곤율을 서베이자료와 센서스자료의 결합을 통하여 추정함.
 - 빈곤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빈곤도를 활용하여 가시화하고, 이러한 공간적 구조에서 무엇을 매개로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 분석결과 및 함의

- 빈곤의 공간적 구조는 산간지역의 빈곤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의 빈곤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찰됨.
-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의 빈곤 공간구조가 다소 변화함.
 - 수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 일부 지역, 서해안 지역, 중공업 업체가 자리한 경남 해안지역 일부도 빈곤율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신도시 개발과 도로의 개통 및 산업의 육성·분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인인구비율, 재정자립도가 지역빈곤율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며,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등은 지역빈곤율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임.
- 개인 및 가구뿐 아니라 지역을 빈곤정책의 단위로 고려할 필요가 시사됨.

제5장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자료의 특성상 상세한 범주 구분이 가능한 시점(2003년)에 한정하여 다양한 기준을 동시 적용함으로써 정책표적을 가시화하였으며 시기별로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빈곤층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았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단연 높았음.
 -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가구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속한 비중이 높아 근로지원의 영향을 함께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보면 빈곤층에서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 무배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유배우 가구의 빈곤율도 과거에 비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음.
- 활용한 자료의 표본차이가 한계로 작용하였지만 대체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변화의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제6장 근로빈곤층의 구조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를 정교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빈곤층 중 취업빈곤층의 규모가 작지 않고, 역으로 취업자 중 빈곤층의 규모도 작지 않음.
 - 취업자 중 일용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빈곤발생확률이 높음.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됨.
- 취업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과 노동시장공식화의 필요성이 지적됨.

제7장 빈곤의 역동적 구성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빈곤의 역동적 구조분석에서는 분석의 목적 상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KLIPS)를 활용하였는데 빈곤으로 진입하는 집단과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 그리고 계속 빈곤에 남은 집단의 내부적 구성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개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들은 50.5%로 매우 낮지만 7년 내내 빈곤층에 속했던 개인들은 3.5%에 불

과함. 즉, 빈곤층의 역동성을 매우 활발하여 빈곤위험이 크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가구와 단독가구, 노인가구의 빈곤무경험가구의 비율은 전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았으며, 특히 노인가구의 빈곤무경험 가구 인구비율은 더 낮음. 즉, 취약인구집단의 빈곤경험은 더 넓게 분산되어 있음.
- 노인가구, 단독가구,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높아짐. 특히 장기간에 걸쳐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중은 노인가구에 비하여 여성가구와 단독가구에서 더 높아짐.

제8장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에서는 공적지원의 수혜가 빈곤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빈곤층 내 공적지원 수혜 집단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함.

□ 분석결과 및 함의

- 사회보장수혜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반면 1996년~2006년 기간 동안 빈곤집단 내 사회보장수혜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빈곤의 증가추세에 못 미치고 있음.
- 사회보장소득의 점유율을 보면 2003년 이후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빈곤층의 사회보장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극빈층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짐.

- 빈곤층 내 구성범주별로 비교하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사회보장소득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유배우가구의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빈곤층 중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탈피율이 훨씬 큼.

제9장 결론

□ 정책적 함의

- 첫째, 대빈곤정책의 확충 및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대빈곤정책이 일부 보완되어 왔지만 빈곤의 확대와 심화 수준에 못미쳐 빈곤층 내부의 정책적 사각지대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둘째, 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과거의 취약인구집단·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으로는 최근의 빈곤양상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음. 취약인구집단뿐 아니라 근로능력자, 빈곤선 바로 아래의 밀집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빈곤을 경험한 인구의 규모가 매우 커서 빈곤역동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이 점은 빈곤위험이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빈곤에 대한 사후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정책을 강화하여야 하고, 소득보장과 함께 탈빈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적 접근도 분화·정교화되는 추세에 있음.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사유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근로동기를 갖고 근로할 기회를 찾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에는 노인, 장애인, 질환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동반되어야 근로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의 마련과 제공, 노동시장의 공식화,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강화 등 근로가 탈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넷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강이 병행되어야 함.
- 노인빈곤층은 공적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며 공적이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집단이나 여전히 노인은 빈곤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 인구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이 경향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다섯째,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구 또는 개인단위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빈곤의 공간적 구조는 지역개발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빈곤이 공간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 지역적 기반이 지역주민의 빈곤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빈곤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이 수용되어야 함.
- 이후 빈곤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 빈곤연구에서 도외시 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빈곤연구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빈곤정책의 효과성은 빈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축적으로부터 뒷받침될 것임.
- 빈곤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함. 빈곤의 제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것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빈곤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빈곤정책이다.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지원이 복지정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현금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주거·근로 등 현물지원서비스도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빈곤층을 표적집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확충 및 보완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당분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기초는 유지될 전망이며 따라서 빈곤층의 구조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공공부조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등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최근 빈곤연구의 동향을 보면¹⁾ 대체로 빈곤규모의 변화에 주목하거나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또는 빈곤인구 중 특정집단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빈곤정책의 설계 및 내용평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빈곤층의 전반적 구조를 다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빈곤연구 중 이론적 기여가 컸던 연구로는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거론할 수 있는데, 원인규명은 정책의 주요 고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집중 분석하는 구조 분석이 매개 작업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빈곤격차비율이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면 빈곤층 내부에서는 각 소득층별 빈곤층의 구성비나 소득점유 수준도 일정한 변화를 겪었는지, 변

주 1) 빈곤연구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화가 있었다면 그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빈곤문제의 또 다른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나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 과연 빈곤층에서 노인이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정책 대상의 표적화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제반 요인들의 영향을 넘어서 빈곤정책의 구상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빈곤문제와 관련된 제 요인들의 영향을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통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빈곤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빈곤의 구조분석은 빈곤층 내부의 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요인분석에서 구조분석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빈곤층의 구조를, 제 빈곤 관련 개념 속에 내포된 원리를 반영하는 측면, 인구학적 측면, 근로활동의 측면, 역동적 측면, 그리고 빈곤정책의 수혜측면과 같이 빈곤연구의 주 초점이 되었던 주제별로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공간·지리적 측면에서 빈곤을 분석함으로써 구조 분석의 측면을 좀 더 확장하였다.

구조분석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각 요인들의 현재화된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정책대상의 규모를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의 빈곤연구 중 국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빈곤구조, 또는 빈곤층 구성분석^{주2)}은 대체로 이러한 연구의 기대효과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된다.

빈곤층의 구조 이해가 복지정책의 체계화에 더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전까지 이루어진 빈곤층의 특성 분석 및 이해는 과편화된 것이었으며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 특히 빈곤층 구조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의 축적이 미흡했던 배경에는 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주2) 빈곤의 '구성'과 '구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이 요구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구조는 보다 복잡하게 연결된 제 측면의 관계와 구성을 지칭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각 부분에서 분석의 초점으로 하는 내용이 다소 다르며 일부에서는 빈곤층의 단순 구성이 좀 더 두각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인들의 영향이 고려된 범주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요인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 '구성'보다는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위해 필요한 경험적 자료가 부재한 것도 주원인으로 작용하여왔다. 기존의 통계 자료는 대개 빈곤층의 전면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표본도 일부 집단으로 제한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표본이 전 인구에 비교적 근접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선에서 분석의 시기를 최근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물론 활용하는 각 자료가 갖는 표본 이질성의 문제가 분석 과정 및 해석에서 한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인 빈곤구조 변화의 경향성을 밝히는데 노력을 모았다.

제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과 연구의 구성

빈곤층의 구조분석은 접근하는 측면이 다를지라도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집중 분석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고 빈곤의 특성을 빈곤층과 또 다른 인구집단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빈곤층 내부로 시각을 이동하여 빈곤층의 내부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본론에서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7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의미를 찾기 위한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 빈곤개념에 기초한 <빈곤층의 기본적인 내부 구성 분석>, 소지역별 빈곤율을 추정하고 빈곤도를 그리는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 빈곤층을 인구학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분석>,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 역동성 측면에서 빈곤진입, 탈피 집단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는 <빈곤역동성의 구조분석>, 대빈곤정책이 빈곤층 내부의 어느 집단에게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이 그것이다.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 외의 나머지 영역은 빈곤구조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론 각 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역사를 개괄하고 빈곤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정리한다. 과거 빈곤연구의 동향을 연구의 규모,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도외시 되었던 연구 영역을 찾음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뿐 아니라 이후 빈곤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빈곤 연구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빈곤구조의 분석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층의 기본구조 분석에서는 다양한 빈곤개념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다. 한편 빈곤 관련 개념 및 지표들의 원리에 기초하여 빈곤의 기본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더하였다. 빈곤관련 지표들의 산출에서 고려되는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의 심화가 빈곤층 내부 구성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재 규명되었다.

셋째,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에서는 소지역단위인 우리나라 시·군·구의 빈곤율을 추정하여 빈곤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빈곤도로 가시화하고, 이러한 공간적 구조에서는 어떠한 지역지표들을 매개로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넷째,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분석은 우선 한 시점에서(다양한 인구학적 기준변수가 포함된 자료가 생산된 해) 정책표적화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인구학적 기준을 동시 적용하여 빈곤층의 구성을 가시화하였으며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기여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최근 빈곤층의 변화 중 근로빈민의 증가가 단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의 재 시도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발생에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빈곤의 역동적 구조 분석에서는 빈곤으로 진입하는 층과 빈곤에서 탈출하는 층, 그리고 계속 빈곤에 남은 집단의 구성 상 특성을 취약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밖에 빈곤회수 및 빈곤층으로의 진입·탈피율을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패널자료의 강점을 살려 동일 표본에서 공적지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 분석하여 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

한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을 보완하고 있다.

일곱째,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에서는 공적지원의 수혜가 빈곤층의 어느 집단에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빈곤층 내의 소득층별, 인구학적 특성별 공적지원의 수혜정도가 상이함을 밝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하였다. 분석내용이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 함의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빈곤의 구조를 다룬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본문의 각 장은 빈곤구조의 각기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어 각 장마다 분석 초점에 따른 독립성을 인정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가능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장의 구성에서 통일을 기하였는데 각 장은 분석의 의의와 선행연구의 고찰로 시작하여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본격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소결로 마무리된다. 또한 각 장에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일부의 변용을 피할 수 없지만 분석시기와 분석자료, 빈곤선과 활용하는 소득, 그리고 초점으로 하는 분석의 하위 범주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통일된 내용에서 변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에 분석 자료의 상이성이나 기준의 추가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가장 주된 연구방법은 다양한 원 자료의 분석이다. 빈곤연구동향을 분석한 제 2장 전체와 각 장의 도입부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연구의 동향 분석이나 또는 각 장에서 기술한 선행연구 검토, 분석의 의의, 그리고 분석방법의 선택이 이로써 뒷받침되었다. 원 자료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각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통일을 기한 연구방법을 정리하였다.

가. 빈곤의 측정

일반적으로 빈곤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로 대변되는 정책빈곤선을 활용하거나 상대빈곤선을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준용한다. 이는 계측년도에 나타나는 정책빈곤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곤측정상의 문제를 피하고자 한 것이며 최근의 빈곤연구에서 상대적 빈곤선이 선호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빈곤은 일정 수준의 소득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중위소득 50% ‘미만’에 위치하는 상태를 빈곤하다고 정의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빈곤율에 큰 차이를 결과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필요한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단, 제3장에서는 다양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출된 빈곤 관련 지수들을 비교하고 개략적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50%와 함께 중위소득의 40%, 중위소득의 60%를 병행 사용하였으며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도 활용하였다.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을 사용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총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등 다양한 소득개념 중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상소득을 주로 활용하였다. 비경상적인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면서 경상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통일하기 쉬운 소득범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을 분석하는 장에서는 시장소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소득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가 바로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이다.

소득은 가구 규모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주3)}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가구의 크기를 고려한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주4)}. 1인 균등화된 소득은 전 가구원이 향유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결국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균등화된 중위소득을

주3) 균등화된 가구 경상소득 = Y_i / \sqrt{n} Y_i : 가구 월 경상소득 n : 가구원 수

주4) 각 자료에서 8인 이상의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유는 8인 이상의 가구구성비도 낮고, 반면 일반적으로 8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비 전형적 가구의 존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가진 개인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개인단위의 분석임을 밝힌다.

[그림 1-1] 통계청과 OECD 소득구분 비교

통계청		OECD					LIS	
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 대금 기타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¹⁾	시장 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private cash ²⁾				
	공적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other cash benefit					
						소득세 + 사회보장 부담금	소득세 + 사회보장 부담금	

주: 1) LIS 자료에는 요소소득(Factor income)이라 명명함.

2) 정기적인 사적 이전소득, 즉, 부양금, 양육비, 기타 정기적으로 현금소득 등

자료: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여유진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2005에서 재인용

나. 분석시점과 자료의 선택

분석시점은 크게 4개 시기가 구분될 수 있는 시점으로,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일하였다. 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전(A), 경제위기 이후 빈곤급증 기간(B), 잠시 빈곤이 완화되었던 시기(C), 그리고 빈곤의 재심화시기(D)가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시기이다. 각 시기의 구분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A와 B시기를 가르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와 B와 C를 가르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그리고 C와 D를 가르는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주5)}(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대변할 2006년 가계조사 상반기자료(통계청)를 이용하였다.^{주6)}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 5년 단위로 조사되어 1996년, 2000년까지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그 이후 조사가 중단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2000년 까지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단, 농어가는 제외)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생활지표들을 조사한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가 2000년 조사를 끝으로 중단됨으로써 그 이후 시기의 분석에는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분석에는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2003년)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2006년 1, 2분기)를 이용하여야만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2003년)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동일한 모집단과 표본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비교적 일관성을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가계조사와 5년 단위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합한 조사

주5)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년 실시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 공유된 기초조사자료이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는 이 기초조사와 함께 2차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초조사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6)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중 두 개의 자료는 조사시기와 기준시점이 상이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2001년 조사되었으나 기준 시점은 2000년이며,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는 2004년 조사되었으나 기준 시점은 2003년이다. 이후 각 자료의 시점은 기준시점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전국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및 다른 조사사항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 활용하는 2006년 1, 2분기 가계조사 자료는 1인 가구를 포함^{주7)}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가구 유형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의 시기를 2006년으로 연장, 확대한 것도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자료는 상반기자료로 1,2분기에 국한된 것이어서 소득정보 등의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에 분석이나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로 소득은 계절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 자료가 연간 자료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보다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비임금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반기 자료의 위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행스럽게 2006 상반기 자료의 분석결과, 대체적인 빈곤규모의 변화 추이들에서는 극단적 결과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능한 수준에서 해석에 주의를 하면서 활용하였다.

위의 자료들은 2003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농어업종사자의 상황을 대변하는 농어가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주8)} 농어가 외 1인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 표본 대표치가 가장 높은 자료들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빈곤문제에서는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포함여부가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상기 자료들의 의미는 자못 크다. 하지만 위 자료들은 표본의 대표성은 유사하나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도 아니며 동일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표본추출의 과정도 원리는 유사하나 동일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적인 추세를 규명하는 선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부구성에서는 표본의 차이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표본의 문제는 그 문제를 그대로 제시하고 해석에서 자료의 상이성으

주7) 2006년 이전 가계조사 자료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국 가구를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모집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주8) 표본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에서 농어가를 제외하였다.

로 인한 영향도 함께 짚어주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본론의 각 장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일부 장에서는 기타 다른 자료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대표적으로 빈곤역동성을 다루는 제7 장에서는 패널자료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추적기간이 비교적 긴 한국 노동패널조사자료(KLIPS)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시점도 자료의 특성상 다른 장과 동일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4장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이 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위 4개의 자료 중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가능한 자료는 1996년 자료와 2003년 자료에 불과하여 분석 역시 두 개 시점에 국한되었음을 밝힌다. 제6장의 근로빈곤층 구조분석에서도 일부의 절에서는 기타의 자료를 추가 활용하였다. 취업기간 관련 정보가 필요한 개념정의에 맞는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가 존재하는 전국가계 조사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패널로 연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인 자료의 사용이 연구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으나 목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이를 추가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다. 분석의 하위범주 구성

본론의 각 장은 빈곤층을 구분하는 다양한 하위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되는 분석의 하위범주는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구성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가족구조의 범주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소득구간의 구분이다.

최근 빈곤에서 노인가구, 여성가구, 단독가구는 핵심적인 문제의 영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변화 및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구조를 구분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족구조의 구분은 위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구 규모,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주의 성, 그리고 유배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를 우선 구분하고 다음 노인가구주 가구를 구분한다.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만을 다시 가구주의 유배우 상태를 기준으로 유배우 가구를 분류해낸다(주9).

주9) 2006 가계조사의 경우 배우자가 비동거할지라도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유배우 가구로 분류한다.

이후 무배우 비노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가구주가구로 재분류한다. 이러한 위계적 구분으로 범주화된 가족구조는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유배우가구, 남성가구주가구, 여성가구주가구이다.

단, 자료의 표본이 작아서 위와 같은 가족 구조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의 초점을 유지하되 일부 수정된 가족구조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의 역동성 구조분석에서는 패널자료의 표본수가 작아서 위와 같은 가족구조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독가구, 여성가구주가구, 그리고 노인가구주가구 등으로 빈곤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재 구분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배타성을 갖도록 위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특정 가구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집단에 속하였을 수 있지만 취약한 각 집단의 빈곤역동성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를 분석한 제8장에서는 단독가구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세분하여 공적지원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소득구간의 구분은 빈곤층의 구성을 소득구간별 비중과 그 변화, 그리고 빈곤 정책의 효과분석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제3장 빈곤의 기본적 구조 분석이나 제8장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에서는 빈곤층 내 소득구간이 중요한 하위 분석범주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구간의 범주화는 중위소득 10% 단위 구간을 구분하거나 또는 사례수의 부족으로 ‘~중위소득 20%’, ‘중위소득 20%~중위소득 50% 구간’으로 이분하는 등 분석의 목적이나 범주화된 셀의 사례수에 따라 다소의 변용이 이루어졌다.

제 3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빈곤층의 내부 구조를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대빈곤정책의 설계에서 정책 표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층의 규모나 개별화된 취약인구집단의 특성분석, 그리고 빈곤결정요인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빈곤층의 구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구성이나 방향설정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 정책대상의 상세 규모 또는 정책대상 하위 범주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빈곤규모나 결정요인의 분석만으로는 정책의 전체구성이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연령이 빈곤의 주원인 중 하나라 하더라도 빈곤노인이 전 빈곤층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취약인구집단에 비하여 그 비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각 정책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저마다 강력하게 확충, 또는 개선되기를 요구받지만 빈곤층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변화를 고려할 때에서야 그 우선순위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노인문제가 심각하지만 전 빈곤층에서 근로능력자의 비중이 크고 또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본론의 개별 장들에서는 별도의 효과들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빈곤연구동향 분석에서는 빈곤연구의 사각지대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빈곤연구의 방향설정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빈곤의 공간적 구조 분석에서는 빈곤정책의 단위를 개인과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빈곤의 역동적 구조분석이나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에서는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정책의 방향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빈곤연구의 동향분석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 분석의 의의

본 장에서는 빈곤연구 동향을 연구규모와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의 변화에 영향을 준 환경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빈곤연구가 시작된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빈곤 연구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빈곤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빈곤연구도 다양화, 분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연구가 일정수준으로 축적되고 새로운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빈곤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의 부재로 빈곤연구가 어느 연구주제로 편중되어왔는지, 이후 무엇을 초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숙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빈곤연구의 동향은 단지 빈곤연구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빈곤연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영향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빈곤연구에서 그간 강조된 영역과 반면 사각지대에 놓여진 연구분야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연구방향의 설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내용들을 선택하는 준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동향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빈곤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빈곤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도 특히 일부 측면에 대한 접근이 더욱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선행연구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빈곤연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단 두 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1982년 최일섭·금광역의 연구와 1989년 김영모의 연구이다. 최일섭·금광역(1982)은 빈곤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아직 빈곤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와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로 단순 이분하였다. 특히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60·70년대 주를 형성하던 실태조사 연구를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책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는 생활보호사업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영세민의 도시집중 대책, 직업안정 대책, 가족계획사업 등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약 3편 정도의 조사보고서 중심으로 그 연구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아직 충분하게 분석대상이 될 만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로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의 선택기준이나 분류기준이 매우 애매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김영모(1989)는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주로 해방 후 이루어진 빈곤조사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당시의 연구들이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원인과 대책의 분석은 불충분하며 중복되는 조사가 있어 낭비적이라는 점, 그리고 연구내용에서 급진적 관점으로 함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연구동향 분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이 된 연구의 조사방법상 문제점과 개념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분석한 후 빈곤의 원인과 이론적 관점, 빈민의 욕구와 생활상태, 빈민의 문화와 의식구조, 빈곤대책 등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를 원용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주제가 되어야 할 빈곤연구의 동향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빈곤연구 동향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빈곤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한 연구로 2003년 박능후의 연구가 있다. 박능후 외(2003)의 연구는 탈빈곤정책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빈곤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빈곤계층 변화와 빈곤연구의 변화가 갖는 관계,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빈곤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과거의 연구들에 비하여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 전 빈곤연구를 검토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연구 사례를 추출하여 경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빈곤연구동향 연구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지만 빈곤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남겨져있다. 그 이유는 첫째, 빈곤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 시기의 빈곤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빈곤연구동향을 고찰하기에 제약이 있었으며 둘째, 빈곤연구를 구분하기 위한 범주의 설정이 협소하여 충분한 동향을 보여주기에 부족하였다. 끝으로 빈곤연구동향 자체를 분석의 초점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빈곤문제 자체에 대한 의견피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동향분석의 의미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빈곤연구동향을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재하다.

빈곤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분야 또는 그 외 연구분야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동향분석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배경숙·권용신(2003)의 「노인복지연구 동향분석」과 서우경(2001)의 「국내외 아동학대 연구동향분석」, 그리고 고성삼·김지범(1996)의 「조세분야 연구동향분석」도 연구동향 분석의 일반적 양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배경숙·권용신(2003)은 노인복지연구를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구주제는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노인문제>, <노인 부양가족문제>, <기타>로 분류하고 하위 구분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노인>, <요보호노인>, <노인부양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였다. 단, 연구들은 위의 범주별로 그 규모를 비교하고 있지만 시기별 분류는 없어 동향의 분석이라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다. 하지만 연구의 범주화에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우경(2001)은 국내외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연구동향만으로 한정된 연구가 아니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하고 있다. 1994년에서 2000년까지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대표학술지 논문 중 아동학대라는 용어와 아동학대 전문 학술지를 병렬로 적용하여 대상 연구를 선택하였으며 분석범주는 연구주제

와 연구방법으로 대분류한 후 연구주제는 6개로 구분하고 분류가 포괄적이도록 하였다. 연구주제로는 원인, 실태, 대책 등의 상위범주 속에 하위범주를 두어 구성하였는데, ①개념 및 유형의 연구동향, ②아동학대 연구방법의 동향, ③아동학대 발달영향의 연구동향, ④아동학대 원인의 연구동향, ⑤아동학대 실태의 연구동향, ⑥아동학대 대책의 연구동향이 그 범주구분의 결과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방법>, <양적 방법>, <문헌연구>로 구분하였고 국내의 연구에서 면접조사 등으로 연구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며 협소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고성삼·김지범(1996)은 다소 생소한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1971-96년까지의 대표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초록과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중복의 경우 비중이 높은 쪽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분석 범주는 크게 연구분야와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분야는 재정학적 연구, 법률학적 연구, 회계학적 연구로 분류하고 다시 하위분류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술적 방법, 분석적 방법, 경험적 방법, 행위적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동향분석에서는 연구 분야와 연구방법의 교차분석도 실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보면 연구의 주제 분류는 자의적인 선택을 벗어나기 힘든 듯 하다. 가능한 선에서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분하되 연구의 동향을 비교적 잘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유의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비교적 모든 연구에서 분석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순하지만 배타성과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분으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가장 빈번하게 범주구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 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내용

빈곤연구의 동향분석에서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빈곤연구의 전체적인 규모변화에 두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빈곤연구가 연구총량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

고 있는지, 그 변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둘째로는 빈곤연구의 주제 및 방법을 중심으로 빈곤연구를 범주화하고 범주별 연구의 규모변화가 어떠한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연구를 구분하는 범주는 대분류로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구분하였으며 대분류 내 중분류로는 연구주제의 세분화, 그리고 연구방법의 내부구분으로 대분류를 재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빈곤연구 영역 중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기본적인 주제가 되었던 영역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주제의 중분류는 <빈곤의 개념>, <빈곤의 규모>, <빈곤과 지역>, <빈곤과 인구학적 특성>, <빈곤원인>, <빈곤역동성>, <대빈곤정책>으로 구성되며 중분류 아래로 다시 소분류를 시도하였다.

소분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기준과 계측방식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상대적, 정책적 빈곤과, 박탈, 배제 등 확대된 개념으로 소분류하였고, 빈곤의 규모는 시점을 중심으로 특정 시점의 빈곤규모 연구와, 빈곤규모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소분류 하고 국내 빈곤규모에 한정된 연구와 국제비교를 시도한 연구로 소분류를 더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근로빈곤층 등 특정 인구집단의 빈곤실태를 초점으로 한 연구와 빈곤층의 전 구성을 분석한 연구로 소분류하였다. 빈곤과 지역은 농촌, 도시과 같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연구와 전국의 빈곤분포, 그리고 일부 지역에 한정된 빈곤비교 등으로 소분류하였으며 빈곤원인은 정태적 원인분석과 동태적 원인분석으로 이분하였고 빈곤역동성을 분석한 연구는 홀로 중분류에서 재분류를 멈추었다. 대빈곤정책은 정책성과분석, 정책의 내용분석, 정책의 설계로 소분류하였다.

빈곤 연구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으로 단순하게 이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별도로 범주화되었던 문헌연구는 위의 구분 하에서 포괄이 가능하며 오히려 좀 더 분명한 범주화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양적방법의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와 1차 원자료 분석 또는 2차 자료 분석으로 빈곤에 대한 수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며, 질적방법의 연구는 참여관찰법, 문헌연구 등 양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포괄하도록 분류되었다.

각 범주로 연구를 구분함에 있어 아래의 규칙을 따랐다. 우선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라는 대분류에서는 대분류된 연구의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한 연구는 연구방법에서 구분되고 또 연구주제에서도 범주화된다.

〈표 2-1〉 빈곤연구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주제	빈곤개념		절대빈곤
			상대빈곤
			정책빈곤
			박탈
			배제
	빈곤규모	시점비교	특정시점 빈곤규모 빈곤규모 변화
		국내외빈곤	국내 빈곤규모 해외 빈곤규모
	빈곤과 인구학적 특성		특정 인구집단 빈곤 빈곤층의 인구구성
	빈곤과 지역		도시빈곤
			농촌빈곤
			전국의 빈곤 분포
			일부 지역 선택 비교
	빈곤 역동성		빈곤역동성
빈곤원인		정태적 원인	
		동태적 원인	
대빈곤정책		정책설계	
		정책내용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	분석방법		양적분석
			질적분석

연구주제에서 중분류도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동일 연구가 다른 범주의 중분류 범주에 동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연구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재 개념화하고 배제된 집단의 규모를 외국과 비교분석

하였다면 <빈곤개념>과 <빈곤규모>에서 동시 가산된다. 즉, 중범위 범주 연구의 합이 전 연구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클 수 있다. 결국 중분류까지는 포괄성을 갖추되 배타성을 갖추지는 않도록 범주화되었다. 그러나 중분류 내 소분류는 배타성을 갖도록 범주화하였다. 즉, 소분류된 범주들에 포함된 연구의 합은 상위 중분류로 범주화된 연구의 수와 같다.

빈곤연구를 범주화한 후 빈곤연구가 집중되는 영역과 희박한 영역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후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편 빈곤연구의 동향은 빈곤연구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여타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경기변동이나 빈곤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 연구자의 인적요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생산, 그리고 빈곤을 둘러싼 정치적·정책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빈곤연구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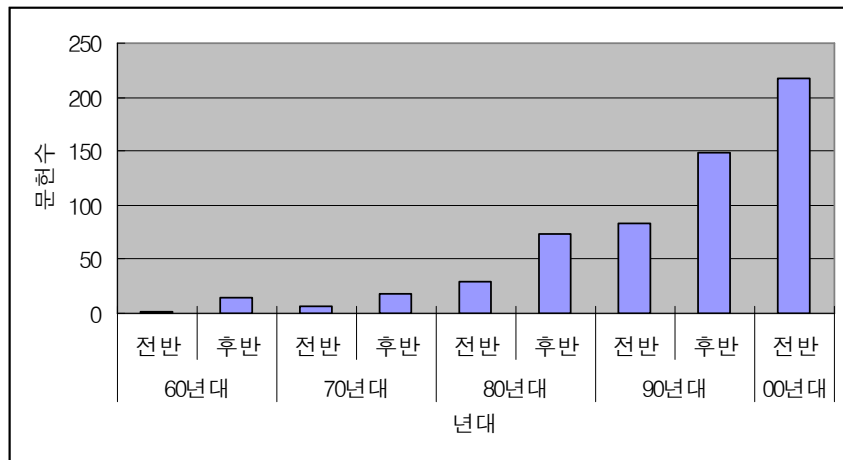
분석대상이 되는 빈곤연구는 1960년대부터 2006년 상반기(1~6월)까지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DBPIA,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의 학술정보를 검색하였으며, 4개의 학술정보 검색을 통해 검색되지 않았지만 빈곤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헌은 분석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검색에 활용한 주제는 ‘빈곤’, ‘가난’, ‘저소득’, ‘불평등’, ‘재분배’, ‘서민’, ‘빈민’이었으며 이렇게 수집된 연구는 거의 600편에 이른다. 연구는 제목에 사용된 개념 및 초록을 우선 참조하되 일부는 본문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하였으며 연구가 발간된 시점을 함께 기록하였다. 하나의 연구가 두 가지 이상의 소분류된 범주에 해당될 경우 비중이 높은 쪽으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논문을 담은 학회발표지 또는 종합보고서는 각 해당범주에 중복 처리하였다. 작성된 연구의 분류자료는 빈도분석과 비중분석, 그리고 환경 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빈곤연구 외 각종 2차 자료도 활용하는데 연구 동향을 둘러싼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제 3 절 빈곤연구의 총량 변화

빈곤연구의 총량을 보면 빈곤연구가 1980년대 좀 더 정확하게는 198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빈곤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인데 1960년대 총 16편, 1970년대 총 24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연구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103편, 1990년대 233편, 그리고 2000년대 전반은 218편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8년을 시작으로 빈곤연구가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는 빈곤연구의 총량이 과거 2-30년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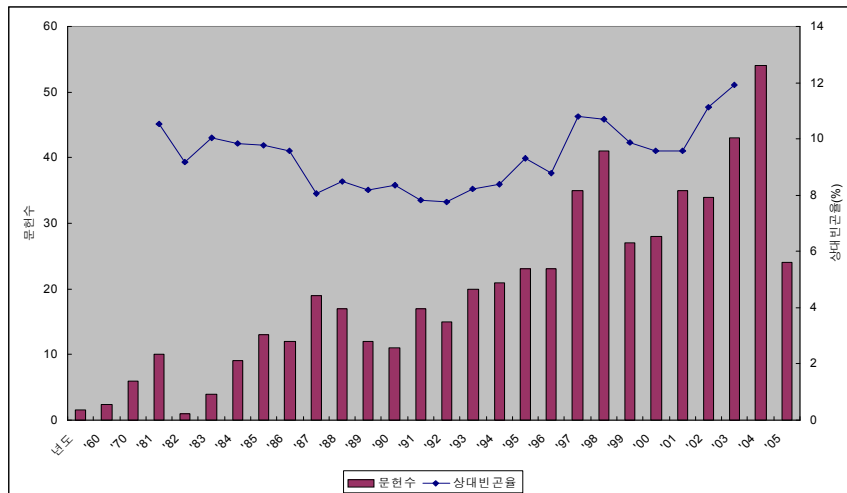
[그림 2-1] 과거 10년 단위 빈곤연구 총량 변화



빈곤연구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경기변동이나 빈곤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 둘째는 연구의 기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생산되었는지 또는 인적자원으로서 연구자의 폭이 넓어졌는지에 대한 측면,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거나 또는 빈곤을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정치적, 정책적 작용 등의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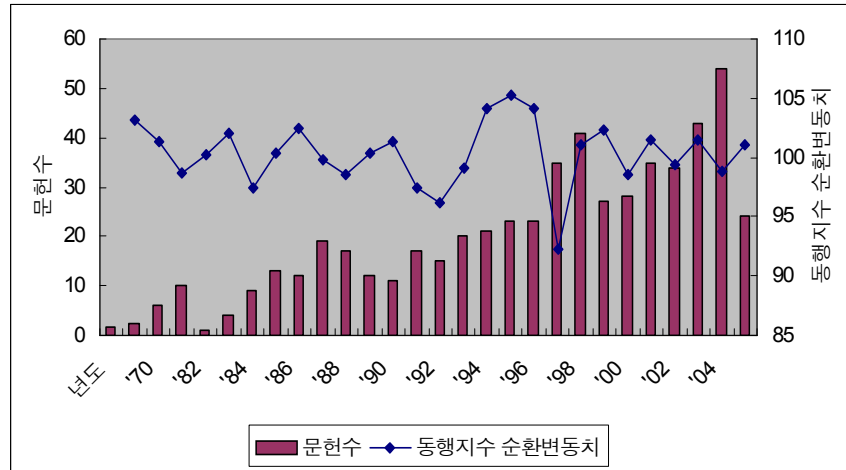
경기변동이나 빈곤율의 변화와 빈곤 연구의 규모를 함께 가시화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주로 빈곤율이 높고, 경기가 저조한 주기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빈곤연구의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변동에서 1975년 6월, 1980년 9월, 1985년 9월, 1989년 7월, 1993년 1월이 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5년 호황을 지나 1997,8년 경제위기를 겪은 뒤 2000년 초반까지 회복세를 보이며 소폭으로 변동한다. 빈곤율이 높은 시기는 경기변동의 저점들과 다소 유사하지만 80년대 초중반, 경제위기시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가 저조하고 빈곤율이 높은 시점의 약 1년 뒤 시기에서부터 빈곤연구는 증가하는데, 단, 1989년 이후 1990년과 90년 초에는 잠시 빈곤연구의 규모가 줄었다. 경기변동의 저점이라고 하지만 8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완화가 빈곤연구의 필요성을 다소 둔화시킨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그림 2-2] 빈곤율(상대빈곤율) 변화와 빈곤연구의 규모변화



자료: 김태완, 「성장·불평등 및 빈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그림 2-3] 경기변동과 빈곤연구의 규모변화



주: 경기변동 값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970년~2006년)를 활용
 자료: 통계청

1960년대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자들의 빈곤에 대한 관심이 빈곤연구를 주도하였고, 주로 보건사회부, 서울시 등 행정기관과 각종 연구소가 대도시 빈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직 빈곤연구를 지원할 배경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폭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빈곤문제를 논하는 것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도 빈곤연구, 특히 민간의 빈곤연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절대빈곤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상대적 빈곤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를 표명하는 정책개발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제5공화국의 국정목표는 복지사회건설이었는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정부의 주요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김중기, 1981). 1981년에는 영세민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 영세민 책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자료 생산의 차이에서 나타난 변화이기도 하다. 1981년부터는 통계국에 의한 표본조사로 영세민 수를 추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행정조사로

영세민 수를 확인하던 1980년까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즉, 80년대 초 빈곤에 대한 행정부의 관심이 다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1980년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시경제이론적 산업개발정책이나 거시경제이론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으며(윤석범, 20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본격적 빈곤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82년부터 통계청의 소득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연구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80년대 전반의 연구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의 인적기반 확대와 정책적인 빈곤표적화 등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1980년대 초의 빈곤연구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빈곤연구 증가는 이 시기에 집중 개최된 국제행사의 영향으로 인해 행사시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도시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2년부터 생산된 소득자료와 1990년대부터 생산되어 활용가능성이 높아진 각종 조사자료가 가세하면서 1990년대 빈곤연구는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는 이후 2-3년간 빈곤연구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잠시 주춤했던 빈곤연구는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폭이 커진다. 이는 감소하던 빈곤율이 다시 증가세로 방향을 바꾸고 ‘신빈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등 빈곤에 대한 당시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부터는 소득을 포함한 패널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빈곤연구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특히 연구방식이나 연구주체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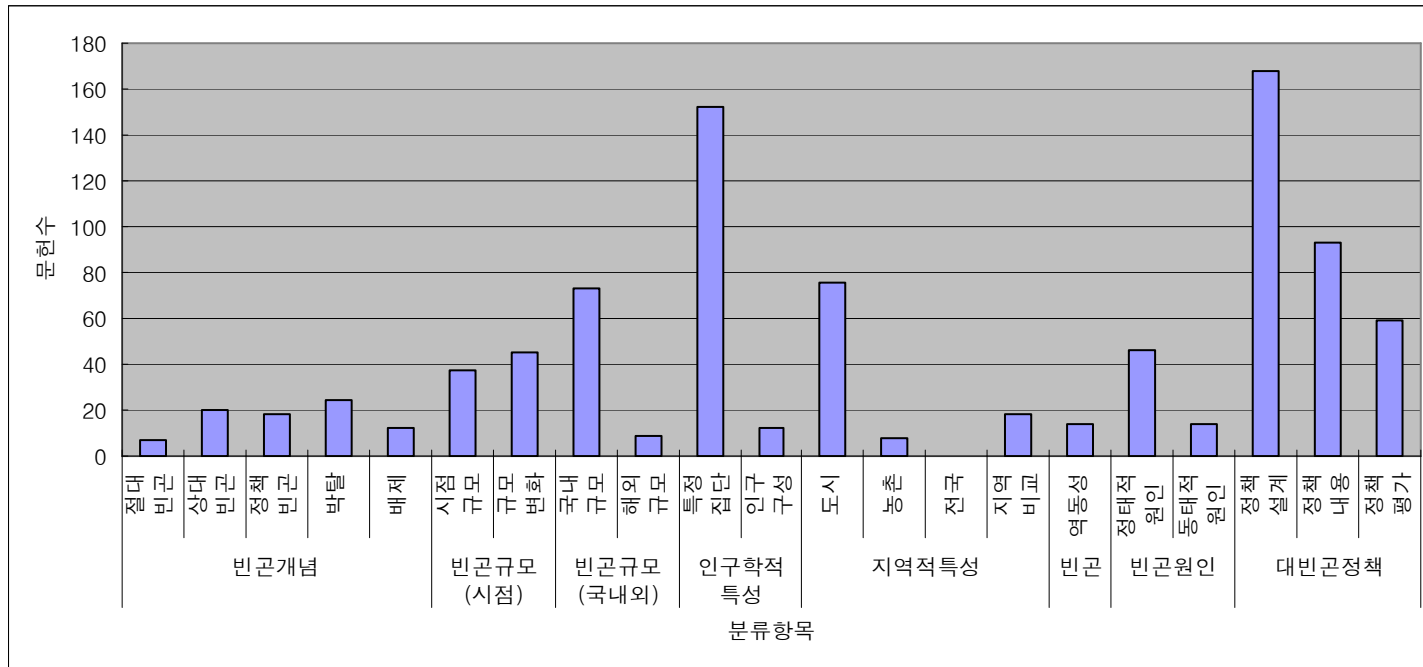
1960년대에는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곤연구가 매우 저조하였다. 1970년대도 빈곤연구를 활성화시킬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분위기와 억압적 정치성격이 빈곤문제를 자유롭게 논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1980년대 증가한 빈곤연구는 주로 정책적·인적요인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석자료 생산과 빈곤율 변화 등 보다 중립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빈곤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약해진 배경도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제 4절 연구주제별 연구규모 변화

중분류 수준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주제는 대빈곤정책이며 다음이 인구학적 특성 분석, 그리고 빈곤규모 분석 중 국내외 빈곤규모 연구 영역의 순이다. 반면 빈곤개념을 다룬 연구나 빈곤의 역동성을 다룬 연구의 비중은 낮다. 소분류에서는 대빈곤정책의 설계를 다룬 연구의 규모가 가장 크고 노인, 여성, 아동과 같은 특정 취약 집단의 빈곤실태를 분석한 연구의 비중도 크다. 정책내용을 다룬 연구, 도시빈곤, 국내 빈곤규모분석, 빈곤의 정책적 원인 연구의 규모도 다음 순으로 컸다. 반면 전국의 빈곤 구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고, 빈곤의 개념을 다룬 소분류 영역 전체와 빈곤층의 인구구성, 지역별 빈곤비교, 농촌빈곤, 빈곤의 동태적 원인분석의 영역은 연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연구주제의 동향도 변화되는데 개략적인 변화경향은 거의 모든 연구영역에서 2000년대 연구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빈곤개념의 연구에서 보면 정책빈곤선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활용과 관련을 갖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최저생계비의 계측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데 윤석범(1983), 장현준(1986), 안창수(1989)의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박탈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1970년대 시작되어 적은 수준이나마 비교적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빈곤개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엿보인다. 특히 박탈이나 배제와 같은 대안적 빈곤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림 2-4] 빈곤연구의 주제별 연구 규모



빈곤규모에 대한 연구 중 시기별 빈곤규모 변화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다. 이는 자료의 축적과 맞물려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보면 시기별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인구학적 특성의 영역 중 특정집단의 빈곤실태 분석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연구규모가 점점증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빈곤층 전체의 인구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규모도 작고 그나마 최근에 몰려있다. 지역별 특성은 도시빈곤이 1970년대 후반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공업화와 이농현상의 결과로 70년대와 80년대 도시빈곤문제가 초점으로 등장한 것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반면 농촌 빈곤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농촌 빈곤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촌빈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농촌의 인구비율이 낮지만 한 사회의 근간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의 빈곤양상과 원인, 대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빈곤의 역동성 분석이나 빈곤의 동태적 원인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연구에 집중 분포한다. 1998년 시작된 패널자료의 생산으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해진 배경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빈곤정책의 영역에서도 정책설계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은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설계, 그리고 동 제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정책평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연구가 저조하다. 2000년 새로 시작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평가는 정책의 설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영역이므로 빈곤정책의 평가연구가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빈곤연구의 주제별 시기별 분류

중분류	소분류	빈곤 개념					빈곤 규모				인구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				빈곤 역동성	빈곤 원인		대빈곤 정책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정책 빈곤	박탈	배제	시점 비교	규모 변화	국내외 규모	특정 집단	인구 구성	도시	농촌	전국	지역 비교	정태적 원인		동태적 원인	정책 설계	정책 내용	정책 평가	
N	594	7	20	18	24	12	37	45	73	9	152	12	76	8	0	18	14	46	14	168	93	59
소분류 비중	%	8.6	24.7	22.2	29.6	14.8	22.6	27.4	44.5	5.5	92.7	7.3	74.5	7.8	0.0	17.6	100	76.7	23.3	52.5	29.1	18.4
중분류 비중	%	13.6					27.6				27.6		17.2				2.4	10.1		53.9		
대분류 비중	%	1.2	3.4	3.0	4.0	2.0	6.2	7.6	12.3	1.5	25.6	2.0	12.8	1.3	0.0	3.0	2.4	7.7	2.4	28.3	15.7	9.9
1960 전반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	0.3	-	-	-	-	-	-	-	-	0.0	-	-	-	-	-	-	-	-	-	-	2.2	-
1960 후반	14	0	0	0	0	0	1	0	1	0	0	0	0	5	0	1	0	3	0	10	2	0
%	2.4	-	-	-	-	-	-	-	1.4	0.0	-	-	-	62.5	-	-	-	6.5	-	6.0	2.2	-
1970 전반	6	0	1	0	1	0	1	0	1	0	0	1	3	0	0	0	0	0	0	3	0	0
%	1.0	-	5.0	-	4.2	-	2.7	-	1.4	-	-	8.3	3.9	-	-	-	-	-	-	1.8	-	-
1970 후반	18	0	2	0	0	0	3	1	4	0	2	0	2	0	0	1	0	2	0	5	1	1
%	3.0	-	10.0	-	0.0	-	8.1	2.2	5.5	0.0	1.3	0.0	2.6	0.0	-	5.6	-	4.3	-	3.0	1.1	1.7
1980 전반	30	1	2	0	2	0	4	0	4	0	5	0	4	0	0	1	0	3	0	4	4	6
%	5.1	14.3	10.0	-	8.3	-	10.8	-	5.5	0.0	3.3	-	5.3	-	-	5.6	-	6.5	-	2.4	4.3	10.2
1980 후반	73	2	1	2	1	0	8	0	8	0	14	0	27	1	0	0	0	7	1	32	8	8
%	12.3	28.6	5.0	11.1	4.2	-	21.6	-	11.0	0.0	9.2	-	35.5	12.5	-	-	-	15.2	7.1	19.0	8.6	13.6
1990 전반	84	2	2	3	1	0	5	5	10	0	9	0	19	2	0	3	0	7	1	17	12	10
%	14.1	28.6	10.0	16.7	4.2	-	13.5	11.1	13.7	0.0	5.9	-	25.0	25.0	-	16.7	-	15.2	7.1	10.1	12.9	16.9
1990 후반	149	2	0	3	4	1	5	6	8	3	21	0	7	0	0	1	3	6	0	17	16	4
%	25.1	28.6	-	16.7	16.7	8.3	13.5	13.3	11.0	33.3	13.8	-	9.2	-	-	5.6	21.4	13.0	-	10.1	17.2	6.8
2000 전반 ¹⁾	218	0	12	10	15	11	10	33	37	6	101	11	14	0	0	11	11	18	12	80	48	30
%	36.7	-	60.0	55.6	62.5	91.7	27.0	73.3	50.7	66.7	66.4	91.7	18.4	-	-	61.1	78.6	39.1	85.7	47.6	51.6	50.8

주: 1) 2000년대 전반은 2006년 상반기 자료까지 포함한 수치임.

제 5 절 연구방법의 변화

연구방법의 변화를 보면 양적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전 연구의 약 85%에 이르고 있다. 빈곤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진하고, 특히 80년대 전반 이전에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양적 연구를 활용한 연구도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는데 앞서 전체 연구총량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빈곤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축적이 높았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보이며 양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형성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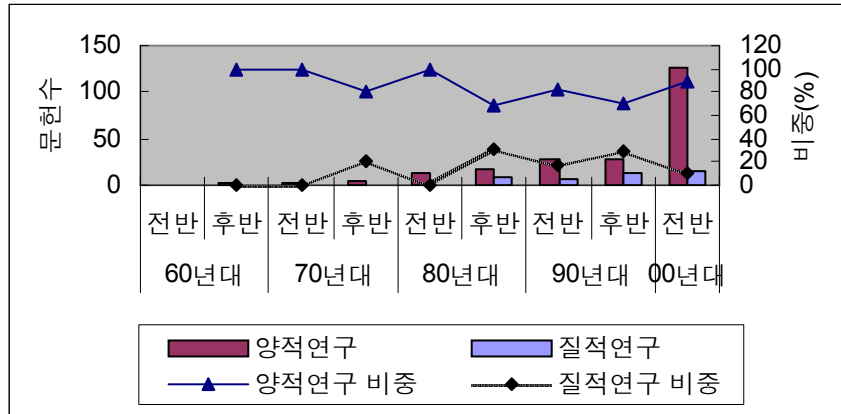
〈표 2-3〉 과거 10년간 연구방법 변화

	분석방법	
	양적	질적
N(%)	220(84.3)	41(15.7)
1960년대 전반	-	-
1960년대 후반	2(0.9)	-
1970년대 전반	2(0.9)	-
1970년대 후반	4(1.8)	1(2.4)
1980년대 전반	12(5.5)	-
1980년대 후반	18(8.2)	8(19.5)
1990년대 전반	28(12.7)	6(14.6)
1990년대 후반	28(12.7)	12(29.3)
2000년대 전반 ¹⁾	126(57.3)	14(34.1)

주: 1) 2000년대 전반은 2006년 상반기 자료까지 포함한 수치임.

질적 연구방법은 빈곤양상의 일상적 진행과 형태, 그리고 이로 인한 파급물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빈곤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등 외국의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사회에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빈곤연구의 과제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양적연구만으로는 유사 주제의 반복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양적 분석의 새로운 단서는 보다 창의적인 질적방법으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과거 10년간 연구방법 변화



제 6 절 분석결과의 함의

본 절은 1960년대 이후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빈곤연구의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990년대 들어서야 빈곤연구가 본격화되었다는 점, 그렇지만 연구가 아직 특정 영역으로 함몰되어 일부 연구주체들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빈곤개념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기반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당장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빈곤정책에 대한 고민이 빈곤문제를 둘러싼 보다 본질적인 철학이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압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개념과 기본 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빈곤연구 중 빈곤의 지역적 구성, 인구학적 구성, 그리고 빈곤의 동태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패널은 8년 정도의 조사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빈곤에 대한 동태적 연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존의 빈곤동태분석이 절대적인 연구 규모에

서도 작지만 빈곤의 이동 규모와 요인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동태적 분석의 다양화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빈곤연구에서 거시와 미시적 접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빈곤내부의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내부구성 분석과 질적방법을 활용한 문화 및 경로분석 등이 강화되고, 한편 빈곤의 전국적 분포 및 빈곤의 통시적 분석과 국가 간 비교 등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연구는 앞서 총량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율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생산,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자료의 생산과 연구자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은 점차 호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어 연구 인프라는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적·정책적 분위기도 과거보다는 연구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결국 이후 빈곤연구는 경제상황과 빈곤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개연성이 있다. 빈곤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영역에서 선도적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 3장 빈곤개념과 빈곤층의 기본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기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빈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1998년 이후 여러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빈곤관련 연구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았고, 핵심적인 빈곤대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즉, 외형적으로는 빈곤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담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빈곤대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빈곤관련 지표들이 빈곤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빈곤율은 빈곤현상을 이해하는데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의 일면으로 인식이 함몰될 위험을 유발한다. 발표되는 빈곤율 조차도 사용 자료의 차이, 빈곤선의 차이,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능후, 2004). 대표적인 경우가 1998년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빈곤율의 경우이다. 류정순의 연구(2000)에서는 23.5%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석재은·김태완의 연구(2003)에서는 6.35%로 추정하고 있어 그 차이가 무려 3.7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빈곤대책 수립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분석 자료가 전국대표치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빈곤 연구들(유경준, 2003; 류정순, 2000; 석재은,

2003; 등)은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연간 시계열자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농촌 및 농어가, 1인 가구,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없다는 한계^{주10)}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빈곤실태 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이다. 농촌 및 농어가, 1인 가구, 비근로자 가구는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들이 누락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연구들은 전국 대표성을 갖춘 자료들을 활용하여 빈곤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주11)}. 전국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 추정의 정확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상기 연구들은 빈곤의 심도 및 빈곤변화의 배경 등에 대하여 좀 더 깊이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빈곤의 규모나 빈곤의 심도를 하나의 수치로 상징되는 지표로 표현함으로써 실제 빈곤층 내부에서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가 어떻게 현상화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도록 한다. 즉, 빈곤격차, 센지수 등은 총괄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빈곤층 내부를 살펴보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경향과 비교하여 본 분석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빈곤율이나 기타 빈곤의 심도를 상징하는 각종 빈곤지표들의 원리에 기초하여 빈곤층 내부의 구조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하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2006년 상반기까지 확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 및 각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빈곤층의 내부 구성변화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주10) 2003년부터 비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1인가구의 소득을 밝히고 있다.

주11) 여유진 외(2005), 구인회(2004) 등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제 2 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빈곤지수와 분석의 초점

본 장에서는 빈곤율과 빈곤지표들의 추이를 우선 개괄한다. 이후 빈곤지표들의 원리에 기초한 빈곤내부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지수와 분석의 초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빈곤의 규모를 대변하는 빈곤율은 라운트리(Rowntree, 1901)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빈곤지수로서 Poverty Ratio 혹은 Headcount Ratio라고 부르고 있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수(혹은 가구)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R(y, z) = \frac{q}{n}$$

여기서 HR은 빈곤율¹²⁾, q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올리는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 z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빈곤율은 1996~2006년간의 빈곤율 추이 분석에 활용된다.

빈곤율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로는 미국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the US)에서 개발된 빈곤격차(Poverty Gap)를 들 수 있다. 빈곤격차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즉, 개인(또는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격차는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g_i = z - y_i$)로 정의되며, 총빈곤격차는 빈곤층 전체의 빈곤격차를 합한

주12) 빈곤율은 head-count ratio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인데 만일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돈을 피할 수 있다.

$\sum_{i \in z(y)}^q g_i = \sum_{i=1}^q (z - y_i)$ 가 된다. 그러므로 빈곤격차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격차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표현된다.

$$PGR = \frac{\sum_{i=1}^q (z - y_i)}{z q}$$

여기서 PGR은 빈곤격차비율^{주13)}, z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 그리고 q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빈곤격차비율의 원리를 보면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의 개인 소득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빈곤격차비율이 커진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한 사회의 빈곤격차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면 빈곤선 이하의 개인들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빈곤층 내에서도 낮은 소득구간에 빈곤인구가 집중하게 될수록 빈곤격차비율은 커진다. 본 장에서는 빈곤격차비율을 이용하여 1996~2006년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아울러 빈곤격차비율의 원리를 활용하여 빈곤층을 빈곤선 이하 일정 소득구간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13) 위에서 표현된 PGR을 세계은행(2002, 혹은 Hagenaars, 1987)에서는 소득격차비율(Income Gap Ratio)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빈곤격차와 빈곤격차비율 혹은 소득격차비율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빈곤격차(Poverty Gap)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빈곤의 심도(the Depth of Poverty)를 나타내며, 빈곤선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의 평균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만약 그 거리가 “0”이라면 이 사람은 비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빈곤격차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PG = \frac{1}{n} \sum_{i=1}^q \left[\frac{z - y_i}{z} \right]$$

여기서 n 은 전체사람(혹은 가구) 수, z는 빈곤선, y_i 는 개별 사람(혹은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위식을 다시 표현하면 소득격차비율과 빈곤율과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PG = I^* H \quad \text{여기서, } I = \frac{z - y_i}{z} \text{ 이며, } y_i = \frac{1}{q} \sum_{i=1}^q y_i \text{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센지수는 1976년 센(Sen)이 자신의 논문에서 새로이 제안한 지수로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 = H[I + (1 - I) \times Gp]$$

위 식에서 H는 빈곤율(Headcount Ratio), I는 빈곤격차비율을 의미하며, GP는 저소득층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저소득층의 지니계수이다.

센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센지수는 세 가지 변수 즉, H, I, GP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 가지 변수중 하나의 변수 혹은 그 이상의 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센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 앞서 빈곤격차와 비교한다면 센지수는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센지수가 악화된다면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구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물론 센지수가 빈곤율이나 빈곤격차의 영향만으로도 악화될 수 있으나 센지수의 변화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상태변화로 재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일차적으로 1996~2006년간의 센지수 추이를 분석하고, 아울러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를 빈곤층 내 지니계수를 통하여 설명한 후 빈곤층 내부의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추가 분석하여 빈곤층의 소득분배상태 변화를 내부 구조분석으로 전환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준용하는 중위소득 50%의 OECD, LIS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40%, 60%를 빈곤선으로 병용하였으며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유는 본 장이 최근까지의 빈곤의 추세를 밝히고 빈곤지표에 근거한 빈곤내부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분석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는 지역구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5년^{주14)} 단위로 계측되기 때문에 비계측연도에는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계측연도의 추정치는 계측연도인 1994, 1999, 200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한 값(보간법)을 사용한다. 이는 비계측연도 추정치에도 생활의 질 변화가 포함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위함이다^{주15)}. 이렇게 측정된 연도별 최저생계비는 <표 3-1> 과 같다.

<표 3-1> 1996~2006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¹⁾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1,036,888
1997	265,527	446,970	642,005	798,169	911,151	1,018,323	1,113,850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196,524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5,335
2000	327,549	542,474	746,136	938,536	1,067,116	1,204,142	1,338,353
2001	341,060	564,850	776,913	977,249	1,111,132	1,253,811	1,393,557
2002	355,128	588,149	808,959	1,017,559	1,156,964	1,305,528	1,451,039
2003	369,776	612,409	842,327	1,059,531	1,204,687	1,359,378	1,510,891
2004	385,029	637,670	877,072	1,103,235	1,254,378	1,415,450	1,573,213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주: 1) 정부에서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1인 증가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차액을 가산하고 있음. 여기에 제시된 금액은 최저생계비 연구에서 추정된 값을 적용하였으므로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치와 차이가 있음.

2) 2005년과 2006년은 정부발표 자료 사용

주14)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서 향후에는 3년 단위로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15) 1999년 이래로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1일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계측연도 사이(1994~1999, 1999~2004)의 동일한 증가율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비계측연도 기간에는 주로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고 계측연도에는 생활의 질 변화를 일부 반영한 결과, 비계측연도 동안은 3~3.5% 정도 상승하는 반면 계측연도에는 2~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빈곤율에서 연도별 편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곤율 산출시 8인 이상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8인가구가 비 전형적인 가구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과 최저생계비 계측 시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직접 계측되지 않고 5~6인 가구에서의 차액을 단순 가산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전체 빈곤율 수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타의 기준은 서론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였다. 기준 소득으로는 경상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국제적인 비교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소득의 범주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빈곤 지표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역시 빈곤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의 통일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 결과는 본문 외 부록(부표 참조)으로 처리하였다. 분석자료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 대표성이 높은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가계조사자료(상반기 자료, 통계청)를 이용하였다.

제 3 절 빈곤지표 추이¹⁶⁾

1. 빈곤율(Headcount Ratio: H) 추이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절대빈곤¹⁷⁾과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각각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석기간 동안 우

주16) 본 장의 분석결과 중 각종 빈곤지표들은 여유진 외(2005)의 연구결과와 그 값이 상이하다. 그 차이는 여유진 외(2005)의 연구는 지표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빈곤 분석 시 8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8인 이상 가구를 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주17)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을 절대빈곤이라 명명하였다.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완전한 절대적 의미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최저생계비는 정책빈곤선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을 달리 칭할 적절한 개념을 발견하기 어려워 절대빈곤층이라 하기로 하였다.

리나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표 3-2 참조).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0년의 빈곤율은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먼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의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중위 50% 기준 빈곤율이 1996년 9.0%에서 2000년 13.4%로 급격하게 커졌고 이후로도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6.7%에 이른다. 중위 40%와 중위 60%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사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에서도 경향이 같다(주18). 단, 빈곤선이 낮아질수록 빈곤율의 증가폭이 크다. 빈곤층에서도 더 낮은 소득 집단의 증가가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본 전반적인 빈곤추이는 전기보다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빈곤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1	4.6	9.0	14.7
2000	8.2	8.2	13.4	19.4
2003	10.4	10.7	16.0	21.8
2006 ¹⁾	11.6	11.9	16.7	22.4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주18) 경상소득기준과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부표 1 참조). 절대빈곤율의 경우 소득개념의 차이 때문에 가처분 소득기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양자의 차이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의 효과이다. 하지만 상대빈곤의 경우 1996년 중위소득 40%기준 외에는 경상소득기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분배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은 절대빈곤율을 높이지만, 상대빈곤율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추이

빈곤의 심도를 살펴볼 수 있는 빈곤격차비율을 적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 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빈곤의 심도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즉,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절대 빈곤격차비율은 1996년 27.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45.0%로 높아졌으며, 중위 50%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빈곤격차비율은 1996년 27.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43.3%로 악화되고 있다. 중위 40%와 중위 60%에서도 경향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 양상이 앞서 살펴본 바처럼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중위소득 40%에 비하여 중위소득 60%로 갈수록, 즉, 상대 빈곤선을 상향조정할수록 빈곤격차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빈곤선이 상향 이동하면서 진입하는 집단의 소득수준이 빈곤선과 차이가 작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표 3-3〉 빈곤격차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27.3	30.4	27.1	26.9
2000	30.4	32.8	32.0	32.3
2003	35.4	37.4	36.8	36.8
2006 ¹⁾	45.0	45.6	43.3	41.5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3. 센지수(Sen index) 추이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과 빈곤심도를 의미하는 빈곤격차비율 비율, 그리고 빈곤층 내부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빈곤지수인 센지수의 분석결과에서도 빈곤율 및 빈곤격차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의 센지수 변화 추이는, 정책빈곤, 상대빈곤 기준 모두에서 급격한 악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3-4 참조).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 센지수의 경우 1996년 0.0131로 매우 낮았던 센지수가 2006년에는 0.0706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위소득기준 상대 센지수의 경우 1996년에 0.0198(중위 40%), 0.0355(중위 50%), 0.0569(중위 60%)에서 2006년에는 0.0766, 0.1011, 0.1300로 2배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지수의 변화를 보면 빈곤율이나 빈곤격차비율의 변화로부터 센지수의 변화분이 모두 설명될 수 있지만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상태의 악화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갖는다.

〈표 3-4〉 센지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0.0131	0.0198	0.0355	0.0569
2000	0.0372	0.0381	0.0606	0.0880
2003	0.0565	0.0591	0.0849	0.1148
2006 ¹⁾	0.0706	0.0766	0.1011	0.13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제 4절 빈곤 심도에 따른 빈곤층의 구성

앞에서 살펴본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로서 직관적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빈곤층 내부를 살펴보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절 이 후에는 빈곤층 내부를 앞의 각 지표들의 원리에 기초한 구성으로 전환 분석한다.

1. 절대빈곤층의 심도별 구성

빈곤격차비율에 원리로 반영된 빈곤층의 내부 소득분위별 인구분포를 분석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을 10등분하여 누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표 3-5> 와 같다. 최저생계비 10% 미만 비율은 1996년 전인구의 0.1%에서 2000년 0.2%, 2003년 0.9%, 2006년 1.9%로 증가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50%미만 누적 비율은 1996년 전인구의 0.5%에서 2000년 1.7%, 2003년 2.6%, 2006년 4.5%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절대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층 중 극빈층에 속한 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의 10% 미만 비율은 1996년 2.2%에서 2000년 2.4%, 2003년 8.6%, 2006년 16.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50%미만 비율 역시 1996년 17.6%, 2000년 20.8%, 2003년 24.8%, 2006년 39.1%로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규모가 빈곤층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소득격차 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소득격차 비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빈곤층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3-5〉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

(단위: %)

구분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¹⁾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PL의 10% 미만	2.2	2.2	0.1	2.4	2.4	0.2	8.6	8.6	0.9	16.7	16.7	1.9
PL의 20% 미만	2.0	4.2	0.1	2.5	4.9	0.4	2.1	10.6	1.1	4.0	20.8	2.4
PL의 30% 미만	3.2	7.4	0.2	3.4	8.3	0.7	3.0	13.6	1.4	5.2	25.9	3.0
PL의 40% 미만	2.9	10.3	0.3	4.2	12.5	1.0	5.4	19.0	2.0	5.7	31.7	3.7
PL의 50% 미만	7.2	17.6	0.5	8.3	20.8	1.7	5.8	24.8	2.6	7.5	39.1	4.5
PL의 60% 미만	5.6	23.1	0.7	9.3	30.1	2.5	10.4	35.2	3.6	9.6	48.7	5.6
PL의 70% 미만	12.6	35.8	1.1	11.1	41.3	3.4	11.8	47.0	4.9	9.0	57.7	6.7
PL의 80% 미만	16.1	51.8	1.6	16.6	57.9	4.7	15.3	62.3	6.5	12.4	70.1	8.1
PL의 90% 미만	21.5	73.3	2.3	18.8	76.7	6.3	19.3	81.6	8.5	14.4	84.6	9.8
PL의 100% 미만	26.7	100	3.1	23.3	100	8.2	18.4	100	10.4	15.4	100	11.6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빈곤인구 중 누적비율

3) 전체인구 중 누적비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2. 상대빈곤층의 심도별 구성

상대빈곤층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5%단위로 누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중위소득 10%미만 비율은 1996년 전인구의 0.3%에서 2000년 0.5%, 2003년 1.3%, 2006년 2.8%로 증가하고 있고, 중위소득 30%미만 비율은 1996년 전인구의 2.4%에서 2000년 4.4%, 2003년 6.5%, 2006년 7.9%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빈곤율 증가와 함께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 중 극빈층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60%미만 계층 중에서 중위소득 10% 미만에 속하는 비율은 1996년 1.8%, 2000년 2.8%, 2003년 5.9%, 2006년 7.8%로 악화되고 있다. 중위소득의 30% 미만 비율은 16.2%, 2000년 22.7%, 2003년 29.6%, 2006년 34.2%로 지속적

으로 악화되고 있다.

즉,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규모가 빈곤층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소득격차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소득격차비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상대)빈곤층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3-6〉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단위: %)

구분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¹⁾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중위 5% 미만	0.7	0.7	0.1	1.4	1.4	0.3	4.3	4.3	0.9	4.8	4.8	2.1
중위 10% 미만	1.1	1.8	0.3	1.4	2.8	0.5	1.6	5.9	1.3	3.0	7.8	2.8
중위 15% 미만	1.7	3.5	0.5	2.9	5.7	1.1	2.5	8.4	1.8	4.4	12.2	3.7
중위 20% 미만	2.8	6.4	0.9	4.4	10.1	2.0	5.0	13.4	2.9	5.9	18.1	4.8
중위 25% 미만	3.7	10.1	1.5	5.6	15.7	3.1	6.8	20.3	4.4	7.3	25.4	6.3
중위 30% 미만	6.1	16.2	2.4	7.0	22.7	4.4	9.4	29.6	6.5	8.8	34.2	7.9
중위 35% 미만	6.8	22.9	3.4	8.7	31.4	6.1	10.2	39.8	8.7	9.4	43.6	9.6
중위 40% 미만	8.4	31.3	4.6	10.6	42.0	8.2	9.3	49.1	10.7	11.0	54.6	11.9
중위 45% 미만	13.3	44.7	6.5	12.6	54.6	10.6	11.6	60.8	13.3	11.7	66.2	14.2
중위 50% 미만	16.6	61.2	9.0	14.2	68.8	13.4	12.2	73.0	16.0	11.7	78.0	16.7
중위 55% 미만	16.3	77.5	11.4	14.6	83.4	16.2	13.3	86.3	18.8	10.7	88.7	19.8
중위 60% 미만	22.5	100.0	14.7	16.6	100.0	19.4	13.7	100.0	21.8	11.3	100.0	22.4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빈곤인구 중 누적비율

3) 전체인구 중 누적비율

자료: 통계청, 가구조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제 5 절 소득분배와 빈곤층의 구성

1. 분배상태 변화율

지니계수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원을 향유할 때 0, 한 사람이 모든 자원을 독점할 때 1의 값을 지닌다. 전계층과 빈곤층의 연도별 지니계수는 <표 3-7> 과 같다. 지니계수의 전반적인 추세는 전계층이나 빈곤층이나 모두 악화되고 있다. 즉, 분석기간 동안 경상소득 기준 전계층의 지니계수는 1996년 0.2782에서 2006년 0.3364로, 경상소득기준 절대 빈곤층의 지니계수는 1996년 0.2072에서 2006년 0.2928로 악화되었다.

여기서 빈곤층의 지니계수가 전계층보다 낮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빈곤층 지니계수는 소득이 일정정도 이하의 빈곤층만 대상으로 한 분배상태로 소득의 편차가 매우 적어 지니계수도 낮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7> 을 바탕으로 비교 정태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1996~2006년간 경상소득기준 전계층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20.9% $[(0.3364-0.2782) \div 0.2782 \times 100]$ 이나, 동 기간동안 경상소득기준 절대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41.3%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가 전계층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전계층과 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구분	전계층	빈곤층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중위 50%기준)
1996	0.2782	0.2072	0.1687
2000	0.3307	0.2149	0.1950
2003	0.3449	0.2962	0.2602
2006 ¹⁾	0.3364	0.2928	0.3063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2. 빈곤층 분위별 소득 점유율

여기서는 빈곤층 내부의 분위별 점유율을 바탕으로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절대빈곤층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소득 점유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표 3-8〉과 같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2.6%, 2000년 2.5%, 2003년 0.5%, 2006년 0.0%이고,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4.9%, 2000년 34.3%, 2003년 32.2%, 2006년 23.8%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19)}. 반면 빈곤층 중에서도 상위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상위 10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4.9%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9.0%에 이른다.

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빈곤층에서도 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소득격차비율이 악화되고 있고, 빈곤층 내부 최하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빈곤층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19)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1996년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3%에서 2000년 2.6% 증가하다가 2003년 0.3%, 2006년 0.0%로 악화되고 있다.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3.1%에서 2000년 34.0% 증가하다가, 2003년 31.6%, 2006년 23.9%로 악화되고 있다. 경상소득과는 달리 가처분소득의 경우 2000년에 일시적인 개선을 보이는 이유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인 6분위 이상의 계층의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정밀분석이 요구된다(부표 7 참조).

〈표 3-8〉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하위 1/10분위	2.6	2.6	2.5	2.5	0.5	0.5	0.0	0.0
하위 2/10분위	6.2	8.8	5.7	8.2	4.8	5.3	1.2	1.2
하위 3/10분위	7.2	16.0	7.4	15.6	7.6	12.9	4.9	6.1
하위 4/10분위	8.9	24.9	8.7	24.3	9.0	21.9	7.8	13.9
하위 5/10분위	10.0	34.9	10.0	34.3	10.3	32.2	9.9	23.8
하위 6/10분위	11.2	46.1	11.0	45.3	11.1	43.3	11.8	35.6
하위 7/10분위	12.1	58.2	11.5	56.8	12.2	55.5	13.3	48.9
하위 8/10분위	11.8	70.0	13.6	70.4	13.5	69.0	15.3	64.2
하위 9/10분위	15.2	85.2	14.1	84.5	14.7	83.7	16.8	81.0
하위 10/10분위	14.9	100.0	15.4	100.0	16.4	100.0	19.0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다음으로 상대빈곤층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소득점유율을 연도별 비교하면 〈표 3-9〉와 같다. 경상소득 기준 최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3.4%, 2000년 3.0%, 2003년 1.5%, 2006년 0.4%로 악화되고 있다. 하위 5분위 이하의 누적 소득 점유율은 1996년 37.1%, 2000년 35.8%, 2003년 33.4%, 2006년 27.5%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 상위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3.5%에서 16.9%로 증가하고 있다. 상대빈곤층에서도 내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9〉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하위 1/10분위	3.4	3.4	3.0	3.0	1.5	1.5	0.4	0.4
하위 2/10분위	6.7	10.1	5.9	8.9	5.6	7.1	2.8	3.2
하위 3/10분위	7.6	17.7	7.6	16.5	7.5	14.6	6.0	9.2
하위 4/10분위	9.5	27.2	9.0	25.5	8.8	23.4	8.2	17.4
하위 5/10분위	9.9	37.1	10.3	35.8	10.0	33.4	10.1	27.5
하위 6/10분위	11.5	48.6	11.2	47.0	11.1	44.5	11.9	39.4
하위 7/10분위	12.0	60.6	12.1	59.1	11.7	56.2	13.1	52.5
하위 8/10분위	12.8	73.4	12.9	70.2	14.1	70.3	14.6	67.1
하위 9/10분위	13.1	86.5	13.6	85.6	15.1	85.4	15.9	83.0
하위 10/10분위	13.6	100.0	14.3	100.0	14.6	100.0	16.9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제 6 절 분석결과의 함의

지난 10년간(1996~2006)의 빈곤지표 추이 분석 결과,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센지수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양상이 앞서 살펴본 바처럼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빈곤의 양상이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센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빈곤 심도별 빈곤층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극빈층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빈곤층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빈곤격차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빈곤격차비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빈곤층 내부에

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전 계층과 빈곤층 모두 악화되는 추세이다. 연도별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가 전계층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내부의 분위별 점유율을 바탕으로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빈곤층 중 상층의 소득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빈곤층 내부에서도 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층에서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빈곤선 바로 밑에 분포하면서 빈곤층의 소득점유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단순한 빈곤율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빈곤의 양상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빈곤층에 대한 정책도 빈곤층의 구성차이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빈곤선 바로 밑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지원 등의 정책으로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는 탈빈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빈곤의 공간적 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소지역 빈곤을 추정을 실시하고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지도(poverty map)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무엇인지를 찾아 빈곤지역의 선정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정 지역을 표적화(targeting)하는 대빈곤 프로그램의 근본적 원리는 지리학적으로 지역간에 생활수준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지역에 빈곤이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서부(내륙) 지역, 인도의 동북지역 일부, 방글라데시의 서북 지역, 나이지리아 북부, 가나의 사바나 지방, 브라질의 서북지역, 미국의 남부 깊숙한 지역은 빈곤이 집중된 빈곤 주머니(Pockets of Poverty)의 일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빈곤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개인과 가구의 특성 차이로 설명하는 개인주의적인, 인적자본 모델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역간 그리고 지역사회간 생활수준의 차이는 종종 개인과 가정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생활수준의 차이는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의 결과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는 경제적·인구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내부의 이동 장애 때문에 지속된다.

이런 배경에서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이점을 갖는다. 빈곤의 공간적 분석은 첫째, 생활수준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뒤쳐진 지역이 어디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표적화를 도와준

다. 셋째, 주요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빈곤과 관련된 지역적 요인에 대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Minot and Baulch, 2002: 2).

빈곤의 지리적인 표적화 (geographical targeting)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책이행과 모니터링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표적화(targeting) 방법보다 전형적으로 부정행위가 적고, 더 적은 행정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개인과 가정에 관한 제한된 정보는 다른 유형의 표적화(targeting)를 위한 선택 기준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심한 예산의 제한은 표적없는(nontargeted) 프로그램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다(Bigman and Fofack, 2000: 131).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표적화된(targeted) 프로그램이 정말로 모든 빈민에 도달하고 비빈민들에게 누수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Bigman and Fofack, 2000). 대안적이고 간접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표적화(targeted)된 프로그램은 또한 높은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표적 인구집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지리적 표적화(geographical targeting)의 도구들은 표적 인구집단에 대한 소득의 직접적인 이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인구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들을 가능하게 한다(Bigman and Fofack, 2000). 빈곤주머니는 다른 여러 이유들에 의해 지속된다(Bigman and Fofack, 2000)는 점이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① 낮은 품질의 공공 서비스, 특히 저 품질의 교육과 건강 서비스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소득능력의 축적을 더욱 방해한다. ② 빈약한 지방 기반시설은 교역을 제한하고 지역 투자와 성장을 지체시킨다(Binswanger, Khandker, and Rosenzweig, 1993; Bigman and Fofack, 2000 재인용). ③ 빈곤한 지역사회의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늦춘다(Foster and Rosenzweig 1993; Bigman and Fofack, 2000 재인용). ④ 도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는 교역, 생산의 전문화, 그리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억제한다. ⑤ 생활수준 불일치는 주택의 가격과 품질, 물리적 기반시설의 품질(기본적으로 도로의 품질),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공공 서비스(특히 교육과 건강 서비스)의 품질의 커다란 차이에서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이 빈곤의 순환을 영속시킨다. 빈곤지역의 낮은 주거비용은 지방으로부터의 이주민에

게 매력적이며,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빈곤주머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도로 기반시설의 품질은 - 기본적으로 모든 계절에 가용한 도로 - 한 지역의 개발과 교역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복지 수혜자의 집중은 그 지역을 낙인찍고(stigmatize) 민간 부문의 투자와 교역을 막는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도 위에서 언급한 원인군들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처하여 있으며 가구와 개인의 원인을 넘어서는 지역적 원인이 빈곤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결국 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으나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간적 빈곤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표적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별 빈곤율의 비교라는 방식보다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빈곤의 분포를 살피는, 보다 총체적인 수준에서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도(poverty map)의 활용이 매우 유용한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빈곤도는 개입이나 개발계획의 표적이 되는 빈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GIS에 기초한 빈곤분석은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어진 빈곤 자료를 쉽게 통합하도록 하며 지역을 준거로 하는 정보들을 제한된 공간적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자료는 행정적 경계에서 지형적 경계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작도된 빈곤정보는 분석결과를 비전문가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며 보다 빠르고 손쉽게 빈곤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http://www.povertymap.net/ahatare.cfm>).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빈곤연구의 동향분석에서 알 수 있듯 빈곤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대개 도시빈곤실태, 농촌빈곤실태, 또는 특정 지역의 빈곤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미시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국의 빈곤상태를 보여주는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국을 분석단위로 빈곤과 공간 또는 지역이라는 주제

어를 사용한 연구들도 그 내용은 빈곤정책 수급자의 분포를 분석한 연구가 전부다. 예를 들어 김종기(1981)는 영세민의 지역적 분포와 원인분석²⁰⁾을 연구주체로 하여 과거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의 지역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영세민의 규모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강우원(1989)도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제목으로 두고 있지만 역시 공공부조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의 분포를 분석하고 있으며 앞의 김종기의 연구방식과 유사하다.

단, 배진한(1998)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5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빈곤율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과 비교 검토한 바 있다. 광역 단위에 제한된 분석이고 도시와 농촌의 빈곤가구 특성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만 빈곤의 지역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아마 지역연고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였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역단위로 빈곤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일 것이다.

지역단위로 빈곤율을 추정함에 있어 적절한 지역단위는 보통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되며 대체로 정책의 경계가 되는 행정단위를 활용하게 된다(Hentschel et. al, 1998). 한편 너무 넓은 지역을 단위로 할 경우 표적화의 의미가 약화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 결국 빈곤지역 표적화는 행정적 단위 중 소지역이어야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기본단위는 중앙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최종 단위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나 지출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조사자료 중 소지역의 빈곤율을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데, 설문조사에서는 소득이나 지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지역을 단위로 빈곤율을 추정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고 소지역단위 분석을 염두에 둔 표본추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지역 단위로 분석이 가능한

주20)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에서 파생된 두 편의 연구 중 하나이다.

센서스 자료에는 빈곤을 대변할 변수(proxy)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자료의 한계가 빈곤의 공간적 분석을 가로막아왔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에서는 서베이 자료와 센서스자료를 결합하여 좀 더 분해된 지역단위의 빈곤을 추정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지역추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빈곤 외 다른 영역에서 몇몇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상은·진영(1996)의 소지역 경제활동 인구추정 연구와 최형아(2003)의 소지역 실업률 추정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는 광역 단위로 활용되어왔던 직접추정법과, 추정식을 활용하는 합성추정법,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복합추정법의 정확성 비교를 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은·진영(1996)은 변이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각 추정법의 정확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합성추정법의 변이계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형아(2003)는 복합추정식과 합성추정식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합성추정식을 개량한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구분에 따르면 추정식을 통하여 소지역지표를 생산하는 방식은 합성추정법에 해당하는데 합성추정법의 정확성이 직접추정법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소지역 빈곤추정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빈곤의 지리적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간 생활수준의 차이는 종종 지역 안에서의 생활수준의 차이보다 더 크다(Bigman and Fofack, 2000). 국제기구 중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중심으로 이러한 빈곤의 소지역 추정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개도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교육, 보건, 위생, 식수공급, 교통 등에서 공공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빈곤도(poverty map)를 활용하고 있다(The World Bank, 1998). 이는 지역적으로 표적화된 투자가 많은 빈곤층에게 영향을 주고 침체된 지역에 광범위한 부수효과를 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헨첼(Hentschel et. al, 1998), 미노트(Minot, 1998), 헨첼(Hentschel et. al, 2000), 미노트와 바울쉬(Minot and Baulch, 2002), 시믈러와 네이트(Simler and Nhate, 2005)의 연구 등 많은 연구들이 소지역 빈곤추정 기법들을 개발 사용하여 왔다. 미노트와 바울쉬(Minot and Baulch, 2002)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소지역 단위로 추정하였으며,

헨첼(Hentschel et. al, 1998)은 에쿠아도르의 소지역 빈곤구조를, 시믈러와 네이트(Simler and Nhat, 2005)는 모잠비크의 소지역 빈곤을 추계와 빈곤지역 표적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2000년의 헨첼(Hentschel)과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는 선형 로짓분석(log-linear regression)모델을 활용하여 서베이와 센서스 자료를 결합하면서 소지역 빈곤추정의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이 개발한 소지역 빈곤 추정방식은 이후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왔다.

헨첼(Hentschel et. al, 1998)은 에쿠아도르를 대상으로 빈곤추정을 시도하면서 서베이 자료의 개인균등화된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서베이와 센서스 공통변수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광역 6개 지역을 구분하여 8개의 소비추정 회귀식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센서스 자료에 적용하여 400개 기초지자체(canton)의 빈곤을 추정하였다. 추정의 결과(performance)를 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단위로 서베이에서 직접추정된 빈곤율과 센서스에서 추정된 빈곤율의 변이계수를 비교하면서 추정 빈곤율의 정확성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추정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미노트와 바울쉬(Minot and Baulch, 2002)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지역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모델 구분과 더불어 행정단위(stratum)를 기준으로 지역을 층화한 모델의 구분을 시도하였는데 지역의 규모를 고려한 모델은 각 층의 지역단위에서 표본의 수가 적어져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델적합도 낮고 표준오차도 높아 결국 지역 수준으로 층화된 모델은 사상하고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된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의 모델에서 도출된 빈곤율의 서열은 큰 변화가 없었다. 서베이와 센서스의 공통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가구규모 구성, 인종, 가구주 학력, 배우자학력, 가구주 직업, 주택규모와 유형, 기본서비스 접근성, 내구재 보유 등 17개 변수가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위에서 예시한 외국의 연구들은 분석방식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진다. 첫째, 서베이자료와 센서스자료를 결합하여 소지역 빈곤율 추정을 시도한다. 둘째, 회귀식을 통하여 소비 또는 소득 추정모델을 도출하였다. 셋째, 서베이와 센서스의 공통변수를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투입한다. 대부분 서베이자료는 표본이 제한되

어 있어 전 지역의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센서스 자료로는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소득이나 지출)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서베이에 근거한 주거, 고용, 가구특성(규모나 구성 등), 교육변수 등의 함수로서 소비 또는 소득을 특징화하는 구조모델(small area estimation:SAE)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베이는 Living Standard Measurement Study(LSMS) 또는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DHS)와 같은 표준화된 질문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한다.

다음 이 모델을 센서스자료에 적용하여 가구소득이나 지출과 같이 복지의 대리변수값(proxy)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 또는 소득자료는 센서스 자료에 없어 서베이 자료에서 얻은 구조적 관계를 활용하여 소비 또는 소득변수를 인위적으로 센서스 자료에 더하는 것이다. 구조적 관계의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는 회귀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The World Bank, 1998; Glenn Hyman, Carlos Larrea and Andrew Farrow, 2000). 첫째, 가구단위 서베이에 기본변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센서스시기와 대략 동일 시기로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수준의 센서스자료가 활용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서베이자료와 센서스자료에서 소비 또는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들이 공히 존재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이렇게 추정된 결과는 지원대상가구를 찾는 것과 같은 미시적인 표적화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소득 또는 소비는 추정일 뿐이며 결국 지역단위의 평균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개별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빈곤도를 작도하여 빈곤의 지역적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외국의 연구들은 빈곤도의 활용방식과 빈곤의 공간적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홀튼(Holton, 2004)는 빈곤도(poverty map)의 활용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적 분석도구(spatial analysis tools)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는 1854년 존 스노우(John Snow)의 런던 콜레라 전염경로를 분석한 연구이다. 즉, 역학(疫學)연구에서 활용이 시작되었다. 1889년,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나타내는 농도로 런던을 지도화한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연구에서 빈곤의 지역적 분석 초기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주21}). 최근에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와 발달된 컴퓨터기술

로 다차원적인 지도구성이 가능하여졌으며 빈곤을 가시화하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헤닝거(Henninger)을 중심으로 한 World Resources Institute and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Grid(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 -Arendal^{주22)} 보고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14개국에서 이루어진 사례연구를 인용하여 빈곤도로부터 다양한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빈곤도 활용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빈곤율 추정에서 유의할 것은 추정된 소지역 빈곤율의 절대치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 해석하기 보다는 빈곤의 지역별 비교가 더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추정된 빈곤율 절대 값은 사실 추정식에 따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의 상태(예를 들어 최빈값과 빈곤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직접추정법에 의한 빈곤율 추정이 아닌 상태에서는 전 사회에서 빈곤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가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빈곤율이 더 높거나 낮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빈곤도를 작성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로, 빈곤율의 일정구간 내 사례지역수 균등화로 지도상농도를 달리하는 방식과 도출된 지역 빈곤율의 분포를 기초로 하여 자연적인 분절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구분하는 방식(natural break)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절대치를 빈곤도에 표시하기 보다는 서열이나 동질적인 구간에 속한 지역의 구분을 기초로 하므로 절대적인 빈곤율의 값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 점은 한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지역빈곤상태를 비교하거나 다른 자료로 작성된 국가 간의 빈곤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표준화한 상태를 도식화함으로써 유리하다.

주21) 1886~1903년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Life and Labour in London”에서 가장 특징적인 산물이 “Maps Descriptive of London Poverty”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Http://booth.lse.ac.uk/static/a/4.html](http://booth.lse.ac.uk/static/a/4.html)). 그는 런던 거주자의 소득과 계층을 나타내는 색을 활용하였는데 ‘검은색: 가장 저소득계층’, ‘회색: 매우 가난한 층’, ‘밝은 파랑색: 가난한 층’, ‘자주색: 혼합된 계층’, ‘핑크색: 안정된 양호한 소득계층’, ‘붉은색: 중간층’, ‘노란색: 중상층과 상층’. ‘여러색 혼합: 다양한 층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 표시하였다.

주22) Grid(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 - Arendal은 UNEP의 환경관련 조직으로 노르웨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빈곤도의 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http://www.povertymap.net/about.cfm>).

제 2 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내용

본 장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빈곤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둘째, 소지역별로 빈곤율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모델은 빈곤도 작성과정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투입이지만 그 자체로 빈곤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어떻게 그 요인들이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지역 빈곤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빈곤율을 검증하며, 소지역 빈곤율을 기초로 빈곤도를 작성함으로써 빈곤의 지역적 구조를 가시화하였다. 넷째,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다.

2. 자료와 분석방법

소지역단위의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자료와 센서스 자료의 결합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는 서베이자료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센서스 자료로 1995년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자료를 활용한다. 2000년 가구소비조사자료와 2006년 가계조사자료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추정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소득추정회귀식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두 개의 자료에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96년 서베이자료와 1995년 센서스 자료의 결합, 그리고 2003년 서베이 자료와 2000년 센서스자료의 결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0년 센서스,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0년 센서스에 기초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졌지만 1996년 서베이 자료와 1990년 센서스는 시차가 커서 199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센서스의 변수가 추정소득을 결정하게 되므로 가장 근접한 시기의 변수값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기초자치단위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서베이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 요인들의 함수로서 소득을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서베이 자료와 동일한 센서스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구해진 방정식에 투입하여 소지역 빈곤율을 추정한다. 센서스와 서베이자료의 공통변수를 선별하여 이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서베이 자료로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로그회귀식(log-linear regression)을 구하였다.

〈표 4-1〉 서베이와 센서스의 공통된 설명변수

1996년 서베이 - 1995년 센서스	2003년 서베이 - 2000년 센서스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	가구주 성
가구주 학력	가구주 학력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의 배우자 여부	가구의 결혼상태
가구원 중 취업자수의 비율	취업자의 비중
가구원 중 노인의 비율	가구원 중 노인의 비율
가구원 중 아동의 비율	가구원 중 아동의 비율
주거 거처유형	주거 거처유형
주거 점유유형	주거 점유유형
방의 수	방의 수
가구의 종사사업	난방시설
	휴대용 전화기 보유 여부
	개인용 컴퓨터 보유여부
	자동차 보유여부
	인터넷 보유 여부

1996서베이-1995센서스와 2003서베이-2000센서스 자료의 결합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공통변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996년 서베이자료가 매우 제한된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통변수는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추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회귀식을 도출할 목적으로 가능한 변수의 투입을 권장한 바 있다(Minot and Baulch, 2002).

추정모델의 구분 단위로는 도시/농촌만 구분하였다. 광역단위 모델분화는 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 모델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지는 문제를 피하고 지역별 회귀식의 왜곡으로 인한 광역별 빈곤율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만 하여도 16개지역으로 구분되고 이에 도시농촌 모델까지 구분하게 되면 최종 25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왜곡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얻어진 회귀식모델을 센서스 자료에 적용하여 가구소득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역별 빈곤율을 도출하였다. 빈곤선을 개인 균등화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선을 사용하였다. 결과로 얻어진 시·군·구 빈곤율에 기초하여 GIS로 빈곤도(Poverty Map)의 작성하였는데 Arc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 지표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지역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의 관련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지표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지역지표는 노인인구비율(고령화수준), 3차산업종사자비중(지역의 산업구조), 지역 재정자립도, 지방세입, 여성인구비율, 컴퓨터보급 수준, 월세의 비중(주거실태), 수도(首都)로부터의 접근성 등이었다. 지역 지표들은 대개 1999년이나 2000년 이후 생산되었기 때문에 1996서베이-1995센서스 결합자료에서 도출된 지역빈곤율에 대해서는 지역지표를 변수로 활용한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2003년 서베이에 기초한 추정모델로 얻어진 지역별 빈곤율에 대해서만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타 연도에 대해서는 지역지표들의 영향력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입수할 수 있었던 소지역단위의 각종 지표들을 모두 활용하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지표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끝으로 지역 표적화에 가장 유리한 지표 2가지를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빈곤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가시화하였다.

제 3절 빈곤율 추정모델

상술한 바와 같이, 소득자료가 없는 센서스 데이터를 통하여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의 변수 중 앞에서 제시된 1995, 2000년 센서스와의 공통 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상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아래 표에 제시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경상소득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0값을 1로 전환하여 로그전환 후 0값이 결측치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추정모델의 구분단위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도시는 광역시 및 도의 시·구를, 농촌은 도의 군을 의미한다.

1996년과 2000년의 회귀계수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R^2 의 경우 1996년은 도시, 농어촌이 각각 0.480, 0.702로 나타났고 2000년의 경우는 0.401, 0.44로 도시 농어촌 모두 1996년도의 값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Beta 값의 경우 1996년 2000년 모두 가구원수와 가구의 연령 및 가구의 연령 제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반응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도시			농촌		
	Beta	표준오차		Beta	표준오차	
(Constant)	상수	7.476	(0.052) ***	7.572	(0.085) ***	
hsum_t	가구원수	0.167	(0.003) ***	0.176	(0.007) ***	
h1_age	가구주 연령	0.027	(0.002) ***	0.022	(0.003) ***	
ageage	가구주 연령제곱	0.000	(0.000) ***	0.000	(0.000) ***	
d_sex1	가구주 성별	0.071	(0.008) ***	0.041	(0.019) **	
edu_1	가구주 교육정도	0.045	(0.001) ***	0.040	(0.002) ***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기준:임금근로자)					
d_w1	자영업자	0.037	(0.007) ***	0.085	(0.018) ***	
d_w2	고용주	0.255	(0.009) ***	0.315	(0.023) ***	
d_w3	무직	0.126	(0.155)			
d_mar1	가구주의 배우자 여부	0.194	(0.009) ***	0.256	(0.019) ***	
wnumr	가구원 중 취업자수의 비중	0.616	(0.014) ***	0.576	(0.032) ***	
oldr	가구원 중 60세 이상 노인비중	-0.277	(0.016) ***	-0.369	(0.028) ***	
babr	가구원 중 19세 이하 가구원비중 주거-거치유형(기준:단독주택)	-0.118	(0.016) ***	-0.232	(0.039) ***	
d_f11	아파트	0.070	(0.007) ***	0.041	(0.022)	
d_f12	연립다세대주택	-0.041	(0.008) ***	0.053	(0.021) **	
d_f13	기타(오피스텔 등)	0.081	(0.015) ***	0.141	(0.025) ***	
	주거-점유형태(기준:자가)					
d_f21	전세	-0.095	(0.006) ***	-0.056	(0.016) ***	
d_f22	보증부월세	-0.118	(0.009) ***	-0.072	(0.024) ***	
d_f23	월세	-0.179	(0.021) ***	-0.043	(0.024)	
d_f24	사글세	-0.215	(0.018) ***	-0.086	(0.029) ***	
d_f25	무상	-0.186	(0.016) ***	-0.188	(0.025) ***	
r_num	방의 갯수	0.070	(0.002) ***	0.070	(0.006) ***	
	가구주의 종사 산업 (기준: 농림어업 및 광업 기준)					
d_ih1	제조업	0.128	(0.037) ***	0.149	(0.041) ***	
d_ih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0.092	(0.037) **	0.107	(0.043) **	
d_ih3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0.113	(0.037) ***	0.101	(0.042) **	
d_ih4	운수창고업, 통신업 및 가사서비스업	0.137	(0.037) ***	0.152	(0.045) ***	
d_ih5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202	(0.037) ***	0.250	(0.047) ***	
d_ih6	공공서비스 및 교육	0.182	(0.037) ***	0.227	(0.042) ***	
d_ih7	무직 및 분류 불가능	0.015	(0.159)	0.061	(0.047)	
	R Square	0.480			0.702	
	F	1372.052			595.892	

주: *** p<0.01, ** p<0.05, * p<0.1

<표 4-3>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도시			농어촌		
	Beta	표준오차		Beta	표준오차	
(Constant)	상수	5.972	(0.102) ***	5.408	(0.299) ***	
fnum	가구원수	0.212	(0.007) ***	0.170	(0.021) ***	
age1	가구주 연령	-0.014	(0.003) ***	0.021	(0.009) **	
ageage	가구주 연령제곱	0.000	(0.000) ***	0.000	(0.000) **	
d_sex1	가구주 성별	0.041	(0.020) **	0.111	(0.068)	
edu_1	가구주 교육정도	0.045	(0.002) ***	0.040	(0.005) ***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기준:임금근로자)					
d_j1	자영업자	-0.200	(0.015) ***	-0.217	(0.044) ***	
d_j2	고용주	0.215	(0.032) ***	0.138	(0.121)	
d_j3	무급가족종사자	-0.555	(0.136) ***	-0.360	(0.235)	
d_j4	실업자 및 비경활	-0.381	(0.023) ***	-0.441	(0.075) ***	
	가구주의 배우자 형태(기준:유배우)					
d_mr1	사별	-0.001	(0.027)	-0.047	(0.073)	
d_mr2	이혼	-0.097	(0.014) ***	-0.086	(0.051) *	
d_mr3	미혼	-0.049	(0.009) ***	-0.016	(0.036)	
wnumr	가구원 중 취업자수의 비중	0.603	(0.028) ***	0.180	(0.078) **	
oldr	가구원 중 60세 이상 노인비중	-0.116	(0.029) ***	-0.126	(0.062) **	
babr	가구원 중 18세 이하 가구원비중	-0.239	(0.036) ***	-0.250	(0.112) **	
	주거-거처유형(기준:단독주택)					
d_f11	아파트	0.103	(0.015) ***	0.127	(0.060) **	
d_f12	연립다세대주택	-0.002	(0.016)	-0.009	(0.069)	
d_f13	기타(영업용건물내거주,오피스텔 등)	0.125	(0.026) ***	-0.011	(0.070)	
	주거-점유형태(기준:자가)					
d_f21	전세	-0.103	(0.016) ***	0.046	(0.064)	
d_f22	보증부월세	-0.161	(0.018) ***	0.077	(0.093)	
d_f23	월세	-0.251	(0.034) ***	-0.213	(0.085) **	
d_f24	기타	-0.202	(0.027) ***	-0.137	(0.057) **	
d_room	방의 갯수	0.071	(0.029) **	0.057	(0.074)	
d_h141	난방시설 여부	0.253	(0.043) ***	0.201	(0.063) ***	
d_h061	개인용컴퓨터 보유여부	0.073	(0.029) **	0.094	(0.082)	
d_h081	자동차 보유 여부	0.292	(0.015) ***	0.225	(0.045) ***	
d_h071	인터넷 보유 여부	0.148	(0.028) ***	0.173	(0.080) **	
	R Square	0.401			0.440	
	F	559.693			78.218	

주: *** p<0.01, ** p<0.05, * p<0.1

위의 결과를 통해 1995년과 2000년 센서스 자료에 적용될 소득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1995년 도시 소득추정 모델>

$$\begin{aligned} Lnin = & 7.4757 + 0.1668*hsum_t + 0.0270*h1_age - 0.0003*ageage + 0.0709*d_sex1 \\ & + 0.0453*edu_1 + 0.0369*d_w1 + 0.2551*d_w2 + 0.1261*d_w3 + 0.1938*d_mar1 \\ & + 0.6164*wnumr - 0.2773*oldr - 0.1176*babr + 0.0704*d_f11 - 0.0413*d_f12 \\ & + 0.0808*d_f13 - 0.0951*d_f21 - 0.1185*d_f22 - 0.1788*d_f23 - 0.2147*d_f24 \\ & - 0.1859*d_f25 + 0.0701*r_num + 0.1283*d_ih1 + 0.0923*d_ih2 + 0.1127*d_ih3 \\ & + 0.1369*d_ih4 + 0.2016*d_ih5 + 0.1822*d_ih6 + 0.0145*d_ih7 \end{aligned}$$

<1995년 농어촌 소득추정 모델>

$$\begin{aligned} Lnin = & 7.5722 + 0.1764*hsum_t + 0.0217*h1_age - 0.0002*ageage + 0.0408*d_sex1 \\ & + 0.0399*edu_1 + 0.0847*d_w1 + 0.3147*d_w2 + 0.2561*d_mar1 + 0.576*wnumr \\ & - 0.3686*oldr - 0.2323*babr + 0.0410*d_f11 + 0.0530*d_f12 + 0.1408*d_f13 \\ & - 0.0557*d_f21 - 0.0719*d_f22 - 0.0435*d_f23 - 0.0860*d_f24 - 0.1880*d_f25 \\ & + 0.0696*r_num + 0.1493*d_ih1 + 0.1075*d_ih2 + 0.1006*d_ih3 + 0.1523*d_ih4 \\ & + 0.2501*d_ih5 + 0.2265*d_ih6 + 0.0611*d_ih7 \end{aligned}$$

<2000년 도시 소득추정 모델>

$$\begin{aligned} Lnin = & 5.9720 + 0.2122*fnum - 0.0139*age1 + 0.0002*ageage + 0.0415*d_sex1 \\ & + 0.0453*edu_1 - 0.1995*d_j1 + 0.2149*d_j2 - 0.5546*d_j3 - 0.3812*d_j4 \\ & - 0.0015*d_mr1 - 0.0970*d_mr2 - 0.0492*d_mr3 + 0.6025*wnumr - 0.1155*oldr \\ & - 0.2390*babr + 0.1029*d_f11 - 0.0024*d_f12 + 0.1250*d_f13 - 0.1035*d_f21 \\ & - 0.1606*d_f22 - 0.2511*d_f23 - 0.2015*d_f24 + 0.0706*d_room + 0.2529*d_h141 \\ & + 0.0728*d_h061 + 0.2915*d_h081 + 0.1478*d_h071 \end{aligned}$$

〈2000년 농어촌 소득추정 모델〉

$$\begin{aligned}
Lnin = & 5.4080 + 0.1696*fnum + 0.0211*age1 - 0.0002*ageage + 0.1108*d_sex1 \\
& + 0.0397*edu_1 - 0.2170*d_j1 + 0.1382*d_j2 - 0.3601*d_j3 - 0.4410*d_j4 \\
& - 0.0470*d_mr1 - 0.0865*d_mr2 - 0.0161*d_mr3 + 0.1797*wnumr - 0.1261*oldr \\
& - 0.2497*babr + 0.1265*d_f11 - 0.0087*d_f12 - 0.0108*d_f13 + 0.0460*d_f21 \\
& + 0.0769*d_f22 - 0.2127*d_f23 - 0.1365*d_f24 + 0.0570*d_room + 0.2011*d_h141 \\
& + 0.0941*d_h061 + 0.2248*d_h081 + 0.1731*d_h071
\end{aligned}$$

제 4 절 빈곤의 공간적 분포

제3절의 소득추정모델들을 센서스자료에 적용하면 자연로그를 취한 경상소득 $Lnin$ 을 추정할 수 있다. 경상소득의 자연로그값 $Lnin$ 에 지수함수를 적용하면 경상소득금액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 경상소득금액에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후 중위소득을 구하고 중위소득의 50%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 적용하여 전국의 광역 빈곤율을 추정하면 아래 〈표 4-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추정모델을 도출한 것은 시·군·구 단위의 소지역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우선 광역단위의 빈곤율을 직접추정한 것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소지역 빈곤율 추정은 각 지역의 추정값을 제시하기 보다는 빈곤도로 전체적인 공간적 구조를 가시화하는 것으로 결과제시를 대체할 것이다.

〈표 4-4〉 빈곤율 추정결과 - 1996년 서베이와 1995년 센서스자료 결합

지역	1996가구소비 (직접추정법)		1995 센서스활용 도시농촌 회귀모델추정	
	빈곤율	변이계수(CV)	빈곤율	변이계수(CV)
서울	0.050	0.0199	0.031	0.0125
부산	0.115	0.0223	0.047	0.0164
대구	0.081	0.0367	0.055	0.0188
인천	0.094	0.0327	0.036	0.0243
광주	0.108	0.0432	0.059	0.0253
대전	0.096	0.0485	0.049	0.0283
경기도시	0.082	0.0240	0.030	0.0165
강원도시	0.119	0.0508	0.074	0.0251
충북도시	0.110	0.0574	0.049	0.0340
충남도시	0.067	0.0986	0.074	0.0272
전북도시	0.141	0.0397	0.084	0.0192
전남도시	0.133	0.0525	0.079	0.0248
경북도시	0.105	0.0483	0.088	0.0163
경남도시	0.062	0.0387	0.049	0.0178
제주도시	0.097	0.0996	0.063	0.0471
도시계	0.079	0.0092	0.046	0.0052
경기농촌	0.097	0.0368	0.045	0.0270
강원농촌	0.200	0.0505	0.069	0.0390
충북농촌	0.162	0.0700	0.067	0.0372
충남농촌	0.121	0.0595	0.070	0.0278
전북농촌	0.220	0.0613	0.094	0.0362
전남농촌	0.241	0.0428	0.088	0.0223
경북농촌	0.246	0.0338	0.090	0.0291
경남농촌	0.166	0.0382	0.083	0.0287
제주농촌	0.195	0.1189	0.074	0.0597
농촌계	0.160	0.0159	0.072	0.0103
전체계	0.090	0.0080	0.050	0.0047

〈표 4-5〉 빈곤율 추정결과 - 2003년 서베이와 2000년 센서스자료 결합

지역	2003 국민생활실태조사 (직접추정법)		2000 센서스활용 도시농촌 회귀모델추정	
	빈곤율	변이계수(CV)	빈곤율	변이계수(CV)
서울	0.117	0.0214	0.088	0.0074
부산	0.211	0.0248	0.124	0.0100
대구	0.137	0.0390	0.112	0.0130
인천	0.110	0.0438	0.081	0.0153
광주	0.155	0.0493	0.114	0.0172
대전	0.152	0.0499	0.097	0.0191
울산	0.090	0.0764	0.075	0.0253
경기도시	0.119	0.0234	0.067	0.0094
강원도시	0.178	0.0490	0.133	0.0182
충북도시	0.138	0.0615	0.112	0.0210
충남도시	0.183	0.0441	0.115	0.0192
전북도시	0.217	0.0378	0.126	0.0155
전남도시	0.192	0.0495	0.121	0.0192
경북도시	0.227	0.0310	0.113	0.0141
경남도시	0.222	0.0287	0.101	0.0138
제주도시	0.120	0.1106	0.093	0.0383
도시계	0.150	0.0090	0.096	0.0035
경기농촌	0.155	0.0593	0.190	0.0167
강원농촌	0.279	0.0684	0.307	0.0152
충북농촌	0.287	0.0528	0.308	0.0149
충남농촌	0.352	0.0463	0.323	0.0123
전북농촌	0.360	0.0522	0.402	0.0134
전남농촌	0.419	0.0300	0.398	0.0091
경북농촌	0.493	0.0430	0.336	0.0125
경남농촌	0.426	0.0524	0.425	0.0116
제주농촌	0.265	0.1063	0.275	0.0277
농촌계	0.324	0.0169	0.330	0.0045
전체계	0.167	0.0081	0.123	0.0028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직접 추정한 경우 1996년은 도시 빈곤율이 7.9% 농어촌 빈곤율 16%로 나타났고 2003년 서베이자료의 경우 도시는

15%, 농어촌 32.4%로 나타나 농어촌의 빈곤율 증가율이 도시의 빈곤율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센서스 자료의 경우 1995년 추정빈곤율은 도시가 4.6% 농어촌이 7.2%로 나타났고 2000년 센서스의 추정빈곤율은 도시가 9.6% 농어촌이 33.0%인 것으로 나타나 센서스 자료에서도 농어촌 빈곤율의 증가가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베이자료의 빈곤율이 센서스자료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베이자료로 추정된 지역 빈곤율보다 센서스자료와의 결합으로 추정된 빈곤율이 덜 극단적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한편 변이계수^{주23)}를 보면 센서스 자료와의 결합으로 추정된 빈곤율의 변이계수가 대부분 낮아 작은 표본의 서베이 자료로 직접 추정된 빈곤율보다 추정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추정된 1996년과 2003년^{주24)}의 빈곤율에 기초하여 빈곤도를 작성하였다. 빈곤도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빈곤율이 높은 시·군·구부터 낮은 시·군·구로 서열화하여 농도를 달리하여 처리되었다. 범례를 서열로 처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해의 추정빈곤율 분포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도에서는 지역에 표시된 농도가 짙을수록 빈곤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1996년의 빈곤도를 보면 우리나라 빈곤이 서해안 지역과 산간지역, 그리고 경상권 일부지역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주23) 변이계수는 표준편차/평균이다. 변이계수는 추정의 안정성을 대변한다. 변이계수의 계산은 아래의 식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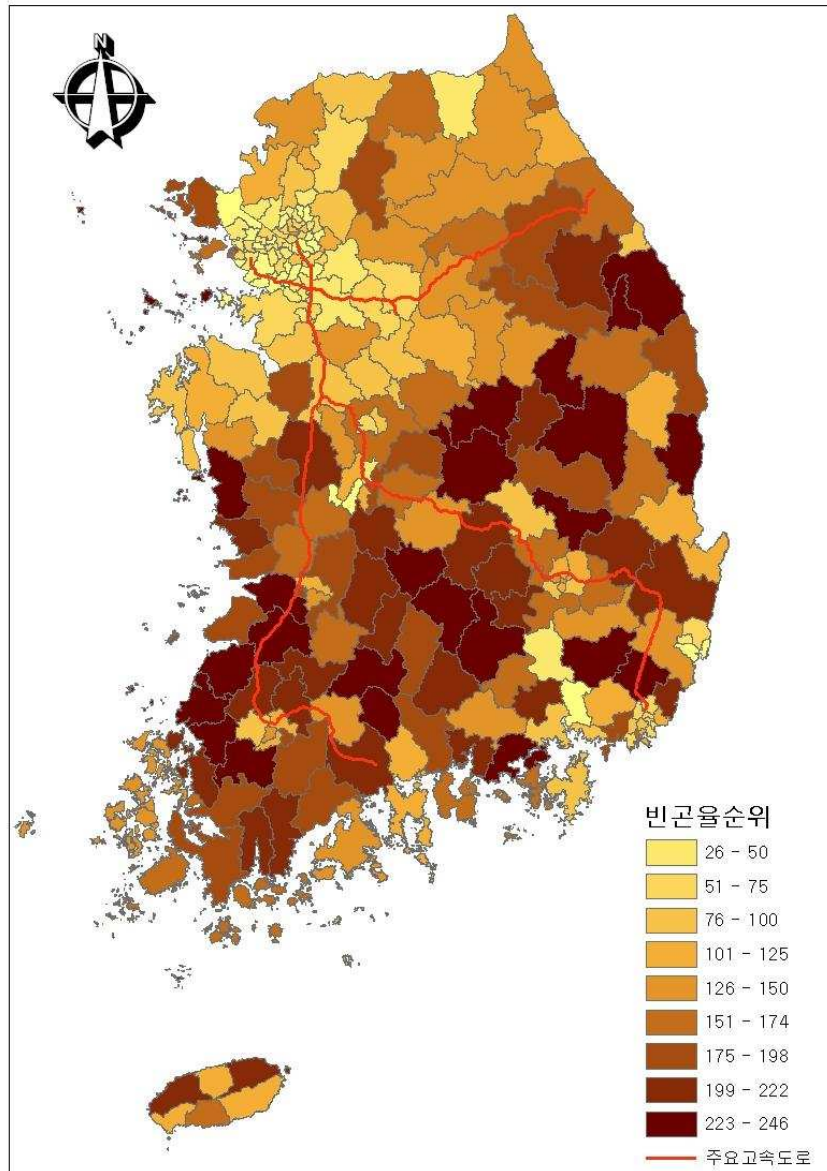
$$\text{표본비율(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quad P = X/n \quad (X\text{는 빈곤가구, } n\text{은 지역의 가구})$$

$$\text{표본비율의 표준편차(SD)} \quad SD = \sqrt{p(1-p)/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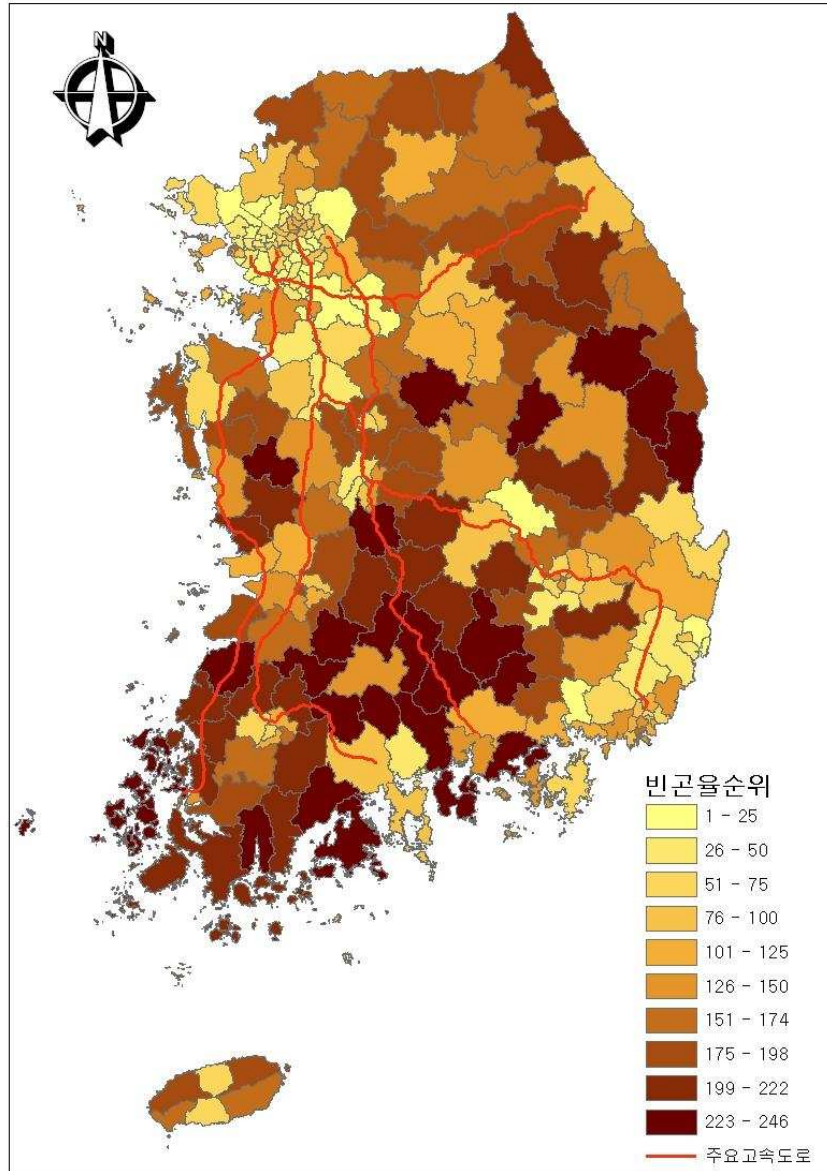
$$\text{표본비율의 변동계수(CV)} \quad CV = (\sqrt{p(1-p)/n}) / p$$

주24)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회귀모델로 추정식을 얻게 되므로 서베이 자료 기준시점을 추정된 빈곤율 기준시점으로 하였다. 하지만 센서스 자료 상의 변수값들이 센서스에 기초한 빈곤율 계산에 활용되므로 사실 센서스 기준연도도 빈곤율 추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준 연도의 선택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편의상 서베이 기준 연도를 설명의 기준연도로 사용한다.

[그림 4-1] 1996년 서베이-1995년 센서스 결합자료 빈곤도



[그림 4-2] 2003년 서베이-2000년 센서스 결합자료 빈곤도



로 낮은 것으로 그려졌다. 지도위의 선은 주요 고속도로이다. 1996년의 고속도로를 보면 경부선이 흐르는 지역은 빈곤율이 주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그려졌다. 반면 2003년 빈곤도는 1996년과 비교하여 일부 변화를 보이는데 우선 서해안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남부지역과 북서부 지역 및 북동부 일부지역에서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경남의 해안 지역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역이다. 서해안 지역은 1996년 이후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된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해안 개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서울 주변의 일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또는 새로운 아파트 개발 지역 등이다. 경남 해안지역은 중공업 등이 밀집되어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 지역들이다. 반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경계 짓는 산간지역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졌다.

1996년과 2003년의 빈곤도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몇 지역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골간이 되는 특징은 유지되는 듯 한데 이는 산간지역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맥이 흐르는 지역의 농도가 대부분 진하다. 단,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만 그 농도가 다소 흐려진다. 외국에서도 빈곤율이 산간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산업입지 및 교통 등이 매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 5절 빈곤지역 표적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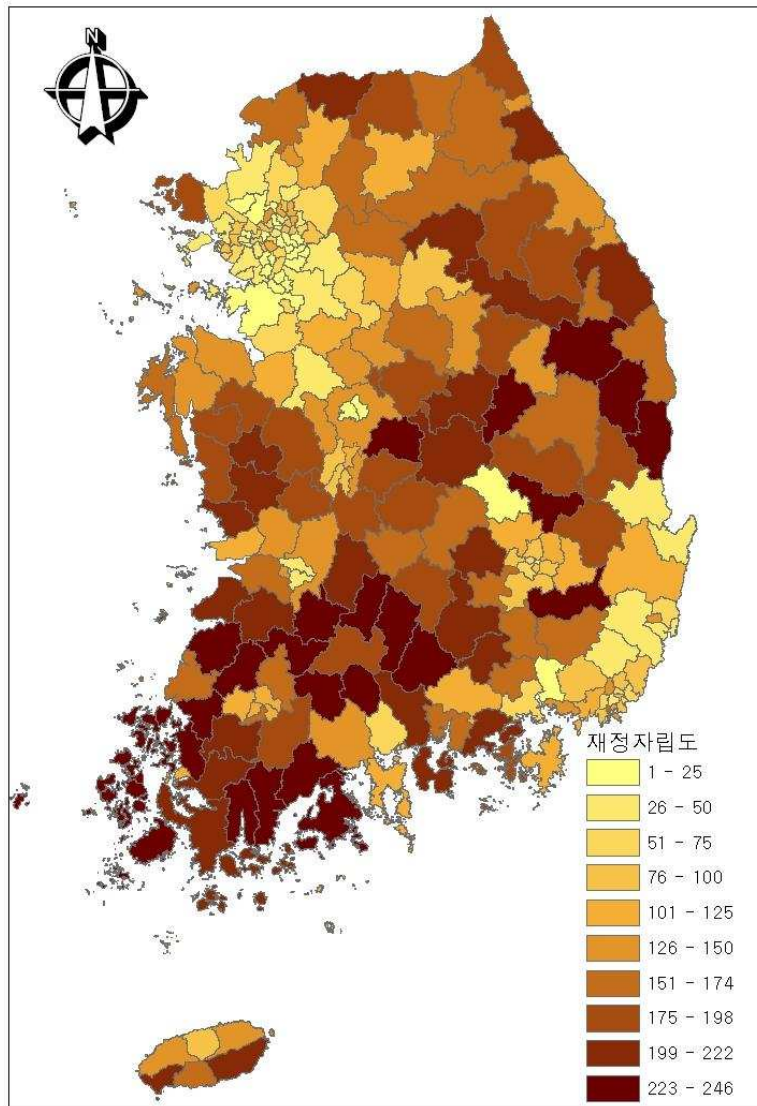
빈곤율이 높은 빈곤지역(pocket of poverty)을 표적화할 수 있는 지역의 지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추정된 2003년 빈곤율과 지역지표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지표 중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지표를 독립변수로 두고 지역빈곤율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주요 변수 선택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역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지표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4-6〉 지역 빈곤율 관련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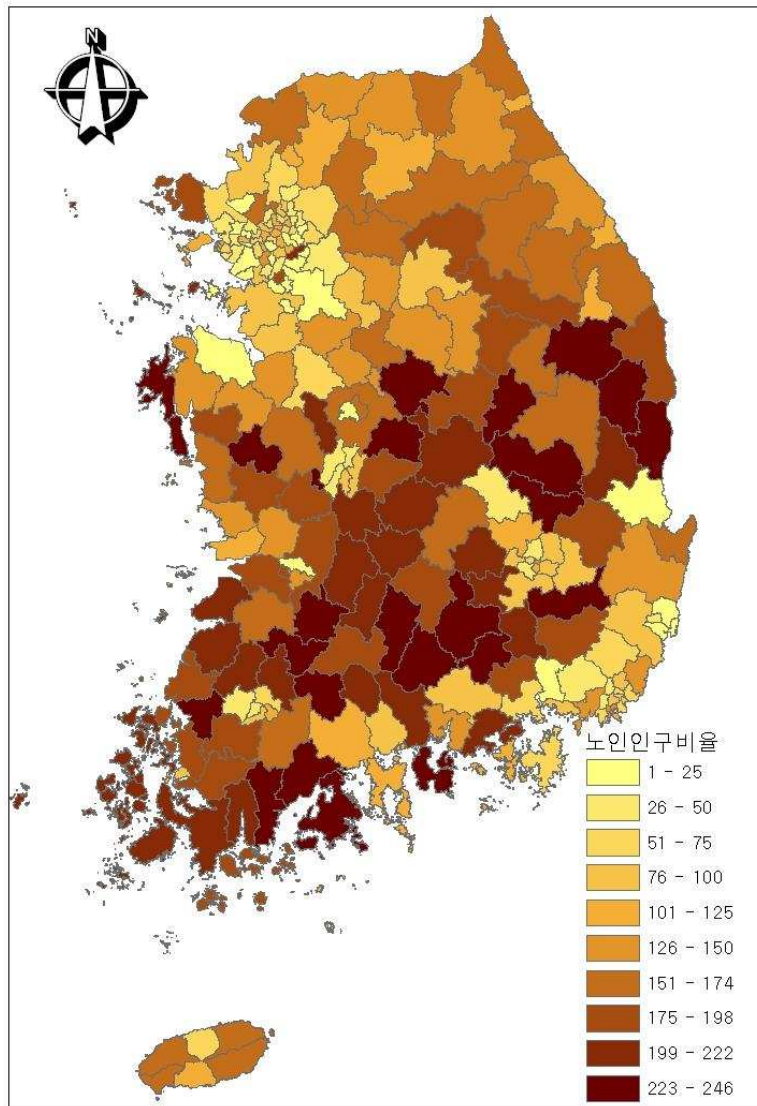
	지방세	재정 자립도	여성비율	노인비율	3차종사 비율	서울거리	월세비율	병원수	학원수	컴퓨터수
지방세										
재정자립도	.656 **									
여성비율	-.131 *	-.241 **								
노인비율	-.259 **	-.656 **	.385 **							
3차종사비율	-.151 *	-.135 *	.465 **	.129						
서울거리	-.281 **	-.373 **	.260 **	.252 **	-.024					
월세비율	.101 *	.171 **	-.228 **	-.259 **	-.005	-.083				
병원수	.661 **	.733 **	.034	-.499 **	.166 *	-.321 **	.158 *			
학원수	.771 **	.685 **	-.059	-.508 **	.022	-.199 **	.136 *	.882 **		
컴퓨터수	.678 **	.699 **	-.069	-.522 **	.073	-.356 **	.072	.915 **	.897 **	
빈곤율	-.445 **	-.726 **	.338 **	.807 **	.103	.360 **	-.322 **	-.601 **	-.619 **	-.632 **

주: *** p<0.01, ** p<0.05, * p<0.1

[그림 4-3] 2003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도



[그림 4-4] 2003년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순위도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지표들이 지역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의 단순 상관관계만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으나 표적화를 위한 지표를 발견하는 데에는 나름의 유용성을 갖는다. 표적화 지표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지표를 사용하여 빈곤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어 관계의 정도가 상쇄된다면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놓치게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수준의 인과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정책이 무엇을 변화시키려 시도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본다면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단순 원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소지역빈곤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는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었다. 즉,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빈곤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빈곤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컴퓨터 보급수준, 학원수, 병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낮았다. 위에서 열거한 지표들은 상관관계지수가 0.60이상으로 모두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고 복지수혜자의 비중은 높으며 산업투자가 부진하고 병원분포나 컴퓨터 보급수준 등에서 볼 때, 지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이었다.

지역의 빈곤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가지 지표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이다. 이를 지도로 작성하면 [그림 4-3], [그림 4-4]와 같다. 두 개의 지도를 보면 그 순위가 2000년대초 빈곤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두 지표는 빈곤지역을 표적화하는 데 비교적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회귀분석은 전국과 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3개 모델이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투입된 지역지표는 지방세액, 재정자립도, 여성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전 종사자 중 3차산업종사자 비율, 서울과의 이동 소요시간^{주25)}이었으며 전국모델에서는 도농구분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전국 분석모델의 설명력은 90%넘어 빈곤지역을 표적화하는 변수들

주25) 시청이 소재한 중구를 기준으로 도로를 자가용으로 이동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소요시간

을 찾는데 매우 유의미한 분석모델임을 시사하였다. 전국에서 소지역 단위의 지역빈곤율에 영향을 준 변수 중 도농구분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비율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접근성은 전국모델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수도에서 멀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지역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전국	도시	농촌
	Beta	Beta	Beta
지방세	-.094***	-.341***	-
재정자립도	-	-	-.431***
여성비율	.102***	-	.292***
노인비율	.307***	.530***	.264**
3차산업종사자비중	.046**	.188**	-
수도접근성	.109***	.307***	-
도농구분	-.610***	-	-
R ²	.919	.586	.728

*** p<0.01, ** p<0.05, * p<0.1

주: 도농구분에서 도시 1, 농촌 0으로 처리. ‘-’는 분석과정에서 제외된 변수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빈곤율이 높은 지역(pocket of poverty)을 찾을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도시와 농촌을 선별하여 별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의 회귀모델 모두 설명력이 59%, 73% 정도로 매우 높았다. 도시의 지역 빈곤에는 역시 노인비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와 수도접근성도 영향이 컸다. 농촌은 지방세보다는 재정자립도의 영향이 더 컸으며 여성 인구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이 지역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빈곤지역을 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국과 도시, 농촌에서 빈곤이 심각한 지역을 찾기 위해 위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로의 집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넓혀

지역의 인구층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6절 분석결과의 함의

본 절에서는 빈곤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주머니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피고자 외국의 분석경험을 원용하였다. 지역단위의 빈곤을 추정에서 작은 표본의 서베이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실험해 보았다는 것으로 이 장은 의미를 가진다. 물론 시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이후 빈곤을 연구하는 단위로 지역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축적할 필요성은 당연히 크다고 본다.

소지역단위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빈곤은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빈곤율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의 소지역빈곤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개발이 지역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의 문제를 가구의 문제, 개인의 인적자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대빈곤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정 수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빈곤주머니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이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고 빈곤정책의 지역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조건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가구의 조건보다 빈곤에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망의 개선, 지역의 재정적 기반 강화 등은 개도국에서도 빈곤의 지역적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인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도에서도 이러한 점들은 거의 유사하게 암시되고 있다.

어느 지역을 빈곤주머니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빈곤정책을 실시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의 결과를 볼 때,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빈곤층 지원 정책을 집중개발하고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어떠한 대빈곤

정책을 지역단위로 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어렵다.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지역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지표들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젊은 근로연령층의 유입을 유도하여, 결국 지방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하다.

최근 지방분권화가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 기반이 크게 다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빈곤율 차이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분권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단위의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권화는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착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제5장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전통적으로 인구학적 특성은 빈곤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에도 인구학적 변화와 빈곤의 규모 및 양상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근로가능성 여부의 구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이라는 전통적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연구는 과거 근로무능력자 중심의 지원책 마련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두각되면서 이들의 비중과 구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또한 가구에서 가족성원을 돌보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래서 근로기회에 제한을 받았으며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온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함께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가족의 해체 등과 함께 새로운 가족형태가 확산되면서 단독가구의 증가도 빈곤문제의 한 단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경향을 보면 특정 인구집단, 예를 들면 노인, 아동, 여성 집단 내 빈곤율의 수준이나 빈곤한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하여 그 내부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주26)} 반면 빈곤층의 전체적인 인구학적 구성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빈곤 정책은 빈곤층의 구성 전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서만 정책 우선순위나 정책방향의 전환 등을 정확하게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율의 변화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강화 또는 유보 등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전 빈곤층의 구성에서 노인이

주26) 예를 들어 최현수·류연규(2003), 홍백의(2005) 등 수 많은 연구들이 있다. 제2장의 빈곤연구 동향분석 결과에서도 인구학적 특성에서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의 92.7%가 특정 인구집단의 빈곤문제에 국한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또는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즉, 빈곤층 전체의 인구학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표적 집단을 명료하게 재 규명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조분석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요소들을 중심으로 빈곤층을 구성하는 전 인구집단을 가구단위와 개인단위로 분석하고 가시화한다. 한편 인구학적 변화가 빈곤규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에서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빈곤층 전반의 인구학적 구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외국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층 구성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동연금성의 보고서인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2003」은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 구조나 인구추이 등을 포함하여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정부보고서 및 정책연구에서 이러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빈곤층 구성(composition of low-income group)분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비교정태적 분석으로 빈곤층 구성의 변화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노동연금성의 보고서에서는 빈곤층을 경제적 지위, 가족유형, 성, 민족별 분포 등을 중심으로 그 구성을 다채롭게 분석하고 있으며 1991-4년, 1995-8년, 1997-00년까지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호튼과 엘런(Horton and Allen, 1998)은 미국 빈곤에 대한 가족구조 변화와 인종의 영향을 1980년과 1990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가족상태(family status: 유배우 가구, 여성가주주 가구, 남성가주주 가구), 연령(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기타 가구주 학력, 직업, 지역을 범주로 하여 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데,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 로그선형모델(interaction effects in log-linear model)을 활용하여 각 범주의 영향을 정교하게 비교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빈곤에서 농촌빈곤가

구 가족구성이 크게 변화하여 부부가구는 급감하고 여성가구주 가구는 급증하는 문제상황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리테칼리오(Ritakallio, 2001)도 LIS Working paper에서 유럽 국가들의 빈곤층 구성분석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여러 인구집단별 빈곤이력의 변화경향(trends of poverty profiles)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1995년까지 분석된 모든 국가(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9개국의 1980, 1985, 1990, 1995년도 자료 분석)에서 젊은 성인층에서 빈곤위험요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반면 노인층의 빈곤율은 최근 모든 국가에서 평균 빈곤율 아래를 밀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 가구형태(성인1인, 성인2인, 성인 2인+아동, 편부모, 노인, 기타), 아동의 수(0, 1, 2, 3, 4+), 연령(18~30세, 30~64세, 65세 이상), 근로활동 중심의 가족형태(모든 성인 고용, 기타) 등의 범주로 빈곤층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포스터와 피어슨(Forster and Pearson, 2002)도 그의 연구에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연령별, 가족구조(혼인상태 및 자녀유무)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김환준(2005)은 국외 OECD국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생산연령 가구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편부모 가구의 구성비는 증가한다는 점, 노인가구구성비는 다소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지수를 보면 생산연령가구의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일부 연구는 특정 인구 집단의 증가가 빈곤인구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빈곤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주27). 외국의 아이슬란드(Iceland, 2003)의 연구와 국내 구인회(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아이슬란드(Iceland, 2003)는 미국의 1949년에서 1999년까지의 빈곤율 변화경향을 경제성장과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측면에서 분해

주27) 성명재(2002)도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소득불평등도의 악화 중 약 12%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지만 인구학적 구성의 영향을 회귀식에서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기연구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빈곤변화 추정의 목적이 더 강조되어 있다.

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 변화가 빈곤을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분해한 바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선, 준절대적빈곤선으로 미국의 정책빈곤선,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여 그 기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빈곤에서는 불평등의 기여가 크고 절대적 빈곤에서는 소득수준 향상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요인의 기여는 시기별, 집단별로 상이해지는 현상을 기술하였다. 1990년대 미국의 빈곤에서는 어떤 인구집단에서도 가족구조 변화의 기여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인구학적 구조의 기여가 약화됨을 보여주었다.

구인회(2004)는 아이슬란드(Iceland)의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한국 빈곤의 규모 변화에 대한 소득향상, 가족구조, 그리고 불평등 변화의 기여를 분석하였다. 가족구조의 구분도 아이슬란드(Iceland)의 틀을 준용하여 노인가구주가구, 유배우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를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위의 두 연구는 인구학적 구성을 조합한 가족구조유형 변화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기여를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학적 구성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인구학적 기여가 달라지고 당연히 다른 요인들의 기여분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볼 때, 특정 가족구조의 유형화가 보여주는 기여로 한정되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구인회의 연구는 1991년,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2000년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6년의 시간이 경과 하였고 이후 신빈곤문제의 등장과 같이 근로능력자 집단이 빈곤층으로 상당 규모 진입한 것이 문제시 되었다는 점, 그리고 2003년을 기점으로 빈곤의 확대가 재이슈화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2000년 이후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

혹, 브라운, 콰더(Hook, Brown and Kwenda, 2004)도 빈곤규모의 변화에서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와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개별집단의 빈곤위험수준(빈곤율)의 기여를 분해하고 있는데 이 연구 역시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는 특정 범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인구학적 특성이 빈곤규모 변화에 기여하는 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가족구조형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가족구조의 유형간 빈곤율 차이가 좁혀지면 감소할 수 있다.

제 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내용

본 절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쟁점이 되는 인구학적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한 제 범주로 빈곤층을 구분하여 빈곤층의 구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별로 대상의 규모를 살펴본다. 둘째, 몇 가지 인구학적 범주와, 인구학적 범주를 조합한 가족구조의 차원에서 빈곤층 구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빈곤층의 규모변화에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한다. 빈곤층의 규모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전제로 빈곤율 변화와의 관련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Iceland, 2003). 그 이유는 인구학적 요인 외 다양한 요인들이 빈곤율 변화에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과대 단순화하고 있다는 한계와 연관된다^{주28)}. 한편 인구학적 요인을 어떠한 범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빈곤율 변화에 대한 기여 정도도 달라진다. 더욱이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의 표본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넘어서는 상이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구학적 기여가 사실과 달리 왜곡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인구학적 요인변화의 기여는 그러한 가상적인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곤율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1996, 2000),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2003), 가계조사자료(2006 상반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구학적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가구 및 인구구성을 가시화하는 첫 번째 분석부분에서는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만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세 개의 자료가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능력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강상태 또는 장애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

주28) 본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타의 한계는 아이슬란드(Iceland, 2003)의 연구 50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빈곤층의 구성을 2003년에 한정하여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의 상세한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된 것이다. 첫 번째 분석부분의 자료처리도 다른 부분과 다소 상이한데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는 농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자료의 경우 농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분석부분에서는 농어를 제외한 상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2003년 빈곤층을 평면적으로 가시화하는 첫 번째 분석에서는 농어를 제외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시점별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농어를 포함한 전국표본으로 빈곤층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 강점을 살려 두기 위함이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빈곤선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균등화된 소득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의 단위를 구성하였고, 가구단위의 분석은 개인가중치를 준 상태의 중위소득 50%선을 빈곤선으로 준용하였다.

빈곤층의 구성분석은 가구와 개인단위로 빈곤층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가구 구성은 정책대상의 범주를 중심으로 하되, 근로지원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정책의 대상가구로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근로능력자와 취약인구집단을 우선 구분하고, 근로무능력자의 구분은 15세 미만, 65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나 중복장애를 가진 자, 건강상 만성질환을 가진 자로 하였다. 그 외는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다.

각 정책대상집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상 배제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가능한 배제적인 상태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1에서 6급의 장애인)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65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노인의 비중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노인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은 근로능력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과 구분하여 근로능력자의 범주에만 포함시켰다. 근로능력자(15세 이상 64세 이하의 비중증장애인)와 아동(18세 이하)의 경우도 중복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여도 15세 이상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는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질환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소득보장 및 근로지원과 다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른 집단과 배타성을 확보하는 구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즉, 질환자 또는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전 가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비율이며 따라서 질환자 또는 질환자가 있는 가구를 합할 경우 중복분이 있어 전체가구 또는 인구의 비가 100% 이상의 비중으로 증가한다.

인구학적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한 가구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가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없이 비근로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구분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근로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근로지원만으로 빈곤탈피를 고려할 있는 가구- 와 근로능력자와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²⁹⁾ - 근로능력자의 근로소득 향상과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소득지원 및 서비스제공으로 빈곤탈피를 추진할 수 있는 가구 -로 재구분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은 없이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이지만 미래의 지원 정책설계에서 근로지원의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재 구분하였다. 아동이 있는 가구는 당장은 소득보장이 중심적인 지원정책이 되지만 아동의 성장과 함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기대할 수 있는 가구이다. 반면 아동이 없는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보장이 중심적인 빈곤정책이 될 가구이다.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compositional change)는 가구규모, 가구주의 유배우 상태, 가구주의 성, 가구주의 연령, 그리고 가구규모 및 가구주의 특성을 조합한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분석된다. 가족구조의 분류는 서론에서 소개한 구분방식을 따라 단독가구, 노인가구주가구, 유배우가구, 남성가구주가구, 여성가구주가구로 위계적 구분을 하였다. 인구학적 구성변화와 함께 인구집단별 빈곤율의 변화도 함께 산출하여 인구집단별 빈곤위험성의 변화를 파악함과 아울러 이후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인구학적 구성 변화의 기여 분해는 아이슬란드(Iceland)와 구인회가 활용한 방식을 따라 수행하였다. 빈곤규모(head-count)는 전인구 중 해당 인구집단의 구성

주29) 한 가구 안에 노인과 장애인, 아동이 함께 살 수 있으므로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합이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의 비중을 넘어설 수 있다.

비중과 해당 인구집단 내 빈곤위험정도(빈곤율)로 구성된다. 빈곤율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를 분해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인구학적 구성비율의 변화로 인한 빈곤율 변화분을 찾기 위하여 T년과 T+1년 사이의 전체 빈곤율과 인구집단의 구성비, 그리고 인구집단별 빈곤율을 구한다. 2개 비교년도 사이에 전체 인구 중 각각의 인구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하고 각 인구집단별 빈곤율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T+i년도 전체 빈곤율을 구한다. 이 가정에서는 인구집단 구성비율은 T+i년도의 값을 갖고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 등의 경제적 요인은 T년도와 같다. 이 가상적인 빈곤율은 T년도의 인구집단별 빈곤율에 T+i년의 인구집단 구성비율의 값으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것이다³⁰⁾.

이 가상적인 빈곤율과 T년도의 실제 빈곤율의 차이가 T년도에서 T+i년 사이에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증가 또는 감소된 빈곤율 변화로 해석된다(구인회, 2004:67). 인구학적 구성으로 인한 기여 외 잔여분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집단 내, 또는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고 주로 불평등의 기여로 잔여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과 경제적 불평등의 기여분 합이 분석되는 두 시점의 빈곤율 차이(퍼센티지 포인트 변화)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아도 기여분의 합과 빈곤율의 차이는 다소 괴리를 보인다. 이러한 값의 불일치는 인구학적 범주별 구성에 자료의 가중치가 균등 배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료의 가중치를 각

$$\text{주30) 가상빈곤율} = \sum_{f=1}^n (Pff)(L_f(t+i)/N_{t+i})$$

Pff는 t년도 f집단의 빈곤율, L_f(t+i)는 t+i년의 f집단 인구, N_{t+i}는 t+i년의 전체 인구

주31) 혹, 브라운, 콰더(Hook, Brown and Kwenda, 2004)의 연구 'A Decomposition of Trends in Poverty Among Children of Immigrants'에서 활용된 방식을 검토하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기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 방식은 인구구성(population composition)과 인구집단 내 위험율(subpopulation risks)의 변화에 의한 부분들을 분해하는 방식이지만 표준화된 Blinder-Oaxaca 분해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소 분석기법에서 정교화수준을 높이고 있다.

인구학적 범주로 재조정하기에는 전 범위 분석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소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여분의 제시와 함께 빈곤율 차이 중 각 기여가 점유하는 비율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대신하였다.

제 3절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빈곤가구는 전 가구의 22.48%였으며 빈곤인구는 전 인구의 16.68%였다. 근로능력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빈곤 가구 중 62.98%를 차지한다. 적어도 빈곤가구의 반 이상은 근로지원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중 43.48%는 남성가구주 가구이고 19.49%는 여성가구주 가구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근로능력가구 중 비중이 44.82%에 이른다. 빈곤층 근로능력자가구의 근로 지원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정책(affirmative action)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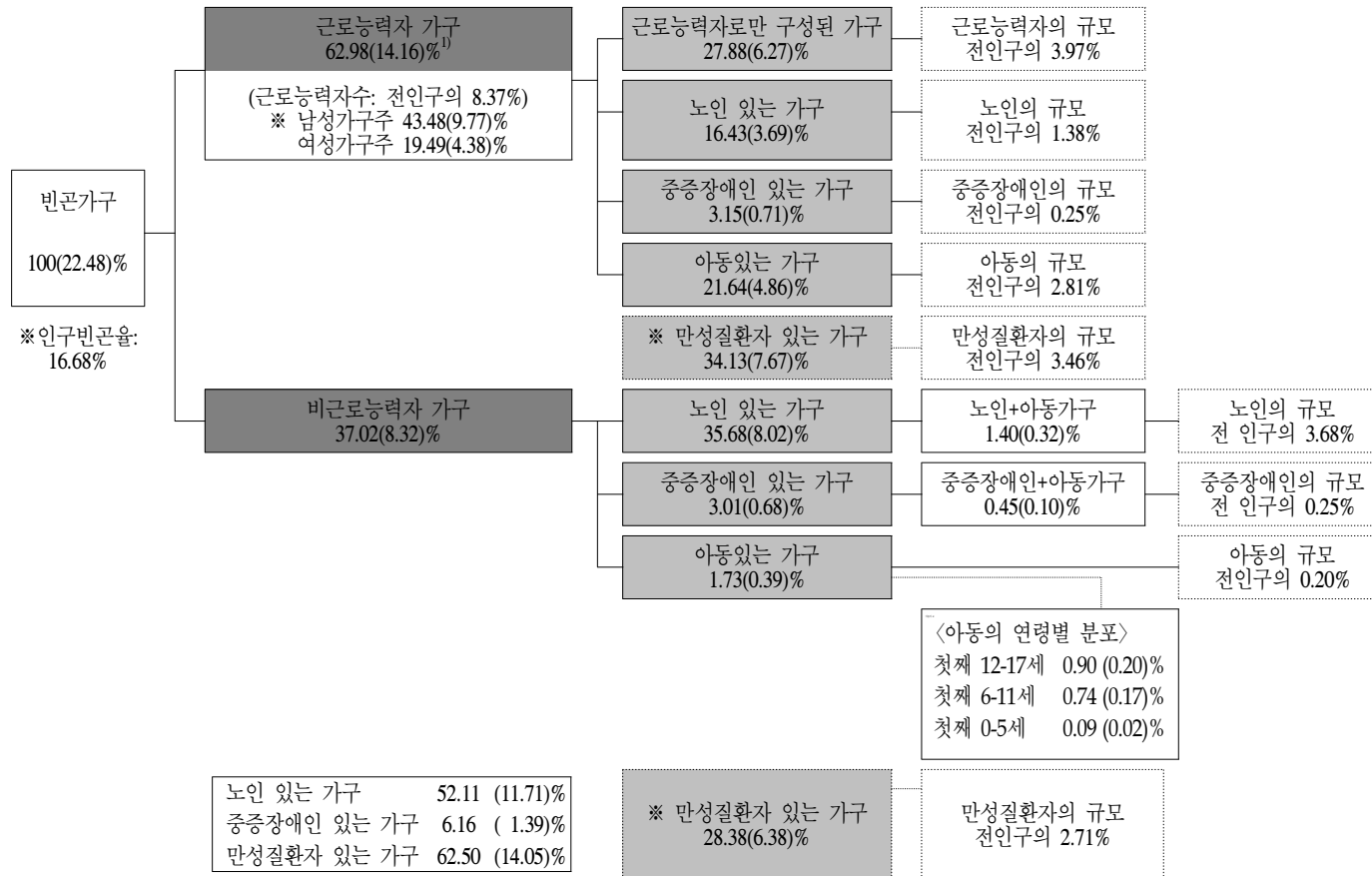
근로능력자 가구 중 근로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약 절반에 가까운 44.26%(=27.88%/62.98%×100)이고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는 66%로 적지 않은 가구가 근로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지만 빈곤상태에 빠져있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서 유념하여야 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근로능력자 가구 중 54%의 가구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을 합하면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80%이상의 가구에서는 만성질환자나 노인이 있다. 이 점은 근로지원이 근로능력자를 위한 인적자본의 제고, 또는 취업의 알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가구 내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까지도 고려하여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매우 높아 21.64%에 이르는데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에서는 단 1.73%의 아동가구만 속한다. 결국 아동빈곤은 근로능력자의 지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빈곤가구 중 약 37%(전 가구 중 8.32%)는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로 소득보장을 통하여 빈곤탈피가 가능한 가구이다.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의 대부분은 노인이 있는 가구로 일부 가구만 중증장애인과 아동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노인이 있는 비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이 대빈곤정책의 골간이 될 것이다.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정 기간 후 아동의 성장으로 탈 빈곤을 추진할 수 있는데 특히 12~17세 연령대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5년 이내 아동의 성장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림 5-1] 정책 범주별 빈곤가구의 구성



주: 1) 음영처리된 □는 가구기준의 규모이며 () 왼쪽의 %는 빈곤가구 대비 비율, ()안의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비율임.

2) 점선으로 표시된 □안의 수는 인구기준 규모이며 %는 전인구 대비 비율임.

제 4 절 인구학적 구성 변화와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

1.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사이의 인구학적 구성변화 및 집단별 빈곤율의 변화는 다음 <표 5-1> 과 같다. 우선 가구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 1인가구의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 중 3.97%이나 2000년 4.89%, 2003년 5.25%, 2006년 5.27%로 1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내 가구규모별 인구비율 변화에 있어서도 1~3인 가구는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인 가구부터는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4인가구의 경우 외환위기 전후로 28.19%까지 증가했던 인구비율이 2006년 22.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빈곤율도 1996년 28.49% 였으나 2000년 39.19%, 2003년 48.25%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6년 45.9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전의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다. 결국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운 가구는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율은 훨씬 낮아지지만 2인가구의 인구구성과 빈곤율도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변화하는 반면, 4인 가구부터는 이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1996년 4인가구의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인가구내 빈곤율은 1996년 5.90%, 2000년 9.33%, 2003년 9.33%, 2006년 9.46%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7인 가구에서도 4인가구와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전가구에서 가구규모가 감소하여 빈곤가구와 전가구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빈곤율은 7인가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6.35%, 2000년 10.65%, 2003년 12.6%, 2006년 12.7%로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 인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낮으나 빈곤가구 내 인구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의 경우 전체인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13.52%이나 빈곤가구 내 인구비율은 38.79%이며, 이는 다른

연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5.73%, 2000년 28.87%, 2003년 38.73%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33.9%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를 막론하고 빈곤율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2.5배 이상 높았으며, 연도별 증가폭도 1996년 24.33%, 2000년 29.68%, 2003년 35.17%, 2006년 36.14%로 무배우자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내 배우자 유무별 인구비율은 년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인구비율이 68.41%로 2003년 65.88% 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성이 여성인 가구의 인구비율은 2003년 31.18%에서 2006년 38.0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인구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연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전체 가구는 42.4세에서 47.79세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도 1996년 52.27세, 2000년 54.3세, 2003년 58.42세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56.3세로 다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한 근로능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빈곤율은 1996년 14.68%에서 2006년 26.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조를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유배우자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로 분류하여 빈곤층 중 해당가구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았다. 두드러진 특징은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구성비 증가 및 빈곤율의 증가이다. 단독가구는 가구규모 변화에서 살펴본 1인가구의 변화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은 1996년 2.72%에서 2006년 6.69%로 증가하였으며, 빈곤가구 내 노인가구주 가구의 인구비율도 1996년 12.71%, 2000년 14.23%, 2003년 20.67%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19.53%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41.92%, 2003년 50.19%, 2006년 48.64%로 노인가구주 가구 내 인구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인구학적 구성 변화

(단위: %)

		1996 가구소비			2000 가구소비			2003 국민생활실태조사			2006 ²⁾ 가계조사		
		전체	빈곤 가구내	빈곤 율	전체	빈곤 가구내	빈곤 율	전체	빈곤 가구내	빈곤 율	전체	빈곤 가구내	빈곤 율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가구 규모	1인	3.97	12.62	28.49	4.89	14.32	39.19	5.25	15.89	48.25	5.27	14.53	45.97
	2인	10.42	22.54	19.40	12.25	22.43	24.50	13.40	27.31	32.56	15.17	27.06	29.70
	3인	20.25	20.72	9.18	22.06	20.42	12.39	22.04	21.79	15.83	23.81	22.08	15.44
	4인	41.21	27.13	5.90	40.45	28.19	9.33	40.49	23.67	9.33	39.43	22.40	9.46
	5인	15.90	11.70	6.60	14.61	10.91	9.99	13.72	7.73	8.97	12.20	10.39	14.18
	6인	6.13	4.17	6.09	4.63	2.92	8.45	4.28	2.94	10.95	3.39	2.49	12.24
	7인	2.11	1.12	4.78	1.10	0.81	9.80	0.82	0.66	13.04	0.72	1.04	23.99
	평균가구원수	3.25	2.45	-	3.09	2.37	-	3.03	2.23	-	2.96	2.29	-
가구주 성	남	86.48	61.21	6.35	84.99	67.62	10.65	87.13	68.82	12.60	81.31	61.96	12.70
	여	13.52	38.79	25.73	15.01	32.38	28.87	12.86	31.18	38.73	18.69	38.04	33.9
배우자 유무	유	87.08	64.96	6.69	86.27	69.56	10.79	84.49	65.88	12.45	85.44	68.41	13.33
	무	12.92	35.04	24.33	13.73	30.44	29.68	15.51	34.12	35.17	14.56	31.59	36.14
가구주 연령	만18세 미만	0.05	0.43	84.51	0.29	0.84	39.23	0.01	0.03	57.14	0.01	0.05	68.75
	18~25세 미만	2.47	5.11	18.56	1.51	1.98	17.56	1.00	1.01	16.15	1.01	1.65	27.26
	25세~45세 미만	60.80	44.30	6.54	53.05	42.01	10.60	51.37	32.03	9.93	49.88	35.95	12.00
	45세~65세 미만	33.14	30.06	8.14	38.30	32.23	11.26	39.10	36.50	14.91	40.65	34.67	14.20
	65세 이상	3.54	20.09	50.85	6.85	22.93	44.79	8.52	30.43	57.55	8.45	27.68	54.56
	평균연령	42.40	52.27	-	45.41	54.30	-	47.39	58.42	-	47.79	56.30	-
가족 구조	단독가구	3.97	12.62	28.49	4.89	14.32	39.19	5.25	15.89	48.25	5.27	14.53	45.97
	노인가구주 ¹⁾	2.72	12.71	41.92	4.88	14.23	39.00	6.65	20.67	50.19	6.69	19.53	48.64
	유배우가구	84.58	55.12	5.85	81.75	57.34	9.39	77.46	45.75	9.42	79.14	51.81	10.90
	남성가구주	3.23	5.67	15.76	3.55	5.06	19.07	4.53	6.92	24.32	3.47	4.86	23.29
	여성가구주	5.49	13.87	22.66	4.92	9.05	24.61	6.10	10.77	28.25	5.43	9.27	28.42

주: 1) 노인: 만65세이상

2) 2006년도 1분기와 2분기(1-6월)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표 5-2〉 인구학적 구성 변화 비교(추계치와 분석결과치)

(단위: %)

		1996			2000			2003		2006	
		총조사 (1995)	추계	가구 소비	총조사	추계	가구 소비	추계	국민 생활 실태	추계	가계 조사
가구 규모	1인	12.7	-	12.93	15.5	15.5	15.12	16.4	15.92	17.2	15.60
	2인	16.9	-	16.95	19.1	19.1	18.95	20.1	20.31	21.1	22.47
	3인	20.3	-	21.96	20.9	20.9	22.74	21.0	22.27	21.0	23.52
	4인	31.7	-	33.52	31.1	31.1	31.28	30.9	30.68	30.4	29.20
	5인	12.9	-	10.34	10.1	10.1	9.04	9.1	8.31	8.2	7.23
	6인	3.8	-	3.33	2.4	2.4	2.38	1.9	2.16	1.6	1.68
	7인(이상)	1.7	-	0.98	0.9	0.9	0.49	0.7	0.35	0.5	0.31
	평균가구원수(명)	3.34	-	3.25	3.12	3.12	3.09	-	3.03	-	2.96
가구주 성별	남	83.1	-	79.49	81.1	81.46	78.07	80.92	79.93	80.33	73.91
	여	16.9	-	20.51	18.9	18.54	21.93	19.08	20.07	19.67	26.09
배우자 유무	유	77.4	-	77.45	74.9	75.04	75.37	74.00	73.20	72.94	75.00
	무	22.6	-	22.55	25.1	24.96	24.63	26.00	26.80	27.06	25.00
가구주 연령	만18세 미만	0.2	-	0.07	0.1	3.02	0.30	2.76	0.01	2.50	0.02
	만18세~25세 미만	3.6	-	4.16	2.9	3.02	2.79	2.76	1.69	2.50	1.66
	만25세~45세 미만	51.7	-	57.95	48.6	48.49	49.53	45.80	46.95	43.07	44.10
	만45세~65세 미만	34.8	-	31.59	36.2	36.37	36.95	37.98	37.59	39.67	40.95
	만65세 이상	9.6	-	6.22	12.2	12.12	10.43	13.46	13.76	14.77	13.26
가구원 연령	만19세 이하 ¹⁾	31.64	31.5		28.99	29.3		26.9		25.1	
	만20세~29세 이하	18.95	18.8		17.28	17.5		16.6		15.5	
	만30세~49세 이하	31.20	31.1		33.12	32.9		34.5		34.7	
	만50세~59세 이하	8.93	8.9		9.39	9.3		9.8		11.3	
	만60세 이상	9.28	9.6		11.22	11.1		12.2		13.5	
	평균연령		31.6		-	33.1		34.5		36.0	

주: 총조사와 추계자료는 농어가와 8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지 않은 수치임.

1)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는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우 19세 이하 구분이 불가능하여 다른 조사년도의 자료도 1996년 자료 기준에 맞추어 분석함.

2) 음영처리된 부분은 해당 원자료를 분석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원자료, 1995-2000.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통계청(<http://www.nso.go.kr>),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메타 DB 각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9.

인구학적 구성 변화 분석을 위해 활용한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원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조사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표본을 활용하여 조사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가 등을 제외하여 자료의 조사기준을 통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료의 일관성을 갖는 데는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분석에 활용한 4개년도 원자료와 같은 해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통계청 발표 추계치를 비교하면 다음 <표 5-2> 와 같다.

1996년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추계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추계자료의 경우 4개년도 원자료 분석 시와 달리 농어가와 8인 이상 가구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7인(이상)가구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약간 있으나 나머지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배우자유무의 비율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총조사나 추계치 보다 4개년도 원자료 분석 시 더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구주 연령이 만65세 이상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총조사 및 추계 비율이 4개년도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4개년도 분석 시 노인가구주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농어가가 제외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다면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분석할 경우 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과 빈곤율은 더 높아 질 것이다.

2.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빈곤율이 4.41%포인트 증가하였고 2000년과 2003년 사이에는 빈곤율이 2.5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3년과 2006년 사이에는 빈곤율이 0.69%포인트 증가하였다^{주32)}. 빈곤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빈곤율 변화 중 불평등으로 인한 변화분과 인구학적 구성으로 인한 변화분을 파악함에 있어서 인구학적 구성의 범주 설정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주32) 빈곤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제3장 5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0.60%p(변화분 중 13.53%)이고 2000년과 2003년 사이는 0.39%p(변화분 중 14.44%)이며 2003년과 2006년 사이는 0.36%p(변화분 중 67.92%)였다. 1996년과 2006년 사이는 기여분이 1.19%p(변화분 중 15.22%)였다. 반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1.17%p(변화분 중 29.55%)이고 2000년과 2003년 사이는 0.67%p(변화분 중 23.67%)이며 2003년과 2006년 사이는 0.01%p(변화분 중 1.61%)였다. 1996년과 2006년 사이는 기여분이 2.01%p(변화분 중 26.45%)였다. 유배우 여부와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변화의 기여분도 경향은 유사하나 절대 값들은 상이하 다. 대체로 인구학적 구성 범주 구분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범주를 구분한 경우에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분 크기가 다소 높다.

〈표 5-3〉 1996-2006년간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

(단위:%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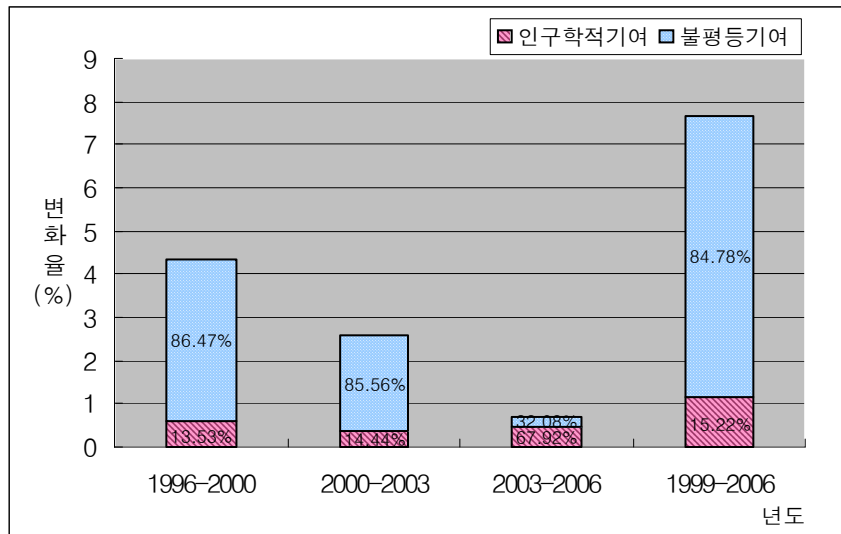
	1996-2000	2000-2003	2003-2006	1996-2006
빈곤율의 실제 증감	+4.41	+2.58	+0.69	+7.68
가구규모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3.90	+2.30	+0.17	+6.65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60	+0.39	+0.36	+1.19
가구주 연령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2.79	+2.15	+0.61	+5.59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1.17	+0.67	+0.01	+2.01
유배우여부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4.17	+2.24	+0.89	+7.39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15	+0.40	-0.21	+0.37
가족구조				
소득불평등 변화로 인한 증감	+3.51	+1.70	+0.92	+5.95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증감	+0.87	+1.22	-0.23	+1.97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1996~2000사이에서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분이 낮다. 인구학적 구성 변화가 빈곤율 변화의 적은 퍼센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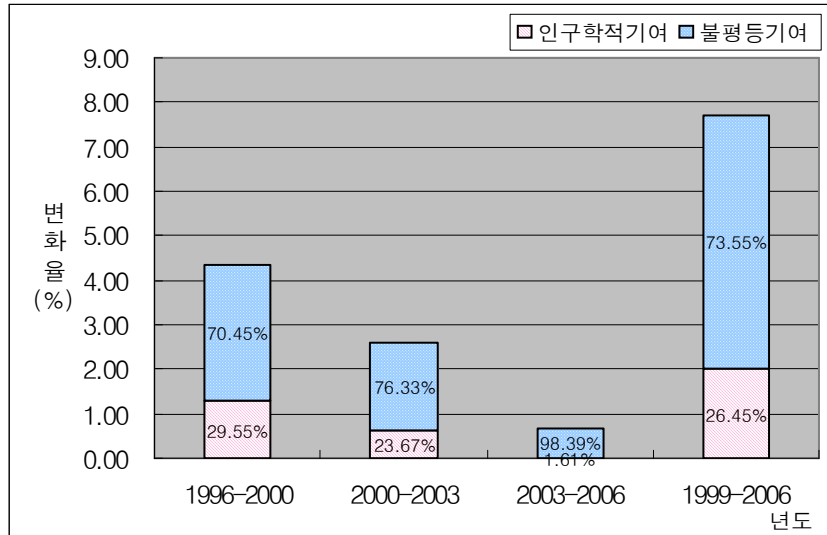
포인트만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2003년 사이와 2003년과 2006년 사이의 빈곤율 변화 중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로 인한 빈곤율 변화는 그 페센티지 포인트가 다소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가 작아지고 반대의 경우 기여가 커지는 듯 하다.

하지만 이 점도 모든 인구학적 구성 범주의 구분에서 그러한 것은 아닌데, 이는 활용하고 있는 자료의 표본차이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2000년과 2003년, 그리고 2006년의 유배우 여부와 유배우 상태가 반영된 가족구조의 범주에서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가 4개 시기에서 추정되는 경향성을 다소 벗어난다. 통계청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동시에 분석에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진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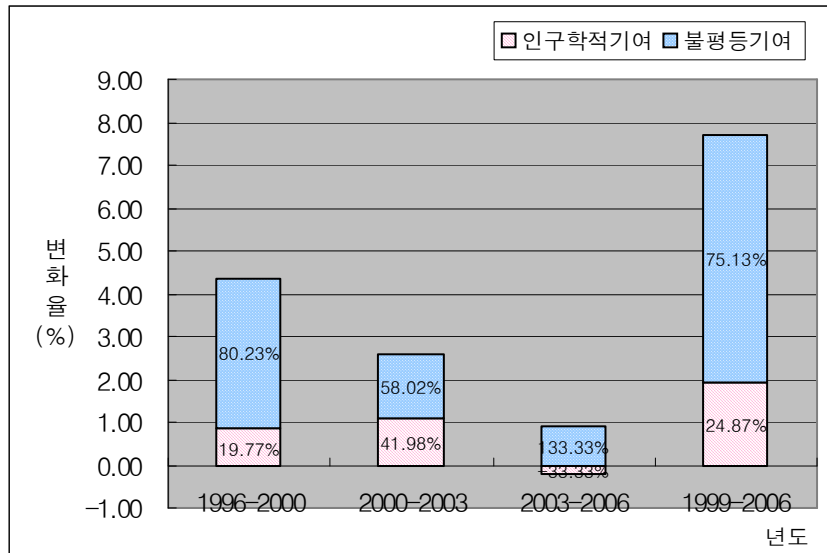
[그림 5-2] 가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그림 5-3]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그림 5-4]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특성 변화의 기여



인구학적 구성범주의 선택이나 표본의 차이에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앞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수준에서 결과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보다 정확한 기여분 분석이 가능하려면 표본의 불일치문제를 겪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시기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분석결과의 함의

본 장에서는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빈곤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적지 않아서 근로능력자들을 위한 지원이 해당 가구 내 가구원의 빈곤탈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빈곤아동은 대부분 근로능력자 가구에 속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향상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동빈곤을 함께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능력자의 근로지원은 근로능력자가 속한 빈곤가구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 및 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동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이들을 가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가구 중 80%이상의 가구에 노인과 장애인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노인의 비중이 높는데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및 보완이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 되는 인구집단이다.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변화는 자료들이 표본을 달리하고 있어 완벽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1인 가구의 증가세와 이들의 빈곤율 심화로 1인가구의 구성비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노인가구주 가구의 증가세와 노인빈곤율의 증가세도 빈곤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측면이다.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25-45세 사이의 구성비는 감소하지만 이집단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층의 빈곤율 증가보다 더 크고 유배우가구의 빈곤율이 무배우 가구에 비하여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전통적인 인구학적 문제, 노령화와 이로 인한 빈곤의 증가

와 함께 근로연령층 유배우가구의 빈곤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단독가구에서도 비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노인단독가구에 비하여 이 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다.^{주33)}

인구학적 구성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기여는 역시 표본의 차이로 인한 자료상의 문제로 정확한 해석이나 추정이 어렵지만 두 가지 점으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구학적 구성변화의 기여가 낮고 반면 경기가 안정되는 시기에는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가 높아진다는 점과 인구학적 구성의 기여는 분석에 활용하는 인구학적 구성의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측면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범주화하고 이로써 얻어진 빈곤율의 변화분을 인구학적 특성의 기여 일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주33) 비노인단독가구의 전 인구 중 비중은 1996년 3.13%에서 2000년 3.58%, 2003년 3.37%, 그리고 2006년 3.49%로 증가하였으며 빈곤율도 1996년 12.89%에서 2000년 20.26%, 25.56%, 28.94%로 증가하였다.

제 6 장 근로빈곤층의 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 분석목적

한 마디로 표현하면, 빈곤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의 관계이다. 빈곤층의 특성을 설명하는 많은 변수는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빈곤층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거나,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이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된 근로가능성(Workability)은 국가가 이들 중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빈곤대책이 오래 전부터 노동과의 관계를 통해 위치 지워져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했던 몇 가지 변화만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해 진다. 생활보호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대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던 시점은 매우 흥미롭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을 제도화했던 시점에, 우리사회는 빈곤층의 근로가능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로할 수 있는 빈곤층에게 무조건적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근로 가능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불가피한 경제사회여건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라는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개인의 근로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같은 근로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단은 근로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성이 중시되며, 다른 집단은 사회적 책임성이 중시된다. 다소 도

식적으로 말하면, 전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업잠재력을 높이는 취업우선전략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노동가능성의 정도가 정부의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장은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가구특성, 개인의 인적자본 관련 특성, 소득관련 특성의 측면에서 내부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제한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실태변화를 동태적 관점에서 언급할 것이나, 그것은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다루는 다른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어떤 근로빈곤층은 고용불안이나 저임금으로 인해 반복빈곤의 특성을 보이고, 다른 근로빈곤층은 장기실직상태에서 계속빈곤의 특성을 보이며, 또 다른 근로빈곤층은 일시적으로 빈곤상태에 진입했다 탈출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에 맞게 규모와 내부구성이라는 측면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근로빈곤층 연구는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양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금까지 근로빈곤층의 발생원인은 저임금이나 고용의 질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취업경쟁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발생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고용감소와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만성화된 고용불안 문제가 그것이다. 한 예로 제조업부문에 분포한 저숙련 노동자는 해당부문의 국제경쟁력 상실로 인한 폐업이나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업체 또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게 되고, 저숙련노동자의 상당수는

이러한 구직경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단순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노동자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여 왔다(Hourriez, 2000).

둘째, 가구·인구학적 변화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가구규모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빈곤층 대부분은 가구규모의 전반적 감소 추세 속에서 취업자가 없거나 1인인 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유럽의 인구는 5% 증가하였으나, 가구 수는 19%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 유럽에서 부부가 모두 취업하는 가구의 비율은 59%, 한 명만 취업한 가구의 비율은 36.4%,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4.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맞물려 1인 취업자 가구 또는 미취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EFILWC, 2004).

셋째, 개인의 특성 또한 근로빈곤층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공급을 위한 경쟁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Miss-matching)나 차별구조로 인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s)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공급경쟁에서의 탈락을 과장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저학력·비숙련·직업경험 등 공급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하지만 성별·연령·인종·공공부조수급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체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채용되고, 최우선으로 해고되는” 집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Boushey, 2001).^{주34)}

우리사회 또한 최근 들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4; 금재호 외, 2005). 새로운 다양한 연구결과는 근로빈곤층이 누구이며, 그들을 빈곤상태로 빠뜨리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들의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

주34)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이 시작될 당시, 복지수혜자이던 근로빈곤층의 약 60%가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고용상태는 매우 취약하여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부분이 다시 실직자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차적인 해고대상이 되었다. 이는 근로빈곤층 발생과 관련해서 그 원인을 개인의 취업경쟁력에서 찾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 어떠한 대책마련이 필요한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 연구가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황덕순,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이태진 외, 2005). 우리사회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은 어떠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소득 및 고용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빈곤주기(duration of poverty)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예를 들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빈곤진입 및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진입과 탈출에 취업이 가장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일자리로의 취업인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상용직일자리로의 취업이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개인의 취업상태가 가구단위로 취합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대부분은 패널자료가 필요하나 자료의 신뢰성과 일정한 기간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복실업을 경험하는 사실상의 장기실업자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현안이라는 점은 이미 파악되어 있다(이병희, 2000).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빈곤과 연계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빈곤 → 탈빈곤 → 재빈곤>이라는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각종 연구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정작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근로빈곤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어떤 연구는 취업빈곤층을 분석하였고, 어떤 연구는 경활빈곤층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연구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에서부터 연구작업의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근로빈곤층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왔던 산업구조요

인 중 직종 등 인구·가족구조, 개인특성 및 취업능력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층의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이 장에서는 빈곤의 노동경제적 구성, 즉, 빈곤층이 근로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주요한 개념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구분보다 근로활동과의 관계에 따른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노인빈곤층, 아동빈곤층 등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빈곤층과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빈곤층, 또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등의 구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의 중심에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에 종사하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근로빈곤층 개념이 <가구단위의 소득개념>과 <개인단위의 노동개념>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념정의에 있어, 빈곤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집단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빈곤은 통념적으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빈곤선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빈곤율이 변화하고, 당연히 빈곤층의 구성 또한 변화를 보인다. 이 점에서 빈곤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빈곤선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는 최저생계비를 연구와 정책분야의 빈곤선으로 활용하여 왔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이자 공공부조수급선이라는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한다거나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경

우,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연구내용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상대빈곤선 방식을 준용하였다.

이어 노동은 연구목적에 감안하여 현재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4 참조) :

1) 과거 중심적 개념: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토대로 결과론적으로 취업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중심적 개념이다. 각 개인의 취업 잠재력을 판정하는 조작적 정의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장애유무나 연령의 고저와 무관하게 실제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빈곤층 중 연간 절반 이상을 임금근로에 참여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한다. 이 개념은 미국 노동통계청(BLS)이 『Working Poor Profile』에서 사용했던 기준이며,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물론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은 전 가구원이 연간 참여한 근로활동기간을 모두 합하여 절반을 초과하는 가구를 근로빈곤가구(working poor family)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현재 중심적 개념: 현재 또는 조사시점에 근로 또는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근로’ 개념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조작적 정의는 취업상태와 관련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취업자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ECHP Panel Analysis).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사상 지위 및 업종분포 등 다양한 미시적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중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를 넘나드는 집단을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 개념은 대부분의 자료가년 중 근로활동 참여기간 및 근로능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미래 중심적 개념: 이 개념은 조사대상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할 근로능력 또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중심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가능성(Workability)의 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을 규정하는 경우이며,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조건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이다. 그 조작적 정의는 장애나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나, 가구여건(보육, 간병 등)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집단을 근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장애요인이 없는 집단을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Work-Test)을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실직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6-1> '노동' 개념에 대한 구분

	정 의	특 징	주요 개념
(A) 과거 중심적 개념	- 지난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난 12개월 중 가구원 전체가 총 6개월 이상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한 가구를 근로빈곤가구로 규정	-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 관련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근로활동에 따른 급여나 수당 지원 자격기준으로 활용	- 일반빈곤층(poor) - 근로빈곤층(working poor) - <노동투입시간의 양>에 따라 완전배제, 부분배제, 불안정 집단으로 구분
(B) 현재 중심적 개념	- 조사시점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취업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	-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변화를 파악하고, 특정시점의 경제활동상태파악에 유용	- 경활빈곤층(active poor) - 취업빈곤층(working poor) - 실업빈곤층(unemployed poor) - 비경활빈곤층(inactive poor)
(C) 미래 중심적 개념	- 건강상태나 가구여건 등의 측면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을 연령,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	- 근로가능빈곤층(workable poor) - 근로연령빈곤층(working age poor)

2. 분석자료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선택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성격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와 가구원 개인의 취업상태, 취업경력,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 자료를 필요로 하나,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료는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계자료를 폭 넓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시점(1996, 2000, 2003, 2006년)에 1인 가구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자료로는, 1996년과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2003년은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2006년은 전국가계조사자료(2/4분기까지)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특성변화를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위의 자료만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에 따라 규모와 특성을 추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네 시점에 걸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 개념에 따라 필요한 변수를 가진 자료를 발견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상태 이외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전후 소득계층별 취업상태변화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위에 언급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각각의 개념정의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위의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기간에 따른 정의는 위에 언급했던 자료로는 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년 중 취업기간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화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의 월별 『전국가계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자료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주35)}

셋째,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03년 기준의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가 단 년도 자료이며 개인 근로소득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

주35) 전국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가구 아이디를 통해 패널로 연결하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20%수준만이 생존한다는 점 또한 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근로빈곤층 대상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활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위의 세 가지 개념을 통한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표본규모가 작고, 총 조사기간이 4년에 불과하여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특성을 세부집단별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의 특성변화를 네 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 중 <현재중심의 개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네 시점에 걸쳐, 년 중 취업상태 변화를 파악하거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범주 또한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범위 수준으로 취업상태 등에 대한 특성을 단순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3절 근로빈곤층의 규모추정과 추이

근로빈곤층 규모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의에 따라 추정하는 경우,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당연히 규모 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각각의 정의를 함에 있어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여기서는 2003년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 및 종사지위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별 취업 관련 자료와 『전국가계조사』의 가구소득 관련 자료를 월별 자료의 패널화된 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이 조사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감소하여 전체 경찰인구의 25.6%만이 생존한다는 점이다. 이어 아래 조사결과에서 모집단이 전체 인구가 아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전체 인구 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공식자료이며, 각 조사항목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위의 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 년 단위 월 평균 경상소득에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 빈곤선을 산출하고, 이들 가구의 취업기간이 년 간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2003년 현재 빈곤율을 살펴보면 약 13.1%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패널화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빈곤율이 10.2%로 위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모수추정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정리하면 아래 수치는 “패널화된 자료의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것이다.

<표 6-2>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2003년)

(단위: 개인의 %)

취업개월 수	소득계층별분포			취업기간별분포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0	28.9	26.8	47.7	100.0	83.1	16.9
1	2.1	2.0	3.1	100.0	85.3	14.7
2	2.0	1.9	2.9	100.0	85.1	14.9
3	1.7	1.6	2.8	100.0	83.3	16.7
4	1.5	1.4	2.4	100.0	83.4	16.6
5	1.5	1.5	1.9	100.0	87.2	12.8
6	1.7	1.7	2.2	100.0	86.8	13.2
7	1.7	1.6	3.0	100.0	82.4	17.6
8	1.9	1.9	2.2	100.0	88.7	11.3
9	2.5	2.4	3.2	100.0	87.2	12.8
10	2.9	3.0	2.7	100.0	90.6	9.4
11	3.6	3.6	3.5	100.0	90.1	9.9
12	47.8	50.6	22.5	100.0	95.2	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89.8	10.2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가계조사의 2003년 연간자료를 월간 패널자료로 전환하여 가구소득과 개인취업상태를 연결

2) 자료 연결과정에서 1인 가구원과 비경활가구원, 년중 표본교체가구 등이 결측치로 처리되어 사례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아래 <표 6-3> 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고 7개월 이상 취업자를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전체 경활빈곤층 중 12개월 중 1개월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47.7%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6개월 이하를 일한 집단이 15.3%를 차지하며, 7개월~11개월 이하 일한 사람은 14.6%를 차지하고, 12개월간 완전 취업한 계층의 비중은 22.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개월~12개월 동안 취업한 사람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면, 그 규모는 전체 경활빈곤층의 37.1%로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빈곤층 중 7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63.1%로 약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것처럼, 각 집단별로 빈곤층에 빠질 위험률은 당연히 취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표 6-3> <기준 A>에 따른 근로빈곤층 유형화

(단위: 개인의 %)

취업 개월 수	유형 구분	취업기간별 유형의 분포			소득계층별 유형의 분포			경활빈곤층에서 근로빈곤층의 비율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0월	완전배제집단	100.0	83.1	16.9	28.9	26.8	47.7	= 근로불능
1~6월	부분배제집단	100.0	85.2	14.8	10.5	10.1	15.3	= 근로미약
7~11월	불안정집단	100.0	88.4	11.6	12.6	12.5	14.6	= 근로빈곤층
12월	안정집단	100.0	95.2	4.8	47.8	50.6	22.5	(37.1%)
합계	-	100.0	89.8	10.2	100.0	100.0	100.0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가계조사의 2003년 연간자료를 월간 패널자료로 전환하여 가구 소득과 개인취업상태를 연결

2) 자료 Matching 과정에서 1인 가구원과 비경활가구원, 년중 표본교체가구 등이 결측치로 처리되어 사례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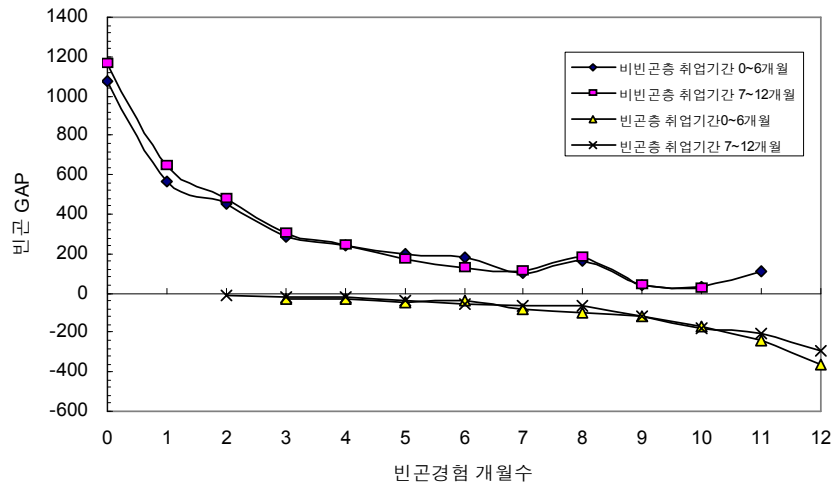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아래 그림은 먼저 년 평균소득 기준으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취업개월 수가 0~6개월인 집단과 7~12개월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4개의 집단 중 빈곤을 경험한 개월 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 50%)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격차(gap)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비빈곤층과 빈곤

층의 경우, 빈곤경험 개월 수에 따라 빈곤선으로부터의 소득격차가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빈곤층은 빈곤을 경험한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빈곤층은 빈곤을 경험한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빈곤 격차의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2.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기준 B>를 활용한 근로빈곤층 규모추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집단이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네 시점의 근로빈곤층 규모를 모두 추정하기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료 중 1996년과 2006년 두 시점의 자료는 개별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는 가구별 가구원수와 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시점에 대해서는 취업상태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체 취업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면, 빈곤층 취업자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5.7%에서 2000년 9.2%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취업빈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0년과 2003년의 취업상태별 분포에 대한 비교는 소득계층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유의미한 차이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 표에서 2003년 근로빈곤층을 취업빈곤층으로 정의하면 전체 취업자의 10%가 근로빈곤층이고, 근로빈곤층을 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3%가 근로빈곤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4>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소득계층별 분포)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비 빈곤층	빈곤층	비 빈곤층	빈곤층	비 빈곤층	빈곤층	비 빈곤층	빈곤층
경제 활동 인구	취 업 자 (①)	소 계	94.3	5.7	90.8	9.2	92.6	7.4	91.2	8.8
		임금근로자	-	-	92.6	7.4	92.7	7.3	-	-
		비임금근로자	-	-	90.9	9.1	92.3	7.7	-	-
	실업자(②)	-	-	65.7	34.3	68.1	31.9	-	-	
	경제활동인구 (①+②)	-	-	87.7	12.3	91.4	8.6	-	-	
비경제활동인구(③)		-	-	80.2	19.8	86.3	13.7	-	-	
전 체(①+②+③)		-	-	86.6	13.4	90.0	10.0	-	-	

주: 1) 위의 표는 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상태별 분포임.

2) 1996년과 2006년 자료는 개별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없음.

3) 2006년 자료는 1월-6월까지의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조사시점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

4) 위의 자료는 농어가와 8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대상집단을 통일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표 6-5>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취업상태별 분포)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비빈 곤층	빈곤 층	전체	비빈 곤층	빈곤 층	전체	비빈 곤층	빈곤 층	전체	비빈 곤층	빈곤 층	전체
임금근로자	-	-	-	46.2	22.3	42.8	54.2	38.4	52.6	-	-	-
비임금근로자	-	-	-	21.2	12.9	20.0	17.0	12.8	16.6	-	-	-
실업자	-	-	-	9.5	30.2	12.5	2.8	11.7	3.6	-	-	-
비경활자	-	-	-	23.1	34.6	24.7	26.0	37.2	27.1	-	-	-
전 체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주: 1) 위의 표는 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상태별 분포임.

2) 1996년과 2006년 자료는 개별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없음.

3) 2006년 자료는 1월-6월까지의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조사시점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

4) 위의 자료는 농어가와 8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대상집단을 통일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취업상태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6-6>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11.4%이며, 빈곤가구의 경제활동인구를 100으로 하면, 임금근로자가 59.7%, 비임금근로자가 30.0%, 실업자가 10.3%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가구원의 실업률은 10.4%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별로 빈곤상태에 빠질 확률, 즉, 빈곤위험률(At Risk of Poverty)을 살펴보면, 실업자가 35.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용직 근로자(21.3%), 자영업자(14.4%) 순임을 알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해당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질 확률이 4.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6〉 <기준 B>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단위: 전체 경활인구의 %)

취업집단 구분	전체 경활인구의 %			소득계층별 %		취업집단 중 빈곤층의 %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비빈곤층	빈곤층		
임금근로자	소 계	68.6	61.8	6.8	69.7	59.7	9.9
	상용직	34.4	32.7	1.7	36.9	14.8	4.9
	임시직	23.9	21.0	2.9	23.6	25.5	12.2
	일용직	10.3	8.1	2.2	9.2	19.4	21.3
비임금근로자	소 계	28.1	24.7	3.5	27.9	30.0	12.1
	고용주	7.3	6.9	0.5	7.7	4.3	6.7
	자영자	15.7	13.4	2.3	15.2	19.9	14.4
	무급종사	5.1	4.4	0.7	5.0	5.8	13.0
실업자	3.3	2.1	1.2	2.4	10.3	35.8	
전체	100.0	88.6	11.4	100.0	100.0	11.4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가계조사의 2003년 연간자료를 월간 패널자료로 전환하여 가구 소득과 개인취업상태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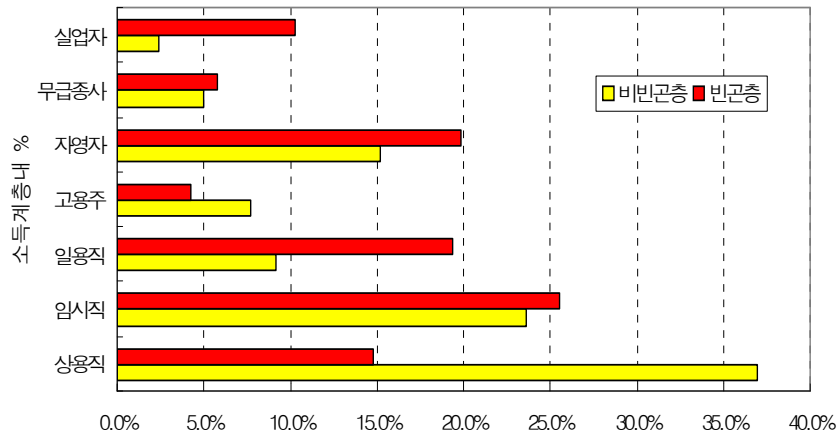
2) 자료 Matching 과정에서 1인 가구원과 비경활가구원, 년 중 표본교체가구 등이 결측치로 처리되어 사례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아래 그림은 소득계층별로 취업상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특정 취업상태에서 소득계층별로 분포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빈곤층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고, 빈곤층에서는 임시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빈곤·비빈곤층 내 종사지위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3.

이처럼 현재적 관점에서 취업집단 및 종사상지위별로 빈곤층의 비율을 추정하는 방식은 근로빈곤층 연구와 관련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떠하며, 취업형태에 따라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자영부문의 비대화는 미국과는 다른 여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론적으로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취업상태 및 종사지위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기준 C>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근로능력빈곤층은 아래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령은 15세~64세,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없으며,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근로능력빈곤층(workable poor)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년 조

사를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여타 자료로는 근로능력유무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능력자 중 빈곤층은 10.1%로 추정된다. 그리고 근로능력빈곤층을 100으로 하면, 임금근로자가 32.4%, 비임금근로자가 10.6%, 미취업자가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실업자의 비율이 9.8%,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7.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근로가 가능한 각 취업집단 중 빈곤층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능력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7.3%로, 비임금근로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7.7%로, 미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13.9%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농어가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져 있어 자영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근로능력빈곤층을 전체 근로능력자 중 빈곤가구에 속한 집단으로 정의하면, 2003년 현재 근로빈곤층은 10.1%로 추정된다.

<표 6-7> <기준 C>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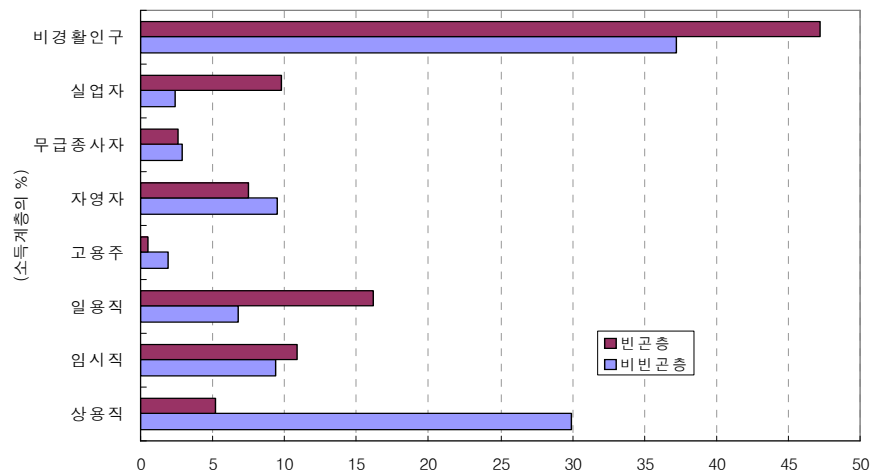
(단위: 전체 인구의 %)

		취업상태별 %			소득계층별 근로능력자의 %		
		비빈곤	빈곤	계	비빈곤	빈곤	계
임금 근로자	소 계	92.7	7.3	100.0	46.1	32.4	44.7
	상용직	98.1	1.9	100.0	29.9	5.2	27.4
	임시직	88.4	11.6	100.0	9.4	10.9	9.5
	일용직	78.9	21.1	100.0	6.8	16.2	7.8
비임금 근로자	소 계	92.3	7.7	100.0	14.3	10.6	13.9
	고용주	97.1	2.9	100.0	1.9	0.5	1.8
	자영자	91.9	8.1	100.0	9.5	7.5	9.3
	무급종사자	90.8	9.2	100.0	2.9	2.6	2.8
미취업자	소 계	86.1	13.9	100.0	39.6	57.1	41.3
	실업자	68.1	31.9	100.0	2.4	9.8	3.1
	비경제활동인구	87.5	12.5	100.0	37.2	47.2	38.2
전 체		89.9	10.1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인구		91.4	8.6	100.0	62.8	52.8	6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아래 [그림 6-3]은 소득계층별로 근로능력자의 종사상지위를 9개로 구분한 뒤, 그것이 소득계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상용직 일수록 빈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이 낮고, 반대로 일용직이면 빈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는 빈곤층 또는 비빈곤층에 포함될 위험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업자는 빈곤층으로 포함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종사상지위별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제 4 절 근로빈곤층의 노동경제적 특성

1. 가설적 문제제기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노동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은 개인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가구의 소득지위 또는 빈곤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가구원 중 일할 사람이 없거나 일하고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는 건강상태와 가구여건 그리고 노동수요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각 개인의 취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빈곤의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빈곤해진 경우와 취업하고 있음에도 빈곤해진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빈곤층 실업자 및 실망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하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빈곤 연구에서 개척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주36)} 그리고 후자는 이 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집단으로 취업빈곤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네 시점의 근로빈곤층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빈곤층 개념(개념정의 B)을 채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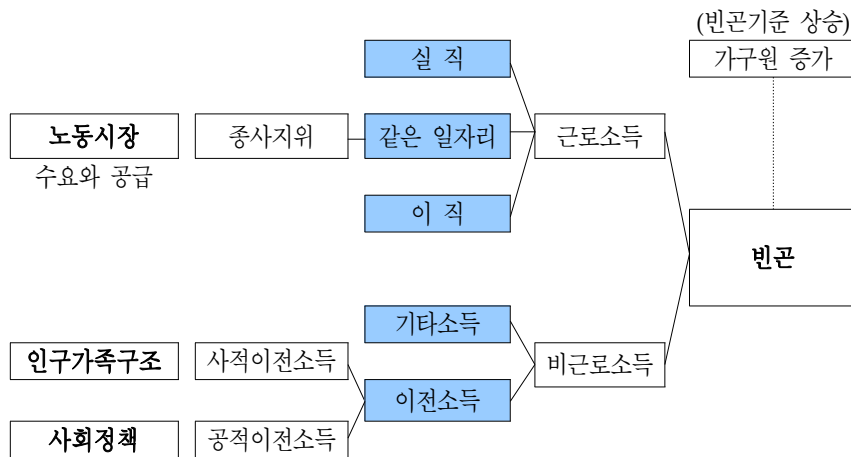
그렇다면 근로빈곤층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래 그림을 통해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빈곤진입 및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타소득은 자산(금융소득과 재산소득 등)과 이전소득으로, 이전소득은 다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37)} 둘째, 노동소득은 실업과 취업에

주36) 근로능력빈곤층의 관점에서 근로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노대명(2004)을 참조하기 바란다.

주37) 근로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비근로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재산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사적 또는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이전소득이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특히 노인계층의 빈곤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사적이전소득 또한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빈곤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임금근로 및 자영업)은 일자리의 질(고용조건과 급여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론 각 일자리는 단위임금과 노동시간에 따라 다른 근로소득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개인이 어떠한 일자리에 진입하는가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각 개인이 어떠한 일자리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림 6-4]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에 있어 노동문제의 분해



많은 선행연구결과는 근로빈곤층 발생원인을 ① 저임금(*low pay*), ②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③ 가구특성(*household characteristics*), ④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재범주화하면, 저임금·고용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취업경쟁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취업자 또는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을 예방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각각의 원인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근로빈곤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는 근로빈곤층의 발생이 개인특성 이상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부 업종에서의 고용감소가 근로빈곤층의 규모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감소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가 근로빈곤층의 업종별 분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가구규모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저임금노동자가 2인 가구에서 4인 가구로 증가하면, 소득이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더라도 비빈곤가구에서 빈곤가구로 변화할 수 있다. 반대로 가구원의 증가가 취업자의 유입을 의미한다면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가구원 수의 증감이 소득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능력이 없는 피부양자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소득능력이 있는 부양자가 증가하는지에 따라 소득지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특성 또는 취업능력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노동공급을 위한 경쟁에서 각 개인의 인적자본 및 직업능력 정도가 취업, 일자리의 질,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저학력·비숙련·직업경험부족 등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은 해당 가구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이것이 해당 가구의 반복적 빈곤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산업구조 변화와 근로빈곤

최근 근로빈곤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는 사안은 산업부문간 노동이동의 문제이다. 즉, 경제양극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어떠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실직자 또는 빈곤층이 어떠한 부문의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가구소득과 개인임금 그리고 산업부문간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구주의 종사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변동에 따른 빈곤층이 취업상태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접근방식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 시점을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과 2006년으로 할 때³⁸⁾, 양 시점에 소득계층별로 취업가구의 업종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1996년 25.6%에서 2006년 21.5%로 약 4.1%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에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빈곤가구 가구주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1996년 23.5%에서 2006년 13.6%로 약 10%에 이르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은 1996년 19.1%에서 2006년 15.5%로 약 3.6% 감소하였으나,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에서는 17.7%에서 19.6%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출현함에 따라 부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나, 생계형 소형창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과 달리, 비중이 증가하는 업종도 존재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숙박음식업을 들 수 있다. 1996년 5.0%에서 2000년 6.0%로 취업자 비중이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에서 취업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임금부문에서 감소하는 일자리가

주38)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는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업종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와 동일한 표본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점업 등의 부문에서 창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가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도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자 비중이다. 아래 표는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취업자 비중이 3.0%에서 2.4%로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자 중 비공식부문의 인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 업종과 일부 중첩되는 개인서비스업을 살펴보면, 1996년 3.6%에서 2006년 9.5%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서 일자리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그것이 저숙련노동자에게 일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임금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표 6-8〉 연도별 빈곤가구 취업가구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가구의 %)

가구주 종사업종	1996년 취업가구			2000년 취업가구			2006년 취업가구			1996-2006년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농업	0.2	2.4	0.4	0.3	3.2	0.6	0.4	1.2	0.5	0.2	-1.2	0.1
어업	0.2	0.6	0.2	0.2	0.4	0.2	0.1	0.1	0.1	-0.1	-0.5	-0.1
광업	0.1	0.0	0.1	0.2	0.1	0.2	0.1	0.0	0.1	0	0	0
제조업	25.8	23.5	25.6	23.9	16.9	23.3	22.5	13.6	21.5	-3.3	-9.9	-4.1
전기가스수도	0.6	0.2	0.6	0.4	-	0.4	0.4	-	0.3	-0.2	-	-0.3
건설업	13.3	18.9	13.7	11.1	15.4	11.4	11.7	15.5	12.1	-1.6	-3.4	-1.6
도소매업	19.2	17.7	19.1	17.0	22.3	17.5	14.9	19.6	15.5	-4.3	1.9	-3.6
숙박음식업	4.6	9.0	5.0	6.7	11.3	7.1	5.5	10.0	6.0	0.9	1	1
운수업	8.7	4.7	8.4	8.9	6.1	8.6	8.7	5.1	8.3	0	0.4	-0.1
통신업	3.4	1.3	3.2	1.0	0.3	1.0	1.2	0.4	1.1	-2.2	-0.9	-2.1
금융보험업	6.0	5.2	5.9	3.2	1.4	3.1	3.1	0.9	2.9	-2.9	-4.3	-3
부동산임대업	4.9	0.8	4.6	2.4	3.3	2.5	2.7	4.9	3.0	-2.2	4.1	-1.6
사업서비스업	4.8	2.1	4.6	5.8	3.9	5.7	7.7	6.4	7.5	2.9	4.3	2.9
행정사회보장	1.2	0.8	1.2	5.2	3.5	5.1	6.1	3.8	5.8	4.9	3	4.6
교육서비스업	4.6	6.2	4.7	4.7	1.5	4.4	4.6	2.1	4.3	0.0	-4.1	-0.4
보건복지사업	0.6	3.0	0.8	1.7	0.9	1.6	2.1	2.4	2.1	1.5	-0.6	1.3
오락문화운동	0.2	-	0.1	1.5	2.1	1.6	2.4	1.6	2.3	2.2	-	2.2
기타개인서비스	1.6	3.6	1.7	5.2	6.4	5.3	5.2	9.5	5.7	3.6	5.9	4
가사서비스업	-	-	-	0.3	1.1	0.3	0.4	2.7	0.6	-	-	-
국제의국기관	-	-	-	0.2	-	0.1	0.3	0.2	0.3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

주: 1) 취업가구는 가구내 취업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를 지칭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3. 가구특성과 근로빈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가구구성이나 가구특성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가구특성이 가구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취업에도 불구하고 지출증가로 인해 빈곤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로는 학령기 아동을 가진 여성가장가구처럼 보육으로 인한 취업제약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족해체가 심화되는 상황은 빈곤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가구형태는 취업자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취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피부양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업빈곤가구의 가구특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각 년도의 자료가 갖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포를 보여주는 한계가 있었다.

아래 <표 6-9>는 취업빈곤가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3.4명 → 3.31명 → 3.27명으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취업자 수는 1.54명 → 1.55명 → 1.52명 → 1.55명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취업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취업자 수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취업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96년과 2006년 사이 3.02명 → 3.03명 → 2.82명 → 2.786명 순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취업빈곤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를 보면, 1.19명 → 1.21명 → 1.24명 → 1.21명으로 명확한 감소세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어 가족구조를 보면, 단독가구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단독가구의 비율은 두 시점만을 보면 12.9%에서 10.6%로 감소가 분명하다. 하지만 네 시점에서의 비율은 이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상식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가장 및 남성가장가구의 변화 또한 명확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주거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자가 보유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취업빈곤가구가 새롭게 자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기존에 자가를 가진 가구가 퇴직, 실직,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취업가구 소득계층별로 월세비율의 변화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최근 월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주39)}

〈표 6-9〉 연도별 취업빈곤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단위: 명, 가구의 %)

	1996년 취업가구			2000년 취업가구			2003년 취업가구			2006년 취업가구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평균 가구원수(명)	3.43	3.02	3.40	3.34	3.03	3.31	3.33	2.82	3.27	3.22	2.76	3.17	
평균 취업자수(명)	1.56	1.19	1.54	1.59	1.21	1.55	1.55	1.24	1.52	1.59	1.21	1.55	
가족구조	단독가구	10.5	30.9	12.9	10.1	17.0	10.8	9.3	19.1	10.5	9.5	19.5	10.6
	노인가구주 가구	2.2	13.6	3.5	3.6	9.7	4.2	2.9	12.2	4.1	2.7	12.2	3.8
	유배우 가구	78.5	38.1	73.7	77.9	57.2	75.8	76.7	48.2	73.2	78.2	53.4	75.6
	남성가구주 가구	3.4	4.9	3.6	3.4	5.2	3.6	4.8	7.6	5.2	3.8	4.9	3.9
	여성가구주 가구	5.5	12.4	6.3	5.0	10.9	5.6	6.3	12.9	7.1	5.6	10.0	6.1
주거 점유 형태	자가	46.9	36.5	46.2	52.5	37.9	51.0	57.4	41.9	55.5	59.4	48.1	58.1
	전세	34.4	34.7	34.4	30.2	30.2	30.2	22.0	18.5	21.6	23.3	20.6	23.0
	월세	17.2	24.5	17.7	14.3	27.0	18.1	21.1	27.3	15.0	14.5	24.1	15.6
	기타(무상)	1.5	4.3	1.7	3.0	4.9	3.2	4.3	8.1	4.8	2.8	7.2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4. 빈곤과 취업의 연관관계

특정 가구가 빈곤상태에 진입할 위험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가구 내 취업자 수이다. 취업자 수의 변화는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성이 가장 중심으로 생계를

주39) 빈곤문제와 자산불평등의 문제, 노인빈곤층 중 높은 자가비율과 근로능력빈곤층 중 낮은 자가비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가 자산은 있으나 생활에 필요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와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을 형성하기 힘든 집단이 향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꾸러가는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가 1.52명(2003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세, 즉, 1996년과 2000년, 2003년 그리고 2006년 각각 3.40명, 3.31명, 3.27명, 3.17명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 평균 취업자 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상이한 네 시점에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가구 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1996년 6.0%에서 2006년 약 15.9%로 약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수치변화와 관련해서 1996년 자료의 신뢰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독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라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증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취업자가 1인인 가구와 2인 및 3인인 가구의 비중을 보면, 취업자가 2~3인인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 내 부차적 소득원의 역할을 하던 취업인구가 일정부분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수의 감소추세는 빈곤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 또한 연도별로 취업자 수의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점차 2~3인 가구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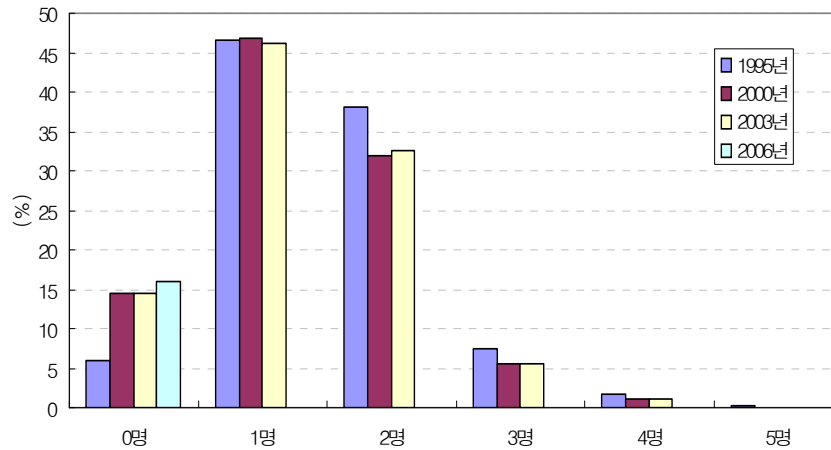
<표 6-10>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 비교

(단위: 가구의 %)

		취업자 수 비율				1996 ~ 2006 변화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취업자 수	0명	6.0	14.5	15.8	15.9	9.9
	1명	46.5	46.8	48.4	46.3	-0.2
	2명	38.0	32.0	29.8	31.5	-6.5
	3명	7.4	5.5	4.9	5.3	-2.1
	4명	1.7	1.1	0.9	0.9	-0.8
	5명	0.3	0.1	0.1	0.1	-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그림 6-5]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분포 비교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그리고 아래 표는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에 따라 해당 가구의 빈곤위험률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경우의 빈곤위험률은 1996년 54.0%에서 2000년 60.6%, 2003년 71.2%, 2006년 66.8%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들 중 2003년 수치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보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빈곤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개연성은 점점 많은 노인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금제도 등에 의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가가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개연성은 외환위기후 노인가구에 대한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의 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취업자 수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중 변화 또한 매우 흥미롭다. 취업빈곤층을 의미하는 취업자가 1인 이상 있는 빈곤가구는 매우 분명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 중 1996년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10.8%였다면, 2000년에는 14.9%, 2003년에는 17.3%, 2006년에는 16.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형적인 가구, 즉, 취업자가 1인인 가구에서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2인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취업자가 2인 이 있는 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이 3.3% → 5.1% → 6.5% → 5.2%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자가 3인 이상 있는 가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점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표 하단의 전체 빈곤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율의 절대치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은 가구 내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0명~6명으로 구분한 뒤, 세 시점에 걸친 빈곤위험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아래 표를 시각화한 것으로, 1996년 이후 빈곤위험률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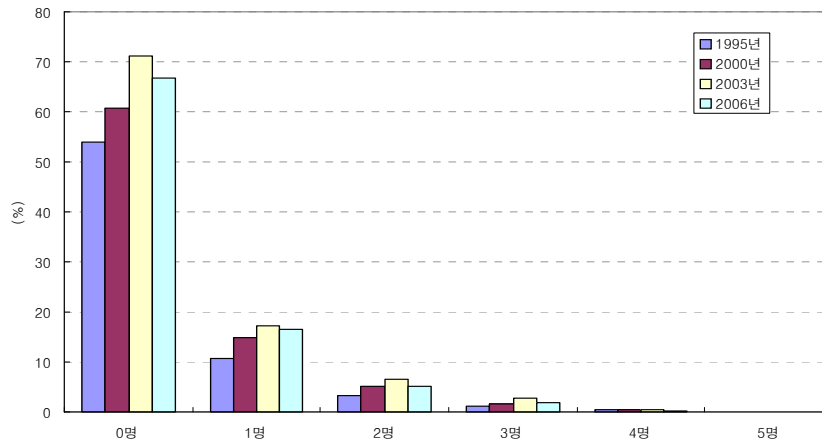
<표 6-11> 취업자 수에 따른 연도별 빈곤위험률

(단위: 가구의 %)

구 분		빈곤위험률				1996~2006 변화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취업 자 수 에 따 른 취 업 빈 곤 층 비 율	0명	54.0	60.6	71.2	66.8	12.8
	1명	10.8	14.9	17.3	16.6	5.8
	2명	3.3	5.1	6.5	5.2	1.9
	3명	1.1	1.7	2.9	1.9	0.8
	4명	0.5	0.5	0.4	0.2	-0.3
	5명	0.0	0.0	0.0	0.0	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그림 6-6] 취업자 수에 따른 연도별 빈곤위험률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5. 일자리의 질과 빈곤위험률

노동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논점은 취업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진입하는가에 따라 빈곤에 노출되는 위험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빈곤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식적 판단이 통계자료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원 중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빈곤가구의 비중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자료 모두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료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점에서 아래 표는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작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말해주는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주40)}

〈표 6-12〉 가구주의 취업상태 비중 변화

	1996년 취업가구			2000년 취업가구			2003년 취업가구			2006년 취업가구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가구주	58.6	42.0	57.4	43.4	10.3	40.1	49.9	9.6	45.2	59.1	31.7	56.1
상용직 임시직(1)	-	-	-	-	-	-	11.3	20.1	12.3	-	-	-
일용직(2)	-	-	-	-	-	-	11.3	42.6	14.9	-	-	-
취업상태 임시일용 (1+2)	9.4	34.2	11.2	21.8	45.4	24.2	22.6	62.7	27.2	7.4	25.0	9.4
고용주 자영자	2.4	0.4	2.2	10.5	4.6	9.9	4.6	1.3	4.2	2.3	0.3	2.0
무급종사자	-	-	-	0.6	1.0	0.6	0.2	0.5	0.2	-	-	-
기타(실직)	1.5	3.6	1.7	4.1	12.4	4.9	0.8	2.4	1.0	3.3	7.9	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96년과 2006년은 가구구분으로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추정하였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취업가구란 가구 내 취업자가 1인 이상인 가구를 지칭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주40) 참고로 현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는 가구소득 및 지출에 관한 항목과 가구원의 취업상태에 관한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활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가구 구성원의 종사지위가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어떠한 요인이 최근의 빈곤율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발견하기 힘들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태적으로 특정시점에서 취업상태와 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가구주 취업상태가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2003년 시점의 자료(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어떠한 종사지위가 빈곤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서는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순으로 빈곤위험률이 높아지고, 비임금근로자에서는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 취업자가 어떠한 일자리로 진입하는가에 따라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며,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최근의 임시직 노동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6-13〉 2003년 가구주의 취업상태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율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2003년 취업가구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전 체
상용직	97.5	2.5	100.0
임시직	81.1	18.9	100.0
일용직	67.0	33.0	100.0
고용주	96.4	3.6	100.0
자영자	87.7	12.3	100.0
무급종사자	73.0	27.0	100.0
전 체	88.4	11.6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6. 개인의 취업잠재력

앞서 어떠한 일자리로 진입하는지가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각 개인은 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원인은 공급측면에서 각 개인의 취업경쟁력 미약에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의 기술자격 보유율과 자격증의 수준은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41)} 아울러 교육수준과 직업경험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취업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노동시장 내에서 조기퇴직 등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취업빈곤가구 가구주 또한 평균연령이 44.97세 → 46.88세 → 50.21세 → 50.28세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취업빈곤가구는 직업이력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저숙련 부문에 종사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제조업부문 등 특정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직간접의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정규노동시장에 진입할 개연성 또한 낮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규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상향이동이 매우 힘든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에서 성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전체 가구주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빈곤가구의 경우에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네 시점에서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약 30~40%수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기존 노동시장 중 정규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직종차별이 존재하며, 저임금이 강세인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대부분이 직업경험이 적거나 없어 노동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주41) 노대명 외, 『2004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참고

이어 교육수준과 빈곤과의 관계 또한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 또한 교육수준과 빈곤위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아래 표 또한 대졸학력 이상 가구주 중 빈곤율이 저학력집단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표도 일정부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비중에서 대졸이상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 경향은 빈곤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 전체적인 학력과잉이 빈곤층에게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유무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래 표에서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장애유무와 관련해서, 장애가 있는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비율은 8.7%로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3.4%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더욱 분명한 격차를 나타내는데, 취업빈곤가구 가구주 중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34.1%로 나타나며, 이는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달리 표현하면, 취업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구의 상당수는 가구주가 장애나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개연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14〉 연도별 취업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 비교

(단위: 가구의 %)

		1996년 취업가구			2000년 취업가구			2003년 취업가구			2006년 취업가구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비빈곤	빈곤	전 체
가구주 평균 연령(세)		40.54	44.97	40.87	43.20	46.88	43.57	43.26	50.21	44.01	44.20	50.28	44.85
가구주 성별	남자	85.6	58.0	83.6	83.6	68.5	82.1	87.4	68.8	84.7	82.3	56.6	79.6
	여자	14.4	42.0	16.4	16.4	31.5	17.9	12.6	31.2	15.3	17.7	43.4	20.4
가구주 학력	무 학	0.7	4.4	1.0	1.2	8.8	2.0	1.2	9.9	2.1	0.8	8.2	1.6
	초졸 미만				1.2	4.6	1.5	0.7	3.8	1.1	1.0	2.6	1.1
	초졸	10.0	25.1	11.0	9.5	20.0	10.6	8.0	22.1	9.5	7.3	19.6	8.6
	중졸	15.9	20.5	16.2	14.0	19.7	14.5	11.4	18.3	12.1	11.6	18.8	12.4
	고졸	45.0	37.1	44.5	42.9	34.0	42.0	39.7	34.7	39.2	41.2	37.5	40.8
	전문대졸	8.7	6.4	8.6	9.5	5.8	9.1	8.7	3.5	8.2	11.8	6.3	11.2
	대졸	17.1	5.7	16.3	18.4	5.4	17.1	26.0	6.5	23.9	22.8	6.1	21.0
	대학원졸	2.5	0.9	2.4	3.3	1.6	3.2	4.3	1.1	3.9	3.5	0.9	3.2
장애	없 음	-	-	-	-	-	-	96.6	91.3	96.0	-	-	-
	있 음	-	-	-	-	-	-	3.4	8.7	4.0	-	-	-
만성 질환	없 음	-	-	-	-	-	-	86.3	65.9	84.1	-	-	-
	있 음	-	-	-	-	-	-	13.7	34.1	15.9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996년의 가구주 취업상태는 가구구분 자료가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재구성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사지위별로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이를 위해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가구 가구주의 종사지위와 인구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첫째,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자로 갈수록 55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며, 25세~44세의 근로연령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자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약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셋째,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자로 갈수록 사별과 이혼/별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유배우자 가구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일용직과 자영자 중 초졸 이하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와 장애유무 중 만성질환 보유자가 일용직, 자영자로 취업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장벽으로 인해 일용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5〉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종사지위별 인구학적 분포 (2003년)

		취업 빈곤가구 가구주					취업 빈곤가구 가구주					취업가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전체
연령	24세 미만	2.5	3.8	1.9	0.3	2.0	2.0	5.7	0.7	-	1.7	2.5	4.1	1.5	0.3	2.0
	25세~44세	69.0	51.2	41.6	47.3	58.7	60.8	41.2	35.2	35.5	39.5	68.7	49.5	39.5	45.7	56.4
	45세~54세	20.5	22.3	29.9	33.2	24.8	12.6	21.0	23.3	22.1	21.4	20.3	22.0	27.8	31.9	24.5
	55세 이상	8.1	22.7	26.5	19.1	14.5	24.6	32.1	40.8	42.4	37.4	8.5	24.4	31.2	22.2	17.2
성별	남	90.7	76.4	77.7	89.7	87.5	73.9	59.4	55.8	69.9	62.2	90.3	73.1	70.5	87.2	84.6
	여	9.3	23.6	22.3	10.3	12.5	26.1	40.6	44.2	30.1	37.8	9.7	26.9	29.5	12.8	15.4
혼인 상태	유배우	81.8	65.1	63.3	87.2	79.4	71.9	52.4	46.6	65.0	55.3	81.5	62.7	57.7	84.4	76.6
	사별	1.5	6.6	10.2	3.9	3.6	7.0	16.7	22.2	21.1	19.1	1.6	8.6	14.1	6.1	5.4
	이혼/별거	2.7	11.3	13.3	4.5	5.4	10.6	17.4	22.6	8.9	16.8	2.9	12.5	16.4	5.1	6.7
	미혼	14.0	16.9	13.2	4.4	11.6	10.6	13.6	8.6	4.9	8.8	13.9	16.3	11.8	4.4	11.3
교육 수준	초교 이하	3.7	13.0	26.6	9.4	8.6	17.6	26.7	45.0	38.8	36.5	4.1	15.5	32.8	13.1	11.8
	고교 이하	42.5	64.8	67.6	63.2	52.4	60.8	61.0	50.4	45.7	52.5	42.9	64.0	61.9	60.9	52.4
	전문대 이상	53.7	22.2	5.8	27.4	38.9	21.6	12.4	4.6	15.4	11.0	53.0	20.5	5.4	25.9	35.8
만성 질환	없음	92.2	84.4	79.4	84.7	88.2	83.4	71.4	64.0	64.0	67.8	92.0	81.9	74.3	82.1	85.8
	있음	7.8	15.6	20.6	15.3	11.8	16.6	28.6	36.0	36.0	32.2	8.0	18.1	25.7	17.9	14.2
장애 유무	없음	98.2	96.2	95.2	96.2	97.2	97.0	94.3	91.5	92.9	92.8	98.1	95.8	94.0	95.8	96.7
	있음	1.8	3.8	4.8	3.8	2.8	3.0	5.7	8.5	7.1	7.2	1.9	4.2	6.0	4.2	3.3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이어서는 아래 표는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두 소득집단(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을 100으로 하여,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는 취업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보면, 각 인구집단별로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령집단별로도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빈곤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낮으며, 그것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55세 이상 집단은 퇴직의 압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종사지위에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성별로는 빈곤가구 여성의 경우, 비빈곤가구 여성에 비해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별여성이나 이혼 및 별거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도 빈곤가구 여성은 일용직에 과반수 이상이 밀집된 반면, 비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모든 종사지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높은 경우 전 종사지위에 고르게 분포하고, 고졸이하인 경우 일용직과 자영업에 밀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만성질환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일용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6〉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종사지위별 인구학적 분포 (2003년)

		취업 비빈곤가구 가구주				취업 빈곤가구 가구주				취업가구 전체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연령	24세 미만	62.9	21.6	10.8	3.8	11.8	70.6	17.6	-	58.0	26.3	11.4	3.4	100.0
	25세~44세	59.2	10.0	8.1	17.8	15.1	21.6	39.1	21.8	55.7	10.9	10.6	18.1	100.0
	45세~54세	41.6	10.3	13.8	29.6	5.7	20.2	47.6	25.1	37.9	11.2	17.2	29.1	100.0
	55세 이상	28.0	17.9	20.9	29.1	6.5	17.8	47.8	27.6	22.7	17.7	27.5	28.8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8	24.3	45.7	12.5	15.1	22.4	100.0
성별	남	52.3	10.0	10.2	22.7	11.7	19.8	39.3	27.3	48.9	10.8	12.6	23.1	100.0
	여	37.2	21.5	20.4	18.2	6.8	22.2	51.2	19.3	28.6	21.7	28.9	18.5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8	24.3	45.8	12.5	15.1	22.4	100.0
혼인 상태	유배우	51.9	9.4	9.1	24.3	12.8	19.6	36.9	28.5	48.7	10.2	11.4	24.6	100.0
	사별	20.8	20.8	31.9	23.8	3.6	18.1	51.0	26.9	13.9	19.8	39.5	25.1	100.0
	이혼/별거	25.7	24.2	28.5	18.5	6.2	21.4	58.9	12.9	20.1	23.4	37.2	17.0	100.0
	미혼	60.7	16.6	13.0	8.3	11.8	32.0	42.7	13.5	56.2	18.0	15.8	8.8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8	24.3	45.7	12.5	15.1	22.4	100.0
교육 수준	초교 이하	21.9	17.3	35.3	24.2	4.7	15.1	54.1	25.8	15.8	16.4	42.0	24.8	100.0
	고교 이하	40.8	14.1	14.7	26.6	11.4	24.0	42.1	21.1	37.5	15.3	17.9	26.0	100.0
	전문대이상	69.6	6.5	1.7	15.5	19.4	23.4	18.5	34.2	67.8	7.1	2.3	16.2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9	24.3	45.7	12.5	15.1	22.4	100.0
만성 질환	없음	52.7	11.0	10.3	21.2	12.1	21.8	41.4	22.9	49.0	11.9	13.1	21.4	100.0
	있음	33.1	15.0	19.9	28.5	5.1	18.4	49.0	27.1	25.8	15.9	27.4	28.2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9	24.3	45.7	12.5	15.1	22.4	100.0
장애 유무	없음	50.9	11.3	11.2	21.9	10.2	21.0	43.2	24.3	46.4	12.4	14.7	22.2	100.0
	있음	32.4	15.3	19.1	29.6	4.1	16.6	52.4	24.1	25.5	15.9	27.2	28.0	100.0
	소 계	50.4	11.4	11.4	22.1	9.8	20.7	43.9	24.3	45.7	12.5	15.1	22.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7. 노동과 소득 그리고 빈곤

여기서는 종사지위에 따라 취업빈곤가구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것이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4개 시점의 자료 중 약 5년 간격의 세 자료만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로 가구주소득의 평균 값, 가구주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2003년의 경우 개인소득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가구주의 총 근로소득의 평균값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중위소득의 50%라는 상대빈곤선을 활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였음에도 각 시점별 소득의 증가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가구 가구주의 평균소득은 그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정체된데 반해,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가구 가구주의 임금소득 감소는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사업소득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임금일자리 증가에 따른 평균임금의 감소와 자영부문으로의 진입증가에 따른 평균값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과거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자영업자에 근로빈곤층이 더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타 가구원의 취업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주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빈곤가구 가구주의 소득기여비가 상대적으로 좀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빈곤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해 가구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6-17〉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평균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996년	2000년	2006년
가家主 총 소득 (만원)	비빈곤층	169.5	193.8	232.6
	빈곤층	54.2	56.5	53.5
	전체	161.3	181.3	213.4
가家主 임금소득 (만원)	비빈곤층	106.4	116.7	166.6
	빈곤층	43.2	36.9	33.5
	전체	101.9	109.5	152.3
가家主 사업소득 (만원)	비빈곤층	62.9	76.7	66.0
	빈곤층	10.8	19.3	19.9
	전체	59.1	71.5	61.1
가家主 부업소득 (만원)	비빈곤층	0.2	0.4	-
	빈곤층	0.1	0.3	-
	전체	0.2	0.4	-
가구소득 대비 가家主소득 비중 (%)	비빈곤층	79.4	63.3	76.3
	빈곤층	81.0	68.3	76.2
	전체	79.5	63.7	76.3
가구소득 대비 세금비중 (%)	비빈곤층	2.0	3.5	2.0
	빈곤층	1.6	4.5	1.2
	전체	2.0	3.6	2.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가家主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의 평균값과 그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2006년 시점에서도 절대금액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家主의 총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외환위기 직후 거의 모든 종사지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06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일정기간 기타 가주원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아래 표에 나타난 추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 소득감소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용주 → 자영업자 → 상용직 임금 근로자 순으로 조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각 집단의 조세부담은 외환위기이전 수준으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세부담이 정상화된 반면,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8〉 가구의 종사지위별 평균소득 및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996년	2000년	2006년
가구주 총 소득 (만원)	상 용 직	152.6	201.6	236.1
	임시/일용직	91.0	95.1	101.4
	고 용 주	318.1	367.1	286.2
	자영업자	195.6	153.5	175.2
	전 체	161.3	181.3	213.4
가구소득 대비 가구주 소득 비중	상 용 직	79.1	66.2	78.0
	임시/일용직	72.3	57.9	67.5
	고 용 주	85.6	68.4	81.4
	자영업자	82.9	63.4	73.5
	전 체	79.5	63.7	76.3
가구소득 대비 세금 비중	상 용 직	2.4	4.4	2.6
	임시/일용직	1.0	1.6	0.6
	고 용 주	3.2	6.7	1.6
	자영업자	1.4	2.9	1.0
	전 체	2.0	3.6	2.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가구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서 취업자 가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는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금액으로는 1996년 3만 2천원에서 2006년 14만 3천원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에서 5.5%로 증가하

었다. 그리고 이는 취업빈곤가구의 경우, 2.0%에서 1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료의 불안정성을 가정하더라도 비빈곤층에 비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주, 상용직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에 부담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금액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고용주 → 상용직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나며, 1996년 금액대비 증가율은 자영업자 → 고용주 → 상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9〉 가구주의 소득계층별 종사지위별 사회보장부담금 및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비

		1996년		2000년		2006년		1996년~2006년	
		금액 (만원)	가구 소득의 %	금액 (만원)	가구 소득의 %	금액 (만원)	가구 소득의 %	금액 변화	배율
소득 계층별	비빈곤층	3.3	1.8	10.4	3.4	15.5	4.9	12.2	4.7
	빈곤층	1.1	2.0	3.1	8.6	4.2	11.1	3.1	3.8
	전체	3.2	1.9	9.7	3.9	14.3	5.5	11.1	4.5
종사 지위별	상용직	4.0	2.3	14.1	4.5	16.6	5.3	12.6	4.2
	임시일용직	1.4	1.3	4.4	2.3	5.5	5.7	4.1	3.9
	고용주	4.1	1.4	10.8	4.1	17.8	6.9	13.7	4.3
	자영업자	2.1	1.1	6.9	4.4	10.9	5.4	8.8	5.2
	전체	3.2	1.9	9.7	3.9	14.3	5.5	11.1	4.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제 5 절 분석결과의 함의

빈곤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노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빈곤이 노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출발단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는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동과 빈곤의 관계에 대해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빈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노동 내부에서의 빈곤>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 물론 실업 등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극심한 빈곤을 야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빈곤상태로 빠져드는 새로운 빈곤층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초점은 왜 근로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과 빈곤의 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근로빈곤>의 개념에 보다 정제(精緻)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은 단순히 현재 취업하고 있는 모든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업과 실망실업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근로능력이 있는 많은 집단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빈곤가구에서 새로운 취업자의 출현이 빈곤위험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적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인식하기보다 잠재력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의 문제는 **Workability**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을 통해 암시하고자 하였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노동시장여건 또는 노동수요가 개인의 빈곤문제를 규정하는 매우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이다.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부문으로의 공급증가는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게서 발생하지만, 내용적으로 빈곤층의 진입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빈곤층은 사실상 경제활동 자체와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존재한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어떠한 부문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빈곤율의 증가, 그리고 빈곤정책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에 비해 자영부문 또는 비공식부문이 비대한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의 해소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공식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여건과 노동공급의 측면 외에도 “가구”라는 단위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가구가 노동공급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양가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단독가구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은 가구에 의

한 사적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많은 가구의 빈곤위험을 높이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노동 시장과 개인능력 외에도 가구라는 단위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주42)}

다섯째, 많은 근로능력자가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함으로써 빈곤상태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취업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은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일정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에서의 상하이동과 탈빈곤이 가능한 집단이며, 다른 일부는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상하이동을 기대하기 힘든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각 집단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그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즉, 획일적인 정책방안보다 대상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30대의 젊은 취업빈곤층에게는 새로운 기술취득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50대 이상의 취업빈곤층에게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야의 일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빈곤과 노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양질의 자료”에 대한 강한 욕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이 가구단위 소득중심 개념이라면, 노동은 개인단위 활동중심 개념이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연계시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축과정에서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패널자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Cross-Section) 자료라도 보다 활용도 높은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42)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매우 힘든 숙제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서비스 공급인력의 근로조건과 소득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란 공공부문의 투자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 말할 수 있다.

제 7장 빈곤 역동성 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한국에서 빈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게 진행된 바 있으나, 빈곤의 역동성을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빈곤 역동성(poverty dynamics)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률이나 진입률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빈곤탈출과 진입에 관련된 제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여 왔다. 대표적 선행 연구로는 이원익(1999), 금재호·김승택(2001), 황덕순(2001), 이병희·정재호(2002), 김교성·반정호(2004), 홍경준(2004), 구인회(2005a), 금재호(2006) 등이 있다.

홍경준(2004)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의 1차~5차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하고,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 이행률에 대한 이산시간위험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구인회(2005a)는 기존의 동태적 빈곤연구가 주로 빈곤진입과 탈출이라는 빈곤 이행과정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빈곤 지속기간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KLIPS 1차~6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주기를 구하고, 이산시간위험모형을 통해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동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빈곤층의 빈곤탈출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빈곤지속기간의 중요 결정요인은 가구주의 연령 및 성으로 파악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의 모든 면에서 장기빈곤의 경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고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며, 다음으로 장기빈곤 경향이 강한 집단은 비노인 여성 가구주 가구로 나타났다.

금재호(2006)는 KLIPS 1차~6차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도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하여 빈곤에 빠질 확률도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바로 벗어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임금근로자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과 최영(2006)도 KLIPS 2차~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취업자 가운데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의 결정요인으로는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 고용업종, 고용지위 등이었으며, 가구원수 및 연령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역동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저학력 가구주일수록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빈곤상태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 역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빈곤층의 이동에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즉, 빈곤으로 진입하는 층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반면 빈곤에서 탈피하는 층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빈곤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위 집단들의 구성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둔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일부 연구는 빈곤역동성 연구를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박능후·송미영(2006)은 KLIPS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이 귀속되어 있는 계반 가구유형별로 빈곤율을 파악하고,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동태성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구는 가구유형에 구분없이 비노인가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상당정도 빈곤동태성을 보인다. 또한 노인가구의 매년도 빈곤탈피

확률에 있어 가구유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인가구의 매년도 빈곤진입에는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43)}. 박재규(2003)는 KLIPS 2차~4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가구의 취업 및 근로소득여부가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해당 인구집단의 빈곤역동성을 특화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 전체적인 빈곤층의 이동에서 해당 인구집단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을 지닌다.

본 장에서는 빈곤의 진입 및 탈출이라는 빈곤동학의 결정요인에 관심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류된 가구유형별로 빈곤역동성의 상이점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는 빈곤탈출이나 빈곤진입의 결정요인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점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개별 요인들이 빈곤역동성에서 현실화되는 결과, 각 취약집단별 빈곤진입과 탈피의 규모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장은 빈곤으로 진입하는 집단과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 그리고 계속 빈곤에 남은 집단의 내부적 구성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가 노인가구주 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 등의 특정 유형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가구별 빈곤규모와 빈곤동학을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제 2 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한국에서 빈곤을 동태적으로 연구할 수 자료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먼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2003년부터는 전국가계조사)를 (거주지)패널데이터로 연

주43) 동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가구주+비노인 동거가족 가구, 비노인가구주+노인+동거가족 가구 등으로 가구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패널데이터 형식의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8년과 2003년에 전면적인 표본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빈곤의 역동성을 연구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주44)}. 또한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만이 가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1인 가구, 자영업가구, 무직가구 등의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빈곤에 대한 동태적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일명 노동패널)가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주45)}. KLIPS는 1998년부터 시작된 패널자료(1998년도의 조사에서는 1997년도에 해당되는 소득조사가 실시됨)로서 2006년 현재 제9차 웨이브 자료가 수집되었다. 현재 가용한 자료는 2004년도에 2003년도의 가구소득과 2004년의 개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한 제 7차 웨이브자료이다.

KLIPS자료는 소득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가구와 개인에 관련된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구성과 동태성을 파악하기에도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KLIPS의 소득자료가 통계청의 가계조사결과와 절대적인 수준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동방향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고 있어서 결과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KLIPS자료는 조사초기에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보다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사초기에는 소득의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도시가계조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바 있다(표 7-1 참조)^{주46)}.

주44) 이지연(2006)에 의하면 통계청 경제활동가구 패널표본의 경우 1998년을 기준으로 5년 후의 패널유지율이 가구기준 46.5%, 개인기준 36.7%였다.

주45) 물론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가 있으나 동 조사는 1997년 종료되어 최근의 빈곤동태를 연구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주46)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비근로자가구의 경우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평균소득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전국가계조사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21만 6천원임에 반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52만 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평균소득이 낮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KLIPS소득결과와 통계청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표 7-1〉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가구소득비교

(단위 : 만원, %)

년도	KLIPS(A)	도시가계조사(B)	(A/B)×100
1차 웨이브(1997년)	1,803	2,287	78.8
2차 웨이브(1998년)	1,928	2,133	90.4
3차 웨이브(1999년)	2,039	2,224	91.7
4차 웨이브(2000년)	2,205	2,386	92.4
5차 웨이브(2001년)	2,616	2,625	99.7
6차 웨이브(2002년)	2,730	2,792	97.8
7차 웨이브(2003년)	2,907	2,940	98.9

주: KLIPS의 소득개념 및 표본가구와 통계청의 소득개념 및 표본가구는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주의를 요함.

자료: 남재량 외(2006); 통계청, 2003년 도시가계연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 빈곤율의 경우에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KLIPS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7-2 참조). 남재량 외(2006)에서 KLIPS 전체가구를 이용하여 계산한 절대가구빈곤율은 1997년 24.3%를 기록하고, 1998년 25.9%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황덕순(2005)이 KLIPS를 사용하여 계산한 근로자가구의 절대개인빈곤율은 1997년 10.6%에서 1998년 17.0%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강석훈(2006)이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절대가구빈곤율은 1997년 4.43%에서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7.83%, 8.90%로 급등한 후 2002년까지 하락하다가 2003년부터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KLIPS를 이용하여 분석한 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의 추이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추정결과와 방향성이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주47)}.

주47) 보다 정확한 비교는 KLIPS에서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추출한 후 절대빈곤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표 7-2〉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절대 빈곤율 비교

년도	KLIPS-전체	KLIPS-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
1997년	24.3	10.6	4.43
1998년	25.9	17.0	7.83
1999년	22.4	12.5	8.90
2000년	21.4	11.8	6.49
2001년	17.3	6.6	5.28
2002년	17.6	-	4.36
2003년	18.3	-	5.67

주: 1) KLIPS의 소득개념 및 표본가구와 통계청의 소득개념 및 표본가구는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주의를 요함.

2) KLIPS전체는 남재량 외(2006), KLIPS-근로자가구는 황덕순(2005), 도시가계조사는 강석훈(2006)을 이용하였음.

3) 남재량 외(2006), 강석훈(2006)은 가구기준, 황덕순(2005)은 인구기준 빈곤율임.

자료: 남재량 외(2006), 황덕순(2005), 강석훈(2006),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홍경준(2004), 구인회(2005a)에서는 2000년 KLIPS의 중위소득의 40%에 해당되는 소득액을 2000년 빈곤선으로 설정한 다음, 기타 연도는 이 빈곤선을 실질화하여 절대빈곤율을 구한 바 있다(주48)주49).

한편, 모든 패널조사는 표본탈락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KLIPS도 예외는 아니다. 남재량 외(2006)의 분석에 의하면 1차 웨이브 원표본가구에 비하여 1차부터 7차 웨이브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으며(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1차 년도에는 17.7%를 차지하였으나, 계속 응답한 경우에는 33.4%를 차지함), 상대적으로 저학력계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7-3 참조).

주48) 홍경준(2004)에서는 가구규모별 절대적 빈곤선이 연간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 223만원, 2인 가구 380만원, 3인 가구 595만원, 4인 가구 831만원, 5인 가구 998만원, 6인 가구 1,010만원, 7인 가구 1,040만원, 8인 가구 이상은 1,119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주49) 구인회(2005)에서는 홍경준과 같은 방법으로 빈곤선을 설정한 후 KLIPS에서의 개인단위 절대빈곤율을 구하였는데, 1997년 17.4%, 1998년 16.3%, 1999년 14.7%, 2000년 14.1%, 2001년 10.7%, 2002년 10.2%로 나타났다.

〈표 7-3〉 1~7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명, %)

구분		1차 웨이브 원표본가구	1~7차 웨이브 계속 응답가구
전체		5,000(100.0)	2,867(100.0)
성별	남성	4,293(85.9)	2,357(82.3)
	여성	707(14.1)	508(17.7)
혼인 상태	기혼	4,657(93.1)	2,781(97.0)
	미혼	332(6.6)	86(3.0)
연령	30세 미만	380(7.6)	6(0.2)
	30대	1,356(27.1)	357(12.5)
	40대	1,379(27.9)	855(29.8)
	50대	984(19.7)	692(24.1)
	60세 이상	883(17.7)	957(33.4)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910(38.6)	1,298(45.3)
	고졸	1,819(36.1)	966(2.0)
	대학재학 및 중퇴	147(3.2)	54(2.0)
	전문대졸	241(4.8)	127(4.4)
	대졸 이상	882(17.5)	422(14.7)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2,229(44.6)	1,193(41.6)
	비임금	1,440(28.8)	1,440(29.7)
	미취업자	1,331(26.6)	822(28.7)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2) 7차년도: 해당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가구주가 원표본가구원이 아닌 98케이스는 제외하였음.

자료 : 남재량 외(2006), p. 37에서 재인용

한편, KLIPS와 전국가계조사의 표본구성도 차이가 난다. 다음의 〈표 7-4〉는 KLIPS에서 7개 웨이브 동안 계속 응답한 가구의 2003년도 현황과 2003년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표본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KLIPS 계속응답가구는 가구주 학력이 고졸미만인 경우의 구성비가 45.27%임에 반해 전국가계조사에서는 가구주 학력이 고졸미만인 경우가 24.3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구주학력을 기준으로 KLIPS의 고졸 미만 가구비율은 전국가계조사의 고졸미만 가구비율의 1.86배에 달하고 있다. 가구주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는 동 비율이 14.72%를 차지하나, 전국가계조사에서는 25.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LIPS에서 가구주 학력이 대학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국가계조사에서 대학 이상 가구 비율의 0.57배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 30세 미만인 경우가 0.21%를 차지하는 반면 전국가계조사에서는 5.91%에 달한다.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경우에도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는 동 비율이 12.45%에 불과하나, 전국가계조사에서는 30.7%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에는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는 동 비율이 24.14%이지만, 전국가계조사에서는 동 비율이 16.46%를 차지한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는 동 비율이 33.38%에 달하지만, 전국가계조사에서는 12.6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KLIPS 계속응답가구가 전국가계조사의 2.65배에 달하고 있다.

결국 KLIPS는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학력가구주인 경우가 많고, 또한 고연령가구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본구성에 따라 양자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에 비하여 KLIPS에서의 소득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KLIPS의 표본이나 전국가계조사의 표본은 모두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의 결과와 비교할 때 KLIPS 계속응답가구에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센서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가계조사에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센서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가구주연령이 50대인 경우에도 센서스의 비율은 KLIPS 계속응답가구와 전국가계조사의 사이에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국가계조사와 센서스의 비율이 차이가 큰 반면 KLIPS 계속응답가구의 경우에는 센서스의 비율과 유사하다. 물론 KLIPS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30대 이하의 연령층은 센서스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표본구성으로만 볼 때는 KLIPS와 전국가계조사 중에서 어떤 조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7-4〉 2003년도 KLIPS표본과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표본구성 비교

(단위: %)

구분		KLIPS 7개년도 계속응답가구 (A)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응답가구(B)	A/B	센서스 (2005)
가구주 학력	고졸 미만	45.27	24.31	1.86	-
	고등학교	35.58	43.11	0.83	
	전문대학	4.43	6.87	0.64	
	대학 이상	14.72	25.71	0.57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0.21	5.91	0.04	8.55
	30대	12.45	30.7	0.41	22.59
	40대	29.82	34.32	0.87	27.77
	50대	24.14	16.46	1.47	18.37
	60세 이상	33.38	12.61	2.65	22.30

주: KLIPS표본관련 내용은 남재량 외(2006)를 인용하였으며, 통계청 표본관련 내용은 2003년 전 국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임. 센서스는 통계청(2006)의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에 의함.

2. 빈곤율 추정방법과 소득의 정의

본 장에서는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하여, 균등화한 소득기준의 50%미만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계산하였다. 빈곤선을 설정할 때는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감안한 가중치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본 장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빈곤율은 개인빈곤율을 의미한다.

빈곤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소득기준을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일부 KLIPS를 사용한 연구에서 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관련 연구에서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사용하는 1차 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경상소득과 더불어 시장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빈곤의 동태성 측면에서 볼 때 시장소득의 변화에 의한 빈곤의 진입이나 탈출과 공적 이전소득

의 변화에 의한 빈곤의 진입이나 탈출은 매우 상이한 함의점을 가진다. 또한 시장소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빈곤정책의 수립에 큰 함의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전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상소득과 함께 시장소득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을 감소효과는 전체 연구 중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제8장과 중복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을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두 표본조사이고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연구 중 본 장의 연구에서만 패널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을 감소효과가 동일한 표본에서 년도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장의 이점을 살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8장의 분석에 보완적 정보를 제공한다. 단, 패널자료의 표본 크기가 작아서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을 제한된 수준에서 분석하는 한계를 가진다.

KLIPS의 경우 근로소득 등의 1차 소득이 이미 세후소득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LIS에서 사용하는 소득분류를 정확히 따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보험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액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구하기 어려우며, 1차 웨이브에서 사적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KLIPS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측정하는 경우에 LIS분류체계를 따르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본장의 분석에서는 LIS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과 자산소득(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및 기타 자산소득)의 합을 1차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1차 소득은 LIS의 1차 소득에서 소득관련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1차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합을 시장소득으로 정의하고,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을 경상소득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이 때에도 LIS의 정의

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은 소득세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국제적인 소득정의에 의하면 소득의 정의와 관련하여 규칙성이 없는 소득(예를 들면 통계청의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KLIPS를 이용한 빈곤연구에서는 가구소득에서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빈곤연구의 목적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KLIPS의 기타소득은 가구소득으로부터 제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분석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KLIPS의 가구소득 항목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과 부동산의 매매차익 등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소득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수입의 증가를 소득이라고 정의할 때 자본이득(또는 자본 손실)을 소득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KLIPS의 기타소득 및 주식, 채권,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가구소득으로 정의하였다^{주50)}.

3. 분석의 범주인 가구유형 구분

전체 연구에서 가구 유형은 위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단독가구, 노인가구, 유배우가구, 남성가구, 여성가구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가구(이하 단독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여성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가구를 구분하면 전체 연구의 가구 유형 구분 중에서 유배우가구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게 된다. KLIPS에서는 전체적인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성가구는 여성가구와 대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주50) 단 1차 웨이브에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세부항목들이 가용하지 않아서 자본이득을 별도로 계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웨이브 가구소득에는 동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이 때 세 개의 조건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여성 노인 단독 가구주 가구가 있을 수 있으며, 각기 다른 2개의 가구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7개의 가구유형이 존재 가능하지만, 표본수를 고려하여 3개의 기본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4개의 유형에 대한 해석을 추가한다(주51).

제 3 절 기초분석결과

다음의 <표 7-5> 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전 기간에서 가구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5차 웨이브에서 소득의 급증현상이 주목된다. 실제로 5차 웨이브(2001년 소득)에서는 전년대비 소득증가율이 시장소득의 경우 19.6%, 경상소득의 경우 20.4%에 달한다.

한편,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웨이브에서 4.88%, 3차 웨이브에서 2.20%, 4차 웨이브에서 2.13%, 5차 웨이브에서 2.81%, 6차 웨이브에서 5.80%, 7차 웨이브에서 5.79%를 차지하고 있어서, 5차 웨이브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

<표 7-5> 소득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차 웨이브	-	-	1,667.34	1,704.89
2차 웨이브	1,622.21	1,464.97	1,705.50	1,449.52
3차 웨이브	1,803.31	1,544.54	1,843.91	1,554.01
4차 웨이브	1,961.31	1,942.54	2,004.09	1,918.53
5차 웨이브	2,345.31	2,495.88	2,413.12	2,520.29
6차 웨이브	2,423.84	2,376.92	2,573.19	2,537.17
7차 웨이브	2,585.01	2,583.47	2,743.86	2,560.77

주: 1~7차 웨이브를 모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임.

주51) 이러한 유형 외에 장애인가구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KLIPS에서는 장애여부에 대한 자료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가구 유형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1~7차 웨이브를 모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50%의 소득수준은 다음의 <표 7-6> 과 같다. 199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단순평균증가율은 2000년 0.13%, 2001년 3.0%, 2002년 3.7%, 2003년 2.8%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추정된 빈곤선의 증가율은 2000년 9.1%, 2001년 22.3%, 2002년 1.74%, 2003년 8.34%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추정된 빈곤선의 증가율은 2000년 11.1%, 2001년 20.0%, 2002년 5.9%, 2003년 8.3%이다.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증가율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빈곤선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며, 변동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에 나타난 빈곤선의 급증은 KLIPS에서 2001년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하여 20%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7-6> 빈곤선 추정(연간소득)

(단위 : 만원)

구분	시장소득 중위값	경상소득 중위값	시장소득 중위값 50%	경상소득 중위값 50%
1차 웨이브	804.98	804.98	402.49	402.49
2차 웨이브	780.00	813.00	390.00	406.50
3차 웨이브	900.00	900.00	450.00	450.00
4차 웨이브	981.50	1,000.00	490.75	500.00
5차 웨이브	1,200.00	1,200.00	600.00	600.00
6차 웨이브	1,220.89	1,270.17	610.45	635.09
7차 웨이브	1,322.72	1,375.00	661.36	687.50

주: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제 4 절 빈곤율 변화와 빈곤회수

<표 7-6> 에서 제시된 빈곤선을 기준으로 전체빈곤율과 유형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가 <표 7-7>, <표 7-8>, <표 7-9> 에 제시되어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빈곤율은 1997년 20.75%에서 1998년 21.01%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는 다시 17.76%로 하락한다. 이후 2000년에 20.36%로 증가한

후 2001년에는 18.03%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나는 빈곤율은 대개 1997년에 비해 1998년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하고 이러한 추세가 1999년까지 지속된 다음 2000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KLIPS에서는 1997년과 1998년의 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1999년부터 빈곤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계조사와 KLIPS의 경우 표본구성이 상이하고, 둘 다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자료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에 대하여 선택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KLIPS의 조사시기가 대체로 다음 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조사된 소득이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당해 년도 소득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응답자들이 비록 설문서에서는 전년도 소득으로 질문하였지만, 당해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면 도시가계조사결과와 KLIPS조사결과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추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가계조사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KLIPS에서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빈곤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 빈곤율에 비하여 여성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 빈곤율의 평균은 19.5%임에 반해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45.5%,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59.7%,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57.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빈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여성가구가 높았다. 한편, 전 기간 평균 빈곤율은 여성 단독 가구주의 경우에는 75.6%, 노인 단독 가구주의 경우에는 88.1%, 여성 노인 가구주의 경우에는 73.8% 그리고 여성 노인 단독가구주의 경우에는 89.9%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율의 경우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는 0.07로 나타났지만, 여성가구의 빈곤율의 경우에는 0.08, 단독가구 빈곤율의 경우에는 0.14, 노인가구주의 경우에는 0.0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에 비하여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 빈곤율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 기간 전체 빈곤율은 18.2%이다. 이에 비해 여

성가구인 경우에는 42.2%,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55.7%, 노인가구인 경우에는 50.6%로 나타나 역시 전체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빈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가구, 여성가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 기간 평균 빈곤율은 여성 단독 가구주의 경우에는 70.7%, 노인 단독 가구주의 경우에는 82.5%, 여성 노인 가구주의 경우에는 69.2% 그리고 여성 노인 단독가구주의 경우에는 84.8%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율의 경우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는 0.09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빈곤율의 경우에는 0.09, 단독가구주 빈곤율의 경우에는 0.11, 노인가구주의 경우에는 0.04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변이계수보다 노인가구의 변이계수가 컸으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의 변이계수보다 노인가구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빈곤율을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1999년 2.43%p, 2000년 1.27%p, 2001년 1.07%p, 2002년 1.71%p, 2003년 2.14%p, 그리고 2004년 2.42%p로 나타났다. 동효과는 2001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의 절대적 효과는 3대 취약계층 중에서 노인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 기간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의 평균은 1.84%p이지만,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8.75%p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단독가구주의 경우에 4.65%p였으며,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3.79%p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가장 작은 연도는 2001년이지만, 실제 3대 취약가구에서 빈곤율 감소효과가 가장 작은 연도는 2000년으로 나타나는 점도 주목된다⁵²⁾. 이는 2000년의 경우에는 IMF외 환위기가 정점을 막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3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주52) 실제로 여기에서 2000년이라 함은 2000년도에 조사한 1999년의 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최저점을 지나지만, 3대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2000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돌입한 시기이며,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7〉 전체 및 유형별 빈곤율(시장소득 기준)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전체	20.75	21.01	17.76	20.36	18.03	19.85	20.52
여성가구주 가구	44.15	45.32	38.36	49.04	47.29	47.45	46.80
단독가구	47.90	58.63	51.24	64.70	58.06	69.88	67.71
노인가구주 가구	49.53	60.50	54.65	55.46	59.77	62.72	58.02
여성 단독가구	60.85	77.54	65.33	80.02	75.08	85.90	84.34
노인 단독가구	79.58	92.57	77.79	89.38	87.56	97.20	92.34
여성 노인가구	71.31	78.63	64.98	74.77	73.91	79.45	73.64
여성 노인 단독가구	79.85	92.16	79.78	92.18	91.32	97.48	96.16

〈표 7-8〉 전체 및 유형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전체	20.75	18.58	16.49	19.29	16.32	17.71	18.10
여성가구주 가구	44.15	36.79	37.09	46.84	43.79	44.32	42.70
단독가구	47.90	49.79	50.88	60.11	56.73	63.69	61.10
노인가구주 가구	49.53	47.92	51.79	51.19	51.39	50.58	45.76
여성 단독가구	60.85	65.61	64.81	73.94	73.07	80.07	76.33
노인 단독가구	79.58	80.01	76.90	82.22	85.97	88.62	84.16
여성 노인가구	71.31	68.10	63.45	69.47	71.22	74.44	66.03
여성 노인 단독가구	79.85	80.07	78.80	84.27	89.50	92.13	89.06

〈표 7-9〉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전체	-	2.43	1.27	1.07	1.71	2.14	2.42
여성가구주 가구	-	8.53	1.27	2.20	3.50	3.13	4.10
단독가구	-	8.84	0.36	4.59	1.33	6.19	6.61
노인가구주 가구	-	12.58	2.86	4.27	8.38	12.14	12.26
여성 단독가구	-	11.93	0.52	6.08	2.01	5.83	8.01
노인 단독가구	-	12.56	0.89	7.16	1.59	8.58	8.18
여성 노인가구	-	10.53	1.53	5.30	2.69	5.01	7.61
여성 노인 단독가구	-	12.09	0.98	7.91	1.82	5.35	7.10

주: 1차 년도를 기준으로 각 가구에 해당하는 표본가구수는 전체 2,888가구, 여성가구주가구는 392가구, 단독가구는 244가구, 노인가구주는 361가구, 여성단독가구는 160가구, 단독노인가구는 80가구, 여성노인가구는 104가구, 여성단독노인가구는 76가구임^{주53)}.

다음의 〈표 7-10〉 〈표 7-11〉은 가구 유형별 빈곤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들은 49.1%이다. 1년간 빈곤을 경험한 개인은 17.2%이며, 7년 모두 빈곤층에 속했던 개인들은 4.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의 비율이 23.4%임에 반해, 빈곤경험기간이 1년부터 6년인 경우가 대체로 10%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7년 동안 모두 빈곤층에 속해있던 개인들이 18.1%에 이른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21.8%임에 반해, 6년 동안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13.4%, 7년 동안 모두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32.2%에 달한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12.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6년 동안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19.8%, 7년 동안 모두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25.4%에 달한다. 3대 취약가구가 빈곤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빈곤에 속하게 되면 빈곤

주53)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층에 속한 가구는 692가구였으며, 여성가구, 단독가구 또는 노인가구 중에서 빈곤층에 속한 가구는 669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가구 중에서 이러한 3대 취약계층의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단순비율은 96.7%에 달하였다.

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개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들은 50.5%이다. 1년간 빈곤을 경험한 개인은 17.9%이며, 7년 모두 빈곤층에 속했던 개인들은 3.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23.2%임에 반해, 빈곤경험기간이 1년부터 6년인 경우가 대체로 10%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7년 동안 모두 빈곤에 속해있던 개인들이 15.3%에 이른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서 7개년 동안 모두 빈곤상태에 있던 비율이 2.8%p가 하락하였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22.1%임에 반해, 6년 동안 빈곤에 속했던 비율이 12.7%, 7년 동안 모두 빈곤에 속했던 비율이 28.6%에 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서 7개년 동안 모두 빈곤상태에 있던 비율이 3.6%p가 하락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15.1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6년 동안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14.1%, 7년 동안 모두 빈곤층에 속했던 비율이 21.2%에 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서 6년 동안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이 5.75%p, 7년 동안 모두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이 4.1%p 하락하였다(주54).

주54) 이외에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7년 동안 모두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여성단독가구의 경우 44.8%, 단독노인가구의 경우 65.0%,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53.4%, 여성단독노인가구의 경우에는 66.7%에 달한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7년 동안 모두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여성단독가구의 경우 39.9%, 단독노인가구의 경우 62.4%,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46.1%, 여성단독노인가구의 경우에는 63.9%에 달한다. 이러한 수준은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큰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3대 취약계층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은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10〉 전체 및 유형별 빈곤횟수(시장소득 기준)

(단위: %)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체	49.11	17.22	9.72	6.76	5.79	3.34	3.94	4.10
여성가구주 가구	23.35	10.61	11.80	9.01	10.38	8.17	8.60	18.09
단독가구	21.82	6.96	7.50	5.35	5.24	7.51	13.41	32.20
노인가구주 가구	12.75	4.53	9.71	7.23	10.01	10.61	19.81	25.35
여성 단독가구	6.26	2.90	6.61	6.44	5.99	8.44	18.52	44.84
노인 단독가구	0	0	1.23	2.60	3.50	5.97	21.69	65.01
여성 노인가구	6.83	1.46	7.12	2.47	5.92	5.35	17.45	53.40
여성 노인 단독가구	0	0	1.29	2.72	3.66	5.04	20.62	66.68

〈표 7-11〉 전체 및 유형별 빈곤횟수(경상소득 기준)

(단위: %)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체	50.50	17.91	9.96	7.00	4.99	3.15	3.01	3.48
여성가구주 가구	23.21	12.20	12.09	10.36	11.76	7.44	7.64	15.30
단독가구	22.10	8.46	8.27	6.46	6.78	6.65	12.66	28.62
노인가구주 가구	15.13	8.44	8.66	11.03	10.44	11.03	14.06	21.21
여성 단독가구	6.26	5.04	8.36	7.55	7.63	7.84	17.38	39.94
노인 단독가구	0	2.99	2.45	5.87	3.82	8.78	13.73	62.36
여성 노인가구	6.83	3.07	7.78	3.62	8.84	8.53	15.24	46.09
여성 노인 단독가구	0	3.13	2.56	4.93	3.99	8.03	13.46	63.91

제 5 절 빈곤탈출과 진입

다음의 〈표 7-12~15〉는 2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주55). 먼저 〈표 7-12〉, 〈표 7-13〉을 기초로 2차 웨이브에서 3차 웨이브로의 이전과정을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체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개인들의 구성비는 11.36%,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들의 구성비는 9.66%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주55) 1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2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웨이브별 변화상황을 분석하였다.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45.97%였다. 또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7.35%,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71.63%로 나타났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9.31%였다.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31.17%,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14.15%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31.23%였다. 또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9.15%,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45.53%로 나타났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16.73%였다. 전체 가구에 비하여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45.05%,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13.58%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23.17%였다. 또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4.80%,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36.57%로 나타났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11.60%였다.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불과하며,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29%p 높다.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47.93%,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12.57%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20.78%였다. 또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9.63%,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29.87%로 나타났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4.37%였다.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불과하며,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체 개인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9.61%,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8.98%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48.31%였다. 또한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7.70%,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73.71%로 나타났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9.46%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전체 구성비에서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11.36%에서 9.61%로 감소하고,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비율이 71.63%에서 73.71%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빈곤층의 비율이 하락하고,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비빈곤층으로 변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빈곤층에 남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들의 구성비가 여성가구의 경우 31.17%에서 26.35%로 감소하고, 단독가구의 경우 45.05%에서 39.63%로 감소하며,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47.93%에서 38.10%로 감소한다. 이에 반해 전체 가구 중에서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들의 구성비가 여성가구의 경우 45.53%에서 50.87%로 증가하고, 단독가구의 경우 36.57%에서 40.40%로 증가하며, 노인가구의 경우 29.87%에서 35.17%로 증가한다.

한편, 주목되는 점은 공적이전소득의 차이로 인해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31.23%였으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 비율이 28.39%로 하락한다. 또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16.73%이지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 비율이 19.51%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와 단독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서 당해 연도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

은 취약계층이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데 공적이전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경우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의 탈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12〉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3차 웨이브, 시장 소득 기준)

(단위: %)

구분	빈곤→빈곤	빈곤→비빈곤	비빈곤→빈곤	비빈곤→비빈곤
전체	11.36	9.66(45.97)	7.35<9.31>	71.63
여성가구주 가구	31.17	14.15(31.23)	9.15<16.73>	45.53
단독가구	45.05	13.58(23.17)	4.80<11.60>	36.57
노인가구주 가구	47.93	12.57(20.78)	9.63<24.37>	29.87
여성 단독가구	61.65	15.89(20.50)	4.75<21.14>	17.71
노인 단독가구	80.72	11.85(12.80)	4.60<61.93>	2.83
여성 노인가구	65.08	13.55(17.24)	3.45<16.14>	17.92
여성 노인 단독가구	79.65	12.51(13.58)	4.85<61.93>	2.98

〈표 7-13〉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3차 웨이브, 경상 소득 기준)

(단위:%)

구분	빈곤→빈곤	빈곤→비빈곤	비빈곤→빈곤	비빈곤→비빈곤
전체	9.61	8.98(48.31)	7.70<9.46>	73.71
여성가구주 가구	26.35	10.44(28.39)	12.83<19.51>	50.87
단독가구	39.63	10.17(20.41)	9.81<19.53>	40.40
노인가구주 가구	38.10	9.83(20.51)	16.90<32.46>	35.17
여성 단독가구	53.87	11.74(17.90)	11.89<24.57>	22.49
노인 단독가구	73.15	6.87(8.58)	11.03<55.20>	8.95
여성 노인가구	63.27	15.36(19.54)	3.45<16.14>	17.92
여성 노인 단독가구	72.83	7.25(9.06)	10.47<52.55>	9.45

이러한 분석결과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일 수도 있다. 보다 장기적인 빈곤상태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2차 웨이브와 7차 웨이브에서의 빈곤상태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대상 중에서 2차 웨이브의 빈곤층

에서 7차 웨이브에도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11.24%이며,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에서 탈출한 개인의 구성비는 9.78%이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한 비율은 46.53%이다.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개인의 구성비는 11.88%이며,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는 67.11%이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율은 15.04%였다. 2차 및 3차 웨이브와 비교할 때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거나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할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개인의 구성비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7.35%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1.88%로 증가하였다.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9.31%였으나, 2차 및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5.0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구성비도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의 71.63%에 비하여, 2차 및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67.11%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빈곤층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구성비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31.17%였으나, 2차 및 7차 웨이브 사이에서 32.47%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4.15%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2.85%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9.15%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6.28%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비중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의 45.53%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38.89%로 하락하였다. 특히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16.73%를 기록하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29.78%로 대폭 증가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가구가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구성비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45.05%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53.13%로 나타나 8%p 가량 증가하였다.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3.58%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5.51%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4.80%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9.59%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비중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의 36.57%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31.77%로 하락하였다. 특히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11.60%를 기록하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23.19%로 대폭 증가하였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여성가구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구성비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47.93%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51.03%로 나타나 4%p 가량 증가하였다.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2.57%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9.47%로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개인의 구성비는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9.63%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18.23%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남는 개인의 비중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의 29.87%에서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21.27%로 하락하였다. 특히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24.37%를 기록하였으나,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46.15%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단독가구나 여성가구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비중은 여성가구

의 경우 26.35%, 단독가구는 39.63%, 노인가구는 38.10%였다. 이에 비해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비중은 각각 24.06%, 43.59%, 37.21%로서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와 비교할 때 여성가구는 2.29%p, 단독가구는 3.96%p가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0.89%p 감소하였다.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한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여성가구는 28.39%, 단독가구는 20.41%, 노인가구는 20.51%였으며,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각각 34.62%, 12.47%, 22.36%를 기록하였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탈출비율이 대폭 하락하였으나, 여성가구와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각 6.23%p, 1.85%p가 감소하였다. 최근에 올수록 공적이전소득이 여성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사이에서 여성가구는 19.51%, 단독가구는 19.53%, 노인가구는 32.46%였으며,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에서는 각각 32.64%, 32.07%, 37.87%를 기록하였다. 여성가구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13%p, 12.54%p가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5.41%p가 증가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중은 노인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와 단독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7-14〉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7차 웨이브, 시장 소득 기준)

(단위: %)

구분	빈곤→빈곤	빈곤→비빈곤	비빈곤→빈곤	비빈곤→비빈곤
전체	11.24	9.78(46.53)	11.88<15.04>	67.11
여성가구주 가구	32.47	12.85(28.35)	16.28<29.78>	38.89
단독가구	53.13	5.51(9.39)	9.59<23.19>	31.77
노인가구주 가구	51.03	9.47(15.65)	18.23<46.15>	21.27
여성 단독가구	72.82	4.72(6.09)	10.66<47.47>	11.80
노인 단독가구	91.58	1.00(1.08)	6.30<84.81>	1.13
여성 노인가구	73.24	5.39(6.86)	10.45<48.92>	10.91
여성 노인 단독가구	91.11	1.05(1.14)	6.65<84.81>	1.19

〈표 7-15〉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시간별 변화(2차 웨이브→7차 웨이브, 경상 소득 기준)

(단위: %)

구분	빈곤→빈곤	빈곤→비빈곤	비빈곤→빈곤	비빈곤→비빈곤
전체	8.96	9.63(51.82)	11.34<13.93>	70.07
여성가구주 가구	24.06	12.74(34.62)	20.63<32.64>	42.57
단독가구	43.59	6.21(12.47)	16.10<32.07>	34.10
노인가구주 가구	37.21	10.72(22.36)	19.72<37.87>	32.25
여성 단독가구	59.51	5.70(9.69)	19.47<56.62>	14.92
노인 단독가구	76.48	3.54(4.42)	15.41<77.10>	4.58
여성 노인가구	67.53	11.11(14.12)	9.97<46.68>	11.39
여성 노인 단독가구	77.46	2.62(3.27)	15.09<75.75>	4.83

주: ()안은 빈곤층을 기준으로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한 비율을 의미함. < >는 비빈곤층을 기준으로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율을 의미함.

제 6 절 분석결과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 노인가구, 단독가구 등을 3대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가구들의 빈곤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KLIPS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OECD균등화지수를 이용한 상대빈곤율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층가구 중 96.7%가 여성가구, 단독가구 또는 노인가구였다(단순 빈도기준). 전체 가구에 비하여 여성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은 전체 개인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았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7년간 평균 빈곤율은 18.18%였으나, 여성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는 각각 42.24%, 55.74%, 46.74%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3대 취약계층 중에서 평균빈곤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단독가구였으며, 노인가구, 여성가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변이계수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독가구가 빈곤상태변화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상태변화가 가장 작아서 노인가구의 빈곤율 고착화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의 경우 분석기간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의 비중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50.50%를 차지하였으나, 동 비중이 여성가구는 23.21%, 단독가구는 22.10%, 노인가구는 15.13%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분석기간 7년의 모든 년도 동안 빈곤층에 속했던 개인의 비중은 전체 개인의 경우에는 3.48%에 불과하였으나, 여성가구는 15.30%, 단독가구는 28.62%, 노인가구는 21.21%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3대 취약계층의 빈곤지속성은 전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빈곤지속성의 정도는 단독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2차 웨이브 이후 5년 후인 7차 웨이브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개인에 비하여 3대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중이 작으며,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2차와 7차 웨이브 사이의 빈곤층 중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중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개인의 경우에는 51.82%에 달하였으나, 여성가구는 34.62%, 단독가구는 12.47%,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22.36%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비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중은 전체 개인의 경우 13.93%를 기록하였으나, 여성가구는 32.64%, 단독가구는 32.07%, 노인가구는 37.87%를 기록하였다.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탈출하는 비율은 여성가구, 노인가구, 단독가구의 순서였으며,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노인가구, 여성가구, 단독가구의 순서였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3대 빈곤취약가구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KLIPS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여성가구, 노인가구, 단독가구의 수준에서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성노인가구, 여성단독가구 또는 노인단독가구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층의 비빈곤층으로의 탈출확률, 또는 비빈곤층의 빈곤층으로의 추락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KLIPS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다.

제 8 장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제 1 절 분석의 목적과 의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빈곤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기존 빈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태성·손병돈, 2002; 구인회, 2004; 김교성, 2003). 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빈곤상황은 IMF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다소 개선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빈곤상황이 개선되는 시기에도 IMF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개선되지는 못하였다(김교성, 2003).

이렇게 IMF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을 크게 악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전 근로자의 확대, 경로연금, 장애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연금의 전 국민으로 확대 및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점증 등과 같이 한편으로 IMF 경제위기의 결과로 실업자, 빈곤자의 증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IMF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같이 시간의 지남에 따른 제도 성숙의 결과로 수급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측면 또한 있다. 예산으로 봐도 1997년 이후 사회복지장 예산의 증가 정도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가파르다(보건복지부, 2005).

이렇게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상황 및 사회복지장제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에서 최근까지 빈곤상황 및 사회복지장제도의 분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빈곤율 추

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등 대 빈곤정책의 확대 추이 및 분배 정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빈곤율의 추이에 관한 연구들도 주로 IMF 전후 시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교성, 2003; 박찬용·김진욱·김태완, 1999; 이정우·이성립, 2001), 2000년대 초반 이후의 빈곤추이를 볼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대 빈곤정책의 확대 추이 및 수혜 구조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도 주로 특정 시점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 연구들이거나 2000년대 초반 시기 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홍경준, 2003; 박능후 외, 2003; 박순일·황덕순·최현수, 2001), IMF 경제 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빈곤 상황을 볼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소득의 빈곤집단별 분배나 인구집단별 분배 상황을 2000년대 이후 최근 시기까지 추이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장은 IMF 경제위기 전후 시점부터 가장 최근인 2006년 상반기 동안 대빈곤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소득의 수혜구조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IMF 직전 시기인 1996년, IMF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2000년, 다시 빈곤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2003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6년 상반기 시점 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 소득의 수혜구조의 비교분석은 빈곤수준별 집단과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한 주요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빈곤 내부의 어느 부분으로 빈곤정책의 효과가 파급되었는가를 초점으로 한다.

제 2 절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년도에 조사한 국민생활실태조사(2003),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조사 2006년 1, 2분기 자료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가계를 대상으

로 한 거의 유일한 조사이며, 소득조사가 소득의 원천별로 비교적 상세히 이루어져 IMF 전후 시기 전국 빈곤 상황 비교 및 사회보장 소득의 수혜구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사자료라 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가 2000년 조사를 끝으로 중단됨으로써 그 이후 시기의 분석에는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와 통계청의 가계조사(2006년 1, 2분기)를 이용하여야만 하였다. 이 자료들은 모집단과 표본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유사성을 지니며 소득자료도 비교적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조사 자료의 경우 연간 자료가 아니라 1, 2분기만 포함한 자료라는 점에서 앞의 가구소비실태조사나 국민생활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소득정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반기 소득변화가 소득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소득정보와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6년 가계조사 자료는 사회보장소득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고, 사회보장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부분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2000)와 상이하⁵⁶⁾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유형을 포함한 전국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거의 유일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최근 빈곤상황을 분석하는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빈곤선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위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기타의 방식을 준용하여 빈곤을 판정한다. 하지만 분석의 목적 상 경상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도 기준 소득으로 사용한다.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하는 주요 분석 지표들은 사회보장 급여의 수혜율, 집단별 평균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의 집단별 점유율,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집단별 빈곤탈피율 등이다. 사회보장 수혜율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정도를 절대적인 방

주56) 뒤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조사 항목이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와 달리 일부 항목이 빠졌거나 불완전하게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각 집단에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100으로 할 때, 각 집단에 속한 가구 중 사회보장 급여를 수혜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로 측정된다. 집단별 평균 사회보장소득은 사회보장소득을 수혜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수혜가구의 평균 사회보장소득으로 측정된다.

사회보장소득의 집단별 점유율은 전체 사회보장 수혜가구가 수혜한 사회보장소득의 총액을 100으로 할 때, 각 분석집단에 속한 사회보장 수혜가구의 사회보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점유정도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집단별 빈곤탈피율은 사회보장소득 포함전 소득에 사회보장소득을 더할 경우 빈곤에 탈피하는 가구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3. 소득 및 사회보장소득^{주57)}에 대한 정의

본 장에서 대 빈곤정책 프로그램의 수혜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득 개념은 시장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공적 이전소득인 사회보장 소득 개념을 아울러 사용할 것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전체를 합하면 본 연구의 여타의 장에서 기준이 되는 경상소득과 동일하다.

가. 시장소득의 정의

시장소득은 1차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월 시장소득이고, 이것을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조정한 조정 시장소득(월 가구시장소득/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시장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된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수증보조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합, 사업소득 합, 농림축어업소득 합, 부업소득 합, 재산소득 합, 사적보조금 합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시장소득은 순 근로소득의 합, 농림축산업 순소득, 어업경영주 순소득, 전체 부업소득, 재산소득, 민

주57) 본 장의 모든 소득은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간 보험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가계조사에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을 합산한 것이다.

나. 사회보장소득의 정의 및 분류

본 장에서 사회보장소득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로 받은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되며, 사회보장소득은 월 가구단위 소득으로 산출되어 OECD가구균등화지수를 통해 조정된 조정 사회보장소득을 분석에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소득은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장에서는 연금소득과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년), 가계조사(2006) 자료에서 사회보장소득은 연금과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사 자료 자체가 사회보장소득을 달리 더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수집되어 있지 않다⁵⁸⁾. 그리하여 본 장에서도 사회보장소득은 연금소득과 기타 사회보장 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보훈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모든 공적 연금의 급여를 월 단위로 합산한 가구 연금소득으로 정의되며, 이를 OECD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조정 연금소득으로 분석에서 이용할 것이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은 전체 사회보장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소득 전부를 포함하여,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금 등의 범주적 공공부조 소득과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타 사회보장소득은 월 가구단위 소득으로 산출하여, 이를 다시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조정된 조정 기타 사회보장소득 개념으로 분석에 이용할 것이다. 기타 사회보장 소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은 노인

주58)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사회보장소득은 사회보험소득(공적 연금소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 그리고 기타 정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소득 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의 사회보장소득을 연금소득과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이용할 것이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보훈연금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험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산재급여, 실업급여의 경우 다른 분석자료와 같이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분류된다.

교통비이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노인교통비를 기타사회보장소득에서 포함하지 않았지만,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포함하고 있고, 2006년 가계조사는 노인교통비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⁵⁹⁾. 그리하여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부분적으로 노인교통비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각을 제시할 것이다.

4. 분석집단의 구분

본 장은 1996~2006년에 이르는 기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를 빈곤정도별 및 주요 인구집단별 비교, 분석한다. 즉, 사회보장소득이 소득수준별로 빈곤층을 구분하거나 또는 인구학적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때, 빈곤층 내부의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가가 분석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한 빈곤정도별,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의 구분이 필요하다.

빈곤집단은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극빈층은 분석하는 각 년도 조정 월 경상소득이 당해연도 조정 월 중위소득의 20% 미만인 개인들로 정의되며, 일반 빈곤층은 조정 월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20~50%인 개인들을 가리킨다. 각 분석년도의 빈곤정도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정리하면, <표 8-1> 과 같다.

주59) 노인교통비는 1996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 왔다. 2006년 가계조사의 분석결과, 노인교통비를 포함한 가구소비실태조사(2000)이나 국민생활실태조사(2003)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기타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이 현격하게 낮지만, 노인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다는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표 8-1〉 분석년도별 빈곤정도별 집단구분의 기준소득(시장소득)

(단위: 원/월)

	가구소비 (1996)	가구소비 (2000)	국민생활실태조사(2 003)	가계조사 (2006)
중위소득	1,009,583	1,108,333	1,224,745	1,386,107
중위소득 50%	504,792	554,167	612,373	693,054
중위소득의 40%	403,833	443,333	489,898	554,443
중위소득의 30%	302,875	332,500	367,424	415,832
중위소득의 20%	201,917	221,667	244,949	277,221
중위소득의 10%	100,958	110,833	122,475	138,611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각 년도의 조정 월 가구 시장소득이 각 기준선보다 적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빈곤정도별 각각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집단을 구분한다. 예컨대 1996년의 경우 조정 월 가구 시장소득이 201,917원 보다 적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극빈층으로 분류되며, 조정 월 가구 시장소득이 201,917원 보다 많고 504,792원 보다 적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일반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주요 인구집단별 가구구분은 서론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기준 범주를 활용하였다.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 유배우가구, 남성가구주가구, 여성가구주가구를 위계적으로 구분하였다. 단, 단독가구는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단독가구로 추가 구분하였다.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단독가구가 공적지원의 표적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실제 공적이전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절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변화 추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에서 2006년간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1996년 이후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6년에서 2003년 기간에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2003-2006년 기간에도 빈곤율은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빈곤율은 14.5%로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5% 포인트 상승하였고, 2003년 빈곤율은 18.2%로 2000년보다 3.7% 증

가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에서 7년이 지난 2003년 빈곤율은 1996년 빈곤율의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6년의 빈곤율도 19.3%로 2003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정도는 그 전보다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표 8-2〉는 빈곤율의 지속적인 상승 경향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 또한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극빈층의 규모는 1996년 1.3%에서 2000년 2.9%, 2003년 5.7%, 2006년 7.5%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극빈층의 내부 구성을 보면, 시장 소득이 중위소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은 1996년 0.6%에서 2000년에는 1.3%, 2003년에는 3.4%, 2006년에는 5.1%까지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무려 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10~20%에 속한 빈곤집단의 규모 증가율도 중위소득의 10%미만인 집단보다 낮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빈곤층의 규모도 1996년 이후 2003년 까지 증가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에만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빈곤층의 내부 구성을 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30%인 집단의 경우 그 비율은 2003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만 약간 감소하였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0~40%에 속한 빈곤자의 비율도 1996년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정도가 가장 덜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0~50%에 속한 빈곤자의 비율도 1996년 이후 대체로 증가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에만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2〉 빈곤집단의 빈곤정도별 분포

(단위: %)

빈곤정도	1996년	2000년	2003	2006
극빈층	1.3	2.9	5.7	7.5
중위소득의 10% 미만	0.6	1.3	3.4	5.1
중위소득의 10~20%	0.7	1.6	2.3	2.4
일반 빈곤층	8.2	11.6	12.5	11.8
중위소득의 20~30%	1.5	2.4	3.6	2.9
중위소득의 30~40%	2.3	3.9	3.8	4.2
중위소득의 40~50%	4.5	5.2	5.1	4.7
빈곤율	9.5	14.5	18.2	19.3

주: 빈곤율은 시장소득, 개인단위로 산출한 것임.

이처럼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빈곤층 중 가장 빈곤한 극빈층의 규모가 더욱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심화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3〉은 빈곤정도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인구구성의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먼저 전체 빈곤집단의 인구구성 추이를 보면, 1996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전체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본 장에서 구분한 각 인구집단 모두 빈곤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가구주 가구와 유배우자 가구 및 비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빈곤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집단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빈곤자의 비율(노인단독가구 +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원)은 1996년 전체 인구의 1.9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5.6%로 거의 3.5배나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이들 집단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은 1996년 6.2%에서 2006년 13.2%로 그 증가율이 2배를 조금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주 가구원의 증가율보다 이 집단의 빈곤율 증가정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빈곤정도별 인구 구성의 추이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 미만)	전체	1.3(100.0)	2.9(100.0)	5.7(100.0)	7.5(100.0)
	단독가구(노인)	0.38(21.9)	0.59(20.4)	0.73(12.8)	0.85(11.3)
	단독가구(비노인)	0.07(5.8)	0.02(5.3)	0.38(6.6)	0.65(8.6)
	노인가구주가구	0.31(23.5)	0.70(24.1)	1.6(28.0)	1.97(26.3)
	유배우자가구	0.50(38.5)	1.07(36.9)	2.14(37.5)	3.01(40.1)
	남성가구주가구	0.03(2.0)	0.17(5.8)	0.39(6.9)	0.41(5.5)
	여성가구주가구	0.11(8.2)	0.22(7.5)	0.47(8.2)	0.62(8.2)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8.3(100.0)	11.5(100.0)	12.5(100.0)	11.8(100.0)
	단독가구(노인)	0.39(4.7)	0.51(4.4)	0.91(7.3)	0.63(5.3)
	단독가구(비노인)	0.41(4.9)	0.67(5.8)	0.66(5.3)	0.50(4.2)
	노인가구주가구	0.99(11.9)	1.53(13.3)	2.35(18.8)	2.17(18.4)
	유배우자가구	4.79(57.7)	6.92(60.2)	6.29(50.3)	6.83(57.9)
	남성가구주가구	0.51(6.2)	0.60(5.2)	0.81(6.5)	0.52(4.4)
	여성가구주가구	1.20(14.5)	1.27(11.0)	1.48(11.8)	1.16(9.8)
빈곤층 전체	전체	9.5(100.0)	14.5(100.0)	18.2(100.0)	19.3(100.0)
	단독가구(노인)	0.67(7.0)	1.12(7.7)	1.64(9.0)	1.47(7.6)
	단독가구(비노인)	0.48(5.0)	0.83(5.7)	1.06(5.8)	1.14(5.9)
	노인가구주가구	1.28(13.5)	2.25(15.5)	3.93(21.6)	4.13(21.4)
	유배우자가구	5.29(55.1)	8.05(55.5)	8.43(46.3)	9.84(51.0)
	남성가구주가구	0.53(5.6)	0.78(5.4)	1.20(6.6)	0.95(4.9)
	여성가구주가구	1.30(13.7)	1.49(10.3)	1.95(10.7)	1.78(9.2)
비빈곤층	전체	90.5(100.0)	85.5(100.0)	81.8(100.0)	80.7(100.0)
	단독가구(노인)	0.18(0.2)	0.17(0.2)	0.16(0.2)	0.32(0.4)
	단독가구(비노인)	2.72(3.0)	2.74(3.2)	2.37(2.9)	2.34(2.9)
	노인가구주 가구	1.45(1.6)	2.65(3.1)	2.70(3.3)	2.58(3.2)
	유배우자 가구	79.37(87.7)	70.97(83.0)	69.12(84.5)	69.24(85.8)
	남성 가구주 가구	2.72(3.0)	3.08(3.6)	3.35(4.1)	2.50(3.1)
	여성 가구주 가구	4.16(4.6)	5.90(6.9)	4.09(5.0)	3.71(4.6)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노인단독가구	2.7	4.0	5.7	5.2
	비노인단독가구	10.2	11.1	10.3	10.4
	노인가구주 가구	3.5	6.0	8.1	8.0
	유배우자 가구	73.7	66.4	64.3	66.4
	남성 가구주 가구	3.6	4.4	4.9	3.8
	여성 가구주 가구	6.3	8.3	6.9	6.3

주: ()안은 빈곤집단 각각을 100으로 할 때, 각 가구유형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유배우자 가구에 속한 빈곤자의 비율은 1996년 5.29%에서 2006년에는 9.84%로 10년간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전체 인구에서 유배우자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이 1996년 73.7%에서 2006년 66.4%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집단의 구성에서 유배우자의 상대적 비중이 훨씬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빈곤자 중 비노인단독가구의 비율도 1996년에서 2006년 기간동안 0.48%에서 1.14%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층의 인구구성에서도 하위 인구집단 모두 절대규모의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극빈층의 절대 규모가 지난 10년간 거의 6배정도 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극빈층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 중 그 규모 및 증가정도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노인가구주 가구와 유배우자 가구집단이다. 1996년의 경우 노인가구주 가구원 중 11.1%가 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에는 21.4%가 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배우자 가구의 경우는 1996년에는 전체 유배우자 가구 가구원의 0.7%가 이 집단에 속하였는데, 2006년에는 6.4%가 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유배우자 가구 가구원이 극빈층으로 편입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4절 빈곤수준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

본 절에서는 1996-2006년 기간동안 빈곤수준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를 수혜율, 평균 사회보장소득, 사회보장소득의 집단별 점유율 비교 순으로 살펴 볼 것이다. <표 8-4>, <표 8-5>, <표 8-6>은 사회보장수혜율을 동 기간 동안 인구집단별로 살펴 본 것이다. 전술했듯이 본 장에서 사회보장소득은 연금소득과 연금 외의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구분하였다.

<표 8-4>는 1996~2006년 기간동안 연금소득의 수혜율을 빈곤정도별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과 보훈연금만을 포함하고, 경로연금은 기타 사회보장소득으로 분류되었다. 동 기간 동안 연금소득 수혜율은 비교적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그 이유는 동기간 동안 연금수혜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단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자연 증가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금수혜율^{주60)}은 1996년 5.9%에서 2000년 7.7%, 2003년 13.7%, 2006년 16.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0년간 빈곤집단의 연금수혜율은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하위 인구집단별로 수혜율을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혜율이 35.2%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게 높고, 다른 하위 인구집단은 12% 내외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연금급여가 60세 이상의 노인만이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인구집단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혜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단독가구의 수혜율은 12.6%로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혜율보다 크게 낮다는 점은 의외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연금체계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급자의 대부분은 남성인데 반해^{주61)}, 노인단독가구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2006년 가계조사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주의 85%가 여성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소득의 수혜율을 빈곤수준별로 보면, 분석년도 모두에서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장의 빈곤집단 구분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연금소득의 주 수혜자가 노인이며, 빈곤정도별 집단구분에서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빈곤정도에 따른 집단간 연금수혜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각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 연금수혜율은 빈곤정도별로 구분된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주60) 노인가구주 가구가 아닌 가구들의 경우 연금수급률이 10% 이상 되는 것은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한 후 퇴직할 경우 60세 이전에도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본 장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60~64세인 비노인의 경우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60세 미만인 사람들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 9월 현재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66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9.6%이고, 퇴직연금 수급자의 60.4%는 65세 이하이다(www.gepco.or.kr).

주61) 200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수급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0%, 여성이 40%이다(www.nps4u.or.kr).

〈표 8-4〉 연금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17.3	14.3	19.7	20.1
	단독가구(노인)	2.7	5.6	12.0	15.4
	단독가구(비노인)	4.3	6.9	11.4	10.5
	노인가구주가구	19.7	26.5	33.7	39.9
	유배우자가구	23.8	15.2	17.4	13.2
	남성가구주가구	5.1	1.6	9.0	3.9
	여성가구주가구	30.4	8.8	10.6	18.0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4.2	6.0	11.0	14.0
	단독가구(노인)	1.3	3.1	5.9	8.7
	단독가구(비노인)	2.0	3.1	8.3	11.3
	노인가구주가구	9.2	11.8	19.4	30.9
	유배우자가구	4.2	5.7	9.9	9.7
	남성가구주가구	1.3	0.7	4.7	19.0
	여성가구주가구	2.8	6.0	9.7	9.3
빈곤층 전체	전체	5.9	7.7	13.7	16.3
	단독가구(노인)	1.9	4.5	8.6	12.6
	단독가구(비노인)	2.3	3.8	9.4	10.8
	노인가구주가구	11.7	16.4	25.2	35.2
	유배우자가구	6.1	7.0	11.8	10.8
	남성가구주가구	1.5	0.9	6.1	12.3
	여성가구주가구	5.1	6.4	9.9	12.3
비빈곤층	전체	1.0	2.7	4.2	5.4
	단독가구(노인)	0.5	4.9	9.3	8.8
	단독가구(비노인)	0.9	0.7	1.0	5.4
	노인가구주가구	7.1	17.1	21.7	33.9
	유배우자가구	0.8	2.2	3.3	3.7
	남성가구주가구	3.0	2.4	6.5	17.1
	여성가구주가구	3.1	3.2	6.8	10.0

〈표 8-5〉는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소득을 수혜하는 비율을 1996-2006년간 빈곤정도별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주62)}. 〈표 8-5〉를 보면,

주62) 기타 사회보장 수혜율 및 전체 사회보장 수혜율에 대한 설명은 1996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기간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표 8-5〉와 〈표 8-6〉을 보면, 2006년의 경우 노인 가구주(노인단독가구 포함)의 기타 사회보장 수혜율 및 전체 사회보장수혜율이 그 이전과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노인교통비를 포함할 경우 1996년 이후 수혜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인교통비를 제외할 경우 기타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은 1996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획기적인 변화라 할 정도의 큰 변화없이 점진적인 증가경향만 보이고 있다. 빈곤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의 경우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수혜율이 11.1% 였으나, IMF 경제위기 발생 3년 후인 2000년에는 18.2%, 2003년에는 27.4%, 2006년에는 39.2%로 분석되었다(노인교통비를 제외할 경우)^{주63)}.

빈곤정도별로 구분한 빈곤집단간을 비교해 보면,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수혜율도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분석년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로 기타 사회보장 소득 수혜율을 비교해 보면,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과 IMF 경제위기 이후 기간간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1996년의 경우 노인가구주 가구(노인단독가구 포함)와 비노인가구주 가구간 기타 사회보장수혜율이 현격한 격차를 보였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러한 차이가 거의 없거나 매우 좁혀졌다는 점이다(노인교통비를 제외한 수혜율을 근거로 함).

비교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인교통비를 포함한 2000·2003년의 수혜율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6년 가계조사에서 기타 사회보장항목의 범주가 2000, 2003년의 자료와는 다르기 때문으로 추론되지만, 그 항목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주63) 노인교통비는 1996년 이전에는 현물로 지급되어 왔으나 1996년부터 현금지급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당 36,000원 정도가 지급된다.

〈표 8-5〉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31.1	67.7(38.0)	66.6(42.8)	46.6
	단독가구(노인)	54.3	92.1(42.7)	97.3(59.6)	73.7
	단독가구(비노인)	15.6	42.5(39.3)	47.0(46.7)	24.9
	노인가구주가구	44.4	92.1(32.2)	94.6(42.1)	66.9
	유배우자가구	16.5	43.2(32.2)	37.4(30.2)	27.9
	남성가구주가구	7.6	73.2(65.9)	74.2(54.8)	58.9
	여성가구주가구	16.3	57.1(50.0)	66.3(62.0)	49.8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8.0	36.0(13.2)	47.9(20.4)	34.5
	단독가구(노인)	30.4	89.9(10.1)	96.1(12.4)	62.3
	단독가구(비노인)	1.6	10.5(9.4)	12.4(11.3)	8.9
	노인가구주가구	20.5	88.0(10.5)	94.6(20.4)	57.1
	유배우자가구	4.0	20.9(11.6)	27.2(18.1)	25.8
	남성가구주가구	9.7	62.8(18.1)	57.1(25.7)	45.9
	여성가구주가구	7.7	34.9(25.5)	43.8(36.1)	35.1
빈곤층 전체	전체	11.1	42.4(18.2)	53.8(27.4)	39.2
	단독가구(노인)	40.5	91.1(27.8)	96.6(33.6)	68.8
	단독가구(비노인)	3.8	16.5(15.1)	24.8(24.0)	17.9
	노인가구주가구	26.1	89.3(17.3)	94.6(29.2)	61.8
	유배우자가구	5.2	23.9(14.4)	29.7(21.1)	26.4
	남성가구주가구	9.6	65.1(28.7)	62.7(35.3)	51.7
	여성가구주가구	8.4	38.2(29.2)	49.2(42.3)	40.1
비빈곤층	전체	1.7	15.2(2.8)	15.6(3.3)	11.5
	단독가구(노인)	19.8	84.7(3.4)	93.7(12.0)	59.0
	단독가구(비노인)	0.2	1.7(1.6)	1.1(0.9)	1.2
	노인가구주가구	10.6	86.1(5.5)	89.2(6.9)	52.9
	유배우자가구	1.3	12.2(2.5)	12.2(2.9)	9.4
	남성가구주가구	5.2	34.4(5.7)	30.8(4.3)	26.7
	여성가구주가구	4.1	14.7(5.0)	16.5(7.3)	14.9

주: ()안은 노인교통비를 제외한 기타 사회보장소득 수혜율

1996년도 빈곤집단 전체를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 기타 사회보장 수혜율을 보면, 노인 단독가구는 40.5%,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혜율은 26.1%인데 반해, 다른 인구집단의 수혜율은 10%가 넘는 경우가 없다. 반면 2000년, 2003년의 경우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 중 기타 사회보장수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가구주 가구이고, 다음이 남성 가구주 가구이며, 그 다음이 노인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순이다. 2000년, 2003년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간 기타 사회보장수혜율의 격차는 비노인 단독가구와 유배우자 가구를 제외하면, 그 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변화는 기타 사회보장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인데, 2000년에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자격조건에서 인구학적 조건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8-6〉은 전체 사회보장소득의 수혜율을 살펴 본 것인데,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과 비교할 때, 노인교통비를 포함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소득의 수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노인교통비를 제외하면,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의 증가폭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기간 전체 사회보장 수혜율은 3년마다 거의 10% 포인트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회보장 수혜율은 1996년 16.4%에서 2000년 46.7%(노인교통비 제외시 25.0%), 2003년에는 59.4%(노인교통비 제외시 39.3%), 2006년은 48.2%이다. 빈곤집단을 더 세분화하여 보면, 극빈층에 속한 집단의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 증가보다, 일반 빈곤층에 속한 집단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극빈층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은 1996년 46.6%에서 2000년 50%, 2003년 59.4%, 2006년 57.1%로 지난 10년간 약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일반 빈곤층의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은 1996년 11.6%에서 2000년 18.6%, 2003년 30.2%, 2006년 42.5%로 지난 10년간 31.5%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수혜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46.6	73.2(50.0)	73.2(59.4)	57.1
	단독가구(노인)	56.7	92.1(45.6)	98.9(69.7)	80.2
	단독가구(비노인)	19.9	48.1(44.9)	57.8(57.5)	32.9
	노인가구주가구	60.3	95.8(57.1)	95.8(70.5)	84.6
	유배우자가구	38.2	53.6(44.4)	50.1(45.5)	37.3
	남성가구주가구	16.3	73.2(67.5)	76.6(61.3)	59.6
	여성가구주가구	46.8	63.1(56.7)	71.2(68.1)	58.8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11.6	40.0(18.6)	53.4(30.2)	42.5
	단독가구(노인)	31.3	90.6(12.9)	96.5(18.1)	65.1
	단독가구(비노인)	3.5	13.3(12.3)	19.6(18.8)	19.4
	노인가구주가구	28.2	90.8(20.7)	96.0(37.7)	71.1
	유배우자가구	7.6	25.6(16.9)	35.1(27.4)	32.6
	남성가구주가구	11.0	63.6(18.8)	58.9(29.8)	55.3
	여성가구주가구	10.5	39.7(30.8)	49.8(43.1)	39.5
빈곤층 전체	전체	16.4	46.7(25.0)	59.4(39.3)	48.2
	단독가구(노인)	42.0	91.4(30.6)	97.6(41.1)	73.2
	단독가구(비노인)	6.1	19.9(18.4)	33.3(32.7)	27.0
	노인가구주가구	35.8	92.4(32.2)	95.9(51.0)	77.5
	유배우자가구	10.5	29.4(20.6)	38.9(32.0)	34.1
	남성가구주가구	11.1	65.7(29.6)	64.8(40.2)	57.2
	여성가구주가구	13.5	43.2(34.6)	55.0(49.1)	46.1
비빈곤층	전체	2.6	17.0(5.5)	18.3(7.3)	15.3
	단독가구(노인)	19.8	87.0(8.3)	94.0(21.5)	61.1
	단독가구(비노인)	1.1	2.3(2.2)	2.1(1.9)	6.6
	노인가구주가구	16.6	88.9(22.4)	91.6(27.8)	69.5
	유배우자가구	2.0	13.9(4.6)	14.8(6.1)	12.1
	남성가구주가구	7.9	35.9(8.0)	35.2(10.7)	39.8
	여성가구주가구	7.0	17.2(7.9)	22.5(14.0)	23.2

주: ()는 노인교통비를 제외한 사회보장 소득 전체의 수혜율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의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을 살펴보면, 기타 사회보장소득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1996년에는 노인가구주 가구(노인단독가구 포함)와 비노인가구주 가구간 수혜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나, 2000년,

2003년에는 그러한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전체 사회보장소득 수혜율은 36~42% 수준인데 반해,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6-14%수준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00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여성 가구주 가구의 수혜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노인가구주, 노인단독가구, 남성가구주 가구의 순이며, 2003년에는 노인가구주 가구가 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가구주 가구로 49.1%, 가장 낮은 경우가 유배우자 가구로 32.0%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금소득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전체 사회보장 수혜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자인데,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여의 자격조건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주64).

〈표 8-7〉 사회보장수혜 사각지대 규모의 변화

(단위: %)

빈곤정도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0.69	1.45	2.31	3.22
일반 빈곤층	7.34	9.36	8.72	6.78
전체 빈곤집단	8.03	10.81	11.03	10.00

〈표 8-7〉은 빈곤자 중 어떠한 사회보장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사회보장수혜 사각지대의 규모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1996년 8.03%에서 2000년 10.81%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1.03%로 더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10.00%이다. 이러한 사실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사회보장 수혜율의 증가를 보였지만, 그러한 사회보장수혜율의 증가가 빈곤율의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에 미달하는 집단에서 사회보장수혜 사각지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 비율은 1996년 0.69%에서 2000년

주64)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에서 노인교통비를 제외한 전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69.1%에 달한다.

1.45%, 2006년에는 3.22%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무려 4.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표 8-8>, <표 8-9>, <표 8-10>은 사회보장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평균소득의 변화추이를 1996~2000년간 빈곤정도별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먼저 <표 8-8>은 연금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의 변화추이를 빈곤정도별로 구분된 집단간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연금소득자의 평균 연금소득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996년 평균 연금소득은 532,140원에서 2000년에는 499,204원, 2003년에는 464,191원, 2006년에는 403,874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3만원이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년도의 화폐가치를 균등화한 값으로 살펴 보면, 평균 실질 연금소득은 지난 10년간 거의 28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월 평균 연금소득액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가 전체 연금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월 평균 연금급여액이 많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주65)}.

또한 <표 8-8>을 보면,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평균 연금수급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의 경우 극빈층 중에서 연금소득자의 평균 연금수급액은 495,330원이고, 일반 빈곤층 중 연금소득자의 평균 연금소득액은 307,496원이며, 비빈곤층에 속한 연금소득자의 평균 연금소득액은 283,279원이다. 이는 본 장의 빈곤정도별 집단 구분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소득원을 통한 소득획득 노력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65) 200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는 1,749,633명이고 그 중 가장 많은 연금 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로 1,253,710명이며, 특례노령연금수급자의 월 평균연금액은 157,855원이며, 1999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292,976명이다.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수급자가 많은 공무원연금의 1999년 수급자 수는 128,940명이고, 2005년 수급자는 218,006명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6).

〈표 8-8〉 빈곤정도별 연금 평균소득 비교(수급자만)

(단위: 원/월)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 미만)	전체	625,199 (723,702)	663,461	612,736 (553,510)	495,330 (411,404)
	노인단독가구	416,028	280,627	604,518	571,481
	비노인단독가구	537,012	593,731	299,079	547,375
	노인가구주가구	882,106	734,583	688,176	568,482
	유배우자가구	592,396	723,251	617,685	413,353
	남성가구주가구	487,394	354,738	269,656	79,379
	여성가구주가구	321,735	260,721	322,024	212,320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471,195 (544,434)	399,938	341,969 (308,915)	320,626 (266,301)
	노인단독가구	332,930	241,180	333,838	307,496
	비노인단독가구	545,931	215,691	184,854	207,985
	노인가구주가구	535,080	371,748	358,863	341,377
	유배우자가구	482,692	464,966	398,386	343,777
	남성가구주가구	302,407	150,418	85,372	202,080
	여성가구주가구	266,721	219,810	174,742	220,616
빈곤층 전체	전체	532,140 (615,981)	499,204	464,191 (419,323)	403,874 (335,444)
	노인단독가구	382,789	267,833	492,276	493,415
	비노인단독가구	542,958	330,747	234,517	392,394
	노인가구주가구	672,719	482,429	536,396	463,578
	유배우자가구	523,858	541,006	480,233	369,751
	남성가구주가구	345,096	232,146	173,970	184,551
	여성가구주가구	293,966	224,852	212,645	216,441
비빈곤층	전체	389,177 (450,494)	344,451	323,096 (291,866)	283,279 (235,282)
	노인단독가구	292,152	266,049	246,574	320,038
	비노인단독가구	273,715	262,601	682,989	240,117
	노인가구주가구	565,140	482,429	302,575	225,065
	유배우자가구	415,915	321,716	334,672	339,056
	남성가구주가구	268,989	231,272	302,515	155,407
	여성가구주가구	219,101	258,431	260,639	198,124

주: ()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 화폐가치로 조정한 값임.

〈표 8-9〉 빈곤정도별 기타 사회보장 평균소득 비교(수급자만)

(단위: 원/월)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 미만)	전체	136,315 (157,792)	123,478/205,545	166,937/249,445 (150,801/225,334)	234,620 (194,867)
	노인단독가구	80,852	102,872	148,940	181,170
	비노인단독가구	139,476	234,863	251,263	417,865
	노인가구주가가구	83,088	83,474	100,406	175,313
	유배우자가구	295,217	144,545	241,582	308,388
	남성가구주가가구	166,379	259,870	193,722	225,292
	여성가구주가가구	266,728	147,545	264,393	308,333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53,581 (62,023)	54,660/ 133,113	61,034/128,396 (55,134/115,986)	114,308 (94,940)
	노인단독가구	11,719	27,979	20,670	42,973
	비노인단독가구	38,046	98,062	146,715	215,001
	노인가구주가가구	43,756	38,513	27,594	83,718
	유배우자가구	81,068	68,308	102,459	143,804
	남성가구주가가구	121,228	43,736	60,994	102,980
	여성가구주가가구	36,688	89,495	109,544	143,176
빈곤층	전체	84,921 (98,301)	76,971/ 163,838	101,119 /187,659 (91,345/169,520)	169,608 (140,870)
	노인단독가구	50,879	68,977	78,202	127,942
	비노인단독가구	104,500	164,390	217,762	373,178
	노인가구주가가구	59,518	58,048	57,049	124,525
	유배우자가구	145,473	87,001	146,751	196,663
	남성가구주가가구	123,431	97,741	112,986	164,951
	여성가구주가가구	74,132	102,472	158,603	213,696
비빈곤층	전체	42,801 (49,545)	24,934 /107,700	26,707 /102,378 (24,126/92,482)	74,009 (61,469)
	노인단독가구	5,875	19,585	16,893	40,481
	비노인단독가구	208,886	112,498	151,154	102,506
	노인가구주가가구	20,137	16,343	12,829	44,181
	유배우자가구	41,288	25,046	29,214	74,744
	남성가구주가가구	86,826	30,577	22,831	44,958
	여성가구주가가구	36,297	35,644	48,135	184,390

주: ‘/’ 앞의 값은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포함한 것이고, 뒤의 값은 노인교통비 수급자 제외 값
()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 화폐가치로 조정된 값임.

〈표 8-9〉는 기타 사회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평균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변화추이를 1996-2006년간 빈곤정도별로 살펴 본 것이다.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평균 기타 사회보장소득액은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과 비교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가치상으로 보면, 2000년 기타 사회보장 평균 소득은 1996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실질가치상으로 비교해도 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는 2000년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정도별로 구분한 집단들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기타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IMF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공공부조 평균 급여액의 상승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사회보장 평균 소득액을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해 보면,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기타 사회보장 평균 소득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의 경우 극빈층 중 기타 사회보장 소득자의 평균 기타 사회보장소득액은 월 136,315원인데 반해, 일반 빈곤층의 평균 기타 사회보장소득액은 월 53,581원으로 극빈층이 일반빈곤층보다 약 2.5배 정도 많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2000년에 다소 줄어들었지만, 2003·2006년의 경우 2배정도로 다시 늘어났다. 이처럼 빈곤 정도에 따라 기타 사회보장 평균 소득액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기타 사회보장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인데, 이것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간 갭을 보충하는 식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인구집단별 기타 사회보장 월 평균 소득액을 비교해 보면, 모든 년도에 걸쳐 노인가구주 가구(노인단독가구 포함)가 다른 인구집단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타 사회보장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분기당 36,000원 정도를 받는 노인교통비 수급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⁶⁶⁾.

〈표 8-10〉은 전체 사회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1996-2006년간 월 평균 사

회보장소득액의 변화추이를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하여 본 것이다.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사회보장 수급자의 월 평균 사회보장 소득액은 실질가치상으로 보면, 199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볼 때, 1996년 전체 빈곤집단에서 사회보장수급자만의 월 평균 사회보장소득액은 290,286원인데, 2000년에는 273,638원, 2003년에는 264,080원, 2006년에는 228,570원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 이후 연금소득의 감소폭이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66)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제외한 2000년 기타 사회보장수급자 중 극빈층의 월 평균 기타사회보장액을 하위 인구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노인단독가구가 약 20만원, 비노인단독가구가 약 25만원, 노인가구주 가구가 21만원, 유배우자 가구가 19만원, 남성가구주 가구가 28만원, 여성가구주가가 17만원으로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포함할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8-10〉 빈곤정도별 전체 사회보장 평균 소득 비교(수급자만)

(단위: 원/월)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미만)	전체	322,943 (373,824)	243,702/345,686	316,643 /383,058 (286,037/346,033)	366,132 (304,096)
	노인단독가구	97,006	120,237	219,046	279,625
	비노인단독가구	244,671	285,732	359,259	488,639
	노인가구주가가	347,864	283,579	343,852	406,778
	유배우자가	495,856	321,398	389,876	377,359
	남성가구주가가	354,616	267,666	218,770	227,964
	여성가구주가가	306,312	170,312	294,610	326,437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205,400 (237,762)	109,482 /224,148	125,132/211,034 (113,037/190,636)	198,201 (164,619)
	노인단독가구	25,225	36,426	40,524	153,268
	비노인단독가구	315,074	128,064	170,856	220,411
	노인가구주가가	207,310	85,639	100,225	215,686
	유배우자가	307,725	159,368	192,347	215,764
	남성가구주가가	140,223	44,887	65,887	155,061
	여성가구주가가	97,953	111,403	130,544	178,786
빈곤층	전체	250,775 (290,286)	152,194/273,638	198,808 /292,337 (179,592/264,080)	275,198 (228,570)
	노인단독가구	66,253	82,072	121,081	204,855
	비노인단독가구	278,342	199,015	228,792	404,197
	노인가구주가가	263,338	150,185	198,673	314,641
	유배우자가	373,308	199,546	256,874	269,583
	남성가구주가가	155,400	100,099	125,759	188,576
	여성가구주가가	157,163	124,187	181,514	243,431
비빈곤층	전체	180,424 (208,851)	77,530 /227,775	96,738 /232,003 (87,388/209,578)	155,596 (129,233)
	노인단독가구	12,091	34,833	40,103	84,221
	비노인단독가구	266,832	165,519	629,684	217,599
	노인가구주가가	257,028	108,603	84,452	143,347
	유배우자가	185,133	73,714	100,022	161,211
	남성가구주가가	161,056	44,799	76,306	96,922
	여성가구주가가	116,567	79,430	114,608	204,417

주: ‘/’ 앞의 값은 노인교통비 수급자를 포함한 것이고, 뒤의 값은 노인교통비 수급자 제외한 값
()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 화폐가치로 조정한 값임.

빈곤정도별로 비교해도 앞의 연금소득과 기타 사회장소득에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전체 사회보장 월 평균 소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로 전체 사회보장 월 평균 소득액을 비교해 보면, 노인단독가구의 월 평균 전체 사회보장 소득액이 다른 집단보다 특히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노인교통비 수급자가 많다는 점과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자의 비율이 크게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8-12〉, 〈표 8-13〉, 〈표 8-14〉는 1996-2006년 기간동안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의 변화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표 8-12〉는 연금소득 점유율을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분배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표 8-12〉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2000년까지는 연금소득의 점유율이 빈곤집단보다 비빈곤집단이 더 많았으나, 2003년부터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연금소득자의 대부분은 노인가구주 가구인데,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50%를 넘고, 노인가구주의 연금소득 수혜율이 〈표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8-11〉 연금소득자의 추이

(단위: 명, %)

년도	국민연금(A)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전체(B)	A/B
1996	109,449	63,693	39,378	4,618	217,138	50.4
2000	622,457	150,463	43,494	13,382	829,796	75.0
2003	1,057,870	181,726	47,302	17,900	1,304,798	81.1
2004	1,430,164	195,310	48,495	20,017	1,693,986	84.4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6; 국방부,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사학연금관리공단(www.ktpf.or.kr).

빈곤정도별로 연금소득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2003년부터 극빈층의 점유율이 일반빈곤층의 점유율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2003년 이전까지는 극빈층보다 일반빈곤층의 연금소득 점유율이 더 높거나 비슷하였지만, 2003년, 2006년의 연금소득 점유율은 극빈층이 일반빈곤층보다 현격하게 높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 연금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면,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단독가구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유배우자 가구 등 다른 인구 집단의 연금소득 점유율은 감소하거나 정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빈곤집단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과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12〉 연금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단위: %)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 미만)	전체	0.21	0.21	0.30	0.30
	노인단독가구	0.00	0.01	0.02	0.03
	비노인단독가구	0.00	0.00	0.01	0.01
	노인가구주가구	0.08	0.10	0.16	0.18
	유배우자가구	0.11	0.09	0.10	0.07
	남성가구주가구	0.00	0.00	0.00	0.00
	여성가구주가구	0.02	0.00	0.01	0.01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0.24	0.20	0.21	0.21
	노인단독가구	0.00	0.00	0.01	0.01
	비노인단독가구	0.01	0.00	0.00	0.00
	노인가구주가구	0.07	0.05	0.07	0.09
	유배우자가구	0.14	0.14	0.11	0.09
	남성가구주가구	0.00	0.00	0.00	0.01
	여성가구주가구	0.01	0.01	0.01	0.01
빈곤층	전체	0.45	0.41	0.51	0.51
	노인단독가구	0.01	0.01	0.03	0.04
	비노인단독가구	0.01	0.01	0.01	0.02
	노인가구주가구	0.15	0.15	0.24	0.27
	유배우자가구	0.25	0.22	0.21	0.16
	남성가구주가구	0.00	0.00	0.01	0.01
	여성가구주가구	0.03	0.02	0.02	0.02
비빈곤층	전체	0.55	0.59	0.49	0.49
	노인단독가구	0.00	0.00	0.00	0.00
	비노인단독가구	0.01	0.00	0.01	0.01
	노인가구주가구	0.09	0.16	0.08	0.08
	유배우자가구	0.37	0.38	0.34	0.34
	남성가구주가구	0.03	0.01	0.03	0.03
	여성가구주가구	0.04	0.04	0.03	0.03

〈표 8-13〉은 기타 사회보장소득 점유율을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분배 추이를 살펴 본 것이다.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연금소득의 점유율과 달리 비빈곤집단과 비교하여 빈곤집단의 점유율이 훨씬 높고, 그 격차가 2000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교통비를 제외할 경우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빈곤집단 점유율은 1996년 58%에서 2000년에는 62%, 2003년에는 77%, 2006년에는 65%이다. 이처럼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점유율에서 빈곤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사회수당보다는 공공부조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주67)}.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보편적인 급여인 노인교통비를 포함할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는데, 노인교통비의 급여수준이 월 1만원 남짓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의 대부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기타 사회보장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점유율을 빈곤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분석기간에 걸쳐 극빈층의 점유율이 일반 빈곤층의 점유율보다 더 높고, 2003년, 2006년의 경우 극빈층의 점유율이 특히 높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빈곤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유배우자 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점유율이 모든 분석년도에서 다른 집단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67)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회보장수급자 중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 수급자의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표 8-13〉 기타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0.35	0.31 (0.33)	0.47 (0.50)	0.41
	노인단독가구	0.08	0.07	0.08	0.06
	비노인단독가구	0.01	0.02	0.03	0.03
	노인가구주가구	0.07	0.07	0.11	0.12
	유배우자가구	0.16	0.09	0.14	0.13
	남성가구주가구	0.00	0.04	0.04	0.03
	여성가구주가구	0.03	0.02	0.06	0.05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0.23	0.28 (0.29)	0.27 (0.27)	0.24
	노인단독가구	0.01	0.02	0.01	0.01
	비노인단독가구	0.00	0.01	0.01	0.00
	노인가구주가구	0.06	0.07	0.05	0.05
	유배우자가구	0.10	0.12	0.13	0.13
	남성가구주가구	0.04	0.02	0.02	0.01
	여성가구주가구	0.02	0.05	0.05	0.03
빈곤층	전체	0.58	0.59 (0.62)	0.74 (0.77)	0.65
	노인단독가구	0.09	0.09	0.09	0.07
	비노인단독가구	0.01	0.03	0.04	0.04
	노인가구주가구	0.13	0.13	0.16	0.17
	유배우자가구	0.26	0.21	0.27	0.26
	남성가구주가구	0.04	0.06	0.06	0.04
	여성가구주가구	0.05	0.07	0.11	0.08
비빈곤층	전체	0.42	0.41 (0.38)	0.26 (0.23)	0.35
	노인단독가구	0.00	0.00	0.00	0.00
	비노인단독가구	0.01	0.01	0.00	0.00
	노인가구주가구	0.02	0.05	0.02	0.03
	유배우자가구	0.27	0.27	0.18	0.25
	남성가구주가구	0.08	0.04	0.02	0.02
	여성가구주가구	0.04	0.04	0.02	0.05

주: ()안은 노인교통비 제외한 경우

〈표 8-14〉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빈곤정도별 점유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 20% 미만)	전체	0.24	0.24	0.37	0.35
	노인단독가구	0.02	0.03	0.04	0.04
	비노인단독가구	0.00	0.01	0.02	0.02
	노인가구주거가구	0.08	0.09	0.14	0.15
	유배우자가구	0.12	0.09	0.12	0.09
	남성가구주거가구	0.00	0.02	0.02	0.01
	여성가구주거가구	0.02	0.01	0.03	0.03
일반빈곤층 (중위소득 20~50%)	전체	0.24	0.23	0.23	0.22
	노인단독가구	0.00	0.01	0.01	0.01
	비노인단독가구	0.01	0.01	0.01	0.00
	노인가구주거가구	0.07	0.06	0.06	0.07
	유배우자가구	0.14	0.13	0.12	0.11
	남성가구주거가구	0.01	0.01	0.01	0.01
	여성가구주거가구	0.02	0.03	0.03	0.02
빈곤층	전체	0.48	0.48	0.60	0.57
	노인단독가구	0.02	0.04	0.05	0.05
	비노인단독가구	0.01	0.02	0.02	0.03
	노인가구주거가구	0.15	0.14	0.21	0.22
	유배우자가구	0.25	0.22	0.23	0.20
	남성가구주거가구	0.01	0.02	0.03	0.02
	여성가구주거가구	0.03	0.04	0.05	0.04
비빈곤층	전체	0.52	0.52	0.40	0.43
	노인단독가구	0.00	0.00	0.00	0.00
	비노인단독가구	0.01	0.00	0.01	0.01
	노인가구주거가구	0.07	0.12	0.06	0.06
	유배우자가구	0.35	0.34	0.28	0.30
	남성가구주거가구	0.04	0.02	0.02	0.02
	여성가구주거가구	0.04	0.04	0.03	0.04

〈표 8-14〉는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점유율의 변화추이를 빈곤정도별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1996, 2000년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점유율은 빈곤 집단보다 비빈곤집단이 더 높았으나, 2003, 2006년은 빈곤집단의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보장 소득의 점유율을 빈곤정도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 빈곤층의 점유율은 1996-2006년간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극빈층의 점유율은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극빈층의 규모가 200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과 이들 집단의 사회보장수혜율 또한 그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1996년 이후 노인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가구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배우자 가구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두드러진다.

제 5 절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변화 추이

〈표 8-15〉, 〈표 8-16〉, 〈표 8-17〉은 시장소득에 사회보장소득을 더했을 경우 빈곤탈피율의 변화추이를 1996-2006년 기간 동안 빈곤집단별로 살펴 본 것이다. 먼저 〈표 8-15〉는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을 살펴 본 것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과 비교하여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극빈층의 경우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996년에는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이 4.9%였는데, 2000년에는 5.4%, 2003년, 2006년에는 6.9%로 지난 10년간 2.0% 포인트 향상되었을 뿐이다. 극빈층의 경우 96년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13.1%였으나 2000년에는 10.3%, 2003년에는 9.5%, 2006년에는 6.9%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극빈층의 연금수급률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집단에 속한 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수급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앞의 〈표 8-4〉 연금소득 수혜율의 변화를 보면, 이 집단의 연금 수급률은 96년 17.3%에서 2000년에는 14.3%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는 19.7%, 2006년에는 20.1%로 96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집단에서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이 점차 감소한 것이 이 집단의 연금수급률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수급자에서 국민연금수급자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대 다수는 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다. 2005년 12월 현재 월 평균 특례노령연금액은 약 16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극빈층 집단에서 연금수급률은 점진적으로 향상되

어 왔지만, 그러한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이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급여액이 적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 탈피율이 1996년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표 8-15>는 빈곤정도별로 구분한 집단간에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6년의 경우 연금소득에 의한 극빈층의 빈곤탈피율은 13.1%인데 반해, 일반빈곤층의 빈곤탈피율은 3.6%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그 격차가 6.2% 포인트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3.8% 포인트로, 2006년에는 일반빈곤층의 빈곤탈피율이 오히려 0.1% 포인트 더 높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특례연금 수급자이므로, 그 급여수준이 낮은 극빈층의 경우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는데 반해, 일반빈곤층은 빈곤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8-15> 빈곤정도별 연금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13.1	10.3	9.5	6.9
	단독가구(노인)	1.0	1.3	6.3	6.7
	단독가구(비노인)	4.3	3.2	2.1	3.2
	노인가구주가구	14.5	21.9	18.3	16.6
	유배우자가구	20.4	12.5	8.5	3.7
	남성가구주가구	5.1	0.0	1.2	0.0
	여성가구주가구	15.8	0.0	1.9	0.8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3.6	4.1	5.7	6.8
	단독가구(노인)	0.9	1.3	1.8	3.3
	단독가구(비노인)	1.5	1.7	3.7	3.9
	노인가구주가구	8.5	7.3	8.6	13.2
	유배우자가구	3.5	4.4	6.5	5.5
	남성가구주가구	1.3	0.0	1.6	10.7
	여성가구주가구	2.4	2.6	3.4	4.2
빈곤층 전체	전체	4.9	5.4	6.9	6.9
	단독가구(노인)	0.9	1.3	3.8	5.2
	단독가구(비노인)	1.9	2.0	3.1	3.5
	노인가구주가구	9.9	11.9	12.5	14.8
	유배우자가구	5.1	5.5	7.0	4.9
	남성가구주가구	1.5	0.0	1.5	6.0
	여성가구주가구	3.5	2.2	3.0	3.0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로 빈곤탈피율을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탈피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006년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빈곤탈피율은 14.8%이고, 극빈층 중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빈곤탈피율은 16.6%이며, 일반 빈곤층 중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빈곤탈피율은 13.2%인데 반해, 다른 집단의 빈곤탈피율은 대체로 5% 이하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집단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탈피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같은 노인가구주 가구이지만, 노인단독가구의 빈곤탈피율이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크게 낮다는 점은 의외이다. 이는 앞의 <표 8-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집단의 연금수급률이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데 기인하며, 그 이유는 이 집단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이라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16>은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의 변화추이를 1996-2006년 기간동안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하여 본 것이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199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1996년 1.1%에서 2000년에는 4.4%, 2003년에는 5.0%, 2006년에는 6.6%이다. 하지만 극빈층의 빈곤탈피율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극빈층의 빈곤탈피율은 1996년 2.2%에서 2000년 3.3%, 2003년 2.0%, 2006년 2.8%로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빈곤층의 경우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 0.9%, 2000년에는 4.7%, 2003년에는 6.3%, 2006년에는 9.0%가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지난 10년간 거의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조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빈곤완화 효과는 빈곤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반 빈곤층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1996년 이후 빈곤집단 전체 및 극빈층의 기타 사회보장 수혜율이 점차 향상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극빈층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준으로 급여수준이 향상되지 못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층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로 보면, 다른 인구집단의 경우 1996년 이후 그 정도는 크지는 않지만 일정정도 빈곤탈피율이 증가하여 왔으나 단독가구 특히 노인단독가구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유배우자 가구나 한 부모 가구의 경우는 기타 사회보장소득을 통한 빈곤탈피율이 1996년 이후 비교적 크게 향상되었다.

〈표 8-16〉 빈곤정도별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2.2	3.3	2.0	2.8
	단독가구(노인)	0.0	2.7	0.2	1.0
	단독가구(비노인)	1.7	3.1	1.9	2.9
	노인가구주가구	5.0	3.0	1.2	1.6
	유배우자가구	4.1	2.6	3.4	4.1
	남성가구주가구	0.0	14.1	2.0	3.5
	여성가구주가구	3.8	1.0	1.9	3.3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0.9	4.7	6.3	9.0
	단독가구(노인)	0.9	2.9	1.8	3.0
	단독가구(비노인)	0.0	2.1	3.1	3.4
	노인가구주가구	1.2	5.4	3.4	10.3
	유배우자가구	0.6	4.2	7.1	9.0
	남성가구주가구	3.9	10.8	9.8	10.4
	여성가구주가구	1.0	5.7	10.0	11.5
빈곤층 전체	전체	1.1	4.4	5.0	6.6
	단독가구(노인)	1.1	2.8	1.1	1.9
	단독가구(비노인)	0.3	2.3	2.6	3.2
	노인가구주가구	1.2	4.6	2.5	6.2
	유배우자가구	0.9	4.0	6.1	7.5
	남성가구주가구	3.7	11.5	7.2	7.3
	여성가구주가구	1.2	5.0	8.0	8.7

〈표 8-17〉은 사회보장소득 전체에 의한 빈곤탈피율의 변화추이를 1996~2006년 기간동안 빈곤정도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하여 본 것이다. 빈곤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회보장 소득 전체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1996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17〉 빈곤정도별 전체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비교

(단위: %)

빈곤정도	가구유형	1996	2000	2003	2006
극빈층 (중위소득의 20% 미만)	전체	15.3	13.7	11.9	10.2
	단독가구(노인)	1.0	3.7	6.8	7.8
	단독가구(비노인)	6.0	6.3	4.1	6.4
	노인가구주가구	15.5	25.6	20.2	18.7
	유배우자가구	24.4	15.1	12.2	7.9
	남성가구주가구	5.1	14.1	3.2	3.5
	여성가구주가구	19.6	1.0	3.6	5.3
일반빈곤층 (중위소득의 20~50%)	전체	4.4	8.5	11.9	15.7
	단독가구(노인)	1.8	4.2	3.8	6.3
	단독가구(비노인)	1.5	3.8	6.6	7.3
	노인가구주가구	9.7	11.9	12.2	23.5
	유배우자가구	3.9	8.4	13.2	14.1
	남성가구주가구	5.2	10.8	11.4	21.1
	여성가구주가구	3.4	8.3	13.5	16.5
빈곤층	전체	5.9	9.6	11.9	13.5
	단독가구(노인)	1.4	3.9	5.1	7.2
	단독가구(비노인)	2.2	4.3	5.7	6.8
	노인가구주가구	11.1	16.2	15.5	21.2
	유배우자가구	5.8	9.3	13.0	12.2
	남성가구주가구	5.2	11.5	8.7	13.3
	여성가구주가구	4.7	7.2	11.1	12.6

전체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1996년 5.9%에서 2000년 9.6%, 2003년 11.9%, 2006년 13.5%로 증가하여 왔다. 빈곤정도별로 살펴보면, 극빈층의 경우는 1996년 이후 점차 전체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이 낮아져 왔는데 반해, 일반 빈곤층의 경우는 점차 향상되어 와서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앞의 연금소득과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빈곤탈피효과 분석을 참고하면, 극빈층에서 빈곤탈피는 주로 연금소득에 의해 이루어 졌고, 일반 빈곤층의 빈곤탈피는 상대적으로 기타 사회보장 소득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 효과가 점차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인구집단별로 보면, 사회보장소득 전체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모든 집단에서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2006년을 보면, 노인가구 가구 빈곤탈피율이 21.22%로 가장 높고, 유배우자 가구, 한부모 가구의 빈곤탈피율은 12~13% 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단독가구의 빈곤탈피율은 7% 내외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은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하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 빈곤집단의 규모와 사회보장소득을 포함한 후인 경상소득 기준 빈곤집단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8-18〉을 보면,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하기 전후 빈곤집단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한 후인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1996년 8.97%에서 2000년 13.06%로 상승하였고, 2003년에는 16.03%로, 2006년에는 16.66%로 증가하였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극빈층의 규모도 1996년 1.10%에서 2000년 2.54%, 2003년 5.02%, 2006년 6.69%로 상승하였다.

〈표 8-18〉 사회보장 소득 전후 빈곤층의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빈곤정도	1996		2000		2003		2006	
	시장 소득	경상 소득	시장 소득	경상 소득	시장 소득	경상 소득	시장 소득	경상 소득
극빈층	1.30	1.10	2.94	2.54	5.70	5.02	7.45	6.69
일반 빈곤층	8.23	7.87	11.51	10.52	12.49	11.01	11.81	9.97
빈곤층 전체	9.53	8.97	14.45	13.06	18.19	16.03	19.26	16.66

이러한 사실은 사회보장소득의 증가 정도가 빈곤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단지 빈곤율의 증가를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빈곤율 하락 효과가 점진적으로나마 조금씩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빈곤 완화효과는 빈곤율을 1996년 0.56% 포인트, 2000년 1.39% 포인트, 2003년 2.16% 포인트, 2006년 2.60% 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 6 절 분석결과의 함의

지금까지 1996-2006년 기간동안 사회보장소득의 수혜구조의 변화추이를 수혜율, 평균 사회보장소득, 점유율, 빈곤탈피율을 중심으로 빈곤정도별 집단과 가구 유형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 이후 빈곤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동시에 빈곤의 심도도 깊어져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율은 1996~2000년에 이르는 기간에 5%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2006년에 이르는 기간에도 4.8% 포인트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9.3%에 이른다. 빈곤의 심도도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깊어져, 중위소득의 20%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극빈층의 비율이 1996년 1.3%에서 2006년에는 7.5%로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소득의 수혜율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수혜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왔다. 연금소득, 기타 사회보장소득 모두 빈곤집단 전체에서 수혜율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2006년 기간 동안 사회보장수혜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수혜율의 증가정도가 빈곤율의 증가정도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보장수혜율의 변화추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인구집단별 수혜율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보장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자격조건으로 인구학적 조건이 폐지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사회보장 평균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 사회보장 평균소득은 실질 가치상으로 1996년 이후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사회보장소득의 경우는 1996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연금소득의 경우는 기타 사회보장 평균 소득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사회보장소득에

서 국민연금 소득의 영향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중 대부분은 급여수준이 낮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다.

넷째, 사회보장소득의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2000년까지는 빈곤집단보다 빈곤집단의 사회보장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았으나, 2003년 이후 빈곤집단의 점유율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극빈층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연금소득, 기타 사회보장 소득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집단을 구성하는 인구집단별로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사회보장 소득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유배우자 가구의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의 측면에서 보면, IMF 경제위기 전인 1996년과 비교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 이후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은 일정정도 향상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 효과는 연금소득 및 기타 사회보장소득 모두 일정정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정도별로 보면, 극빈층의 빈곤탈피율은 1996년 이후 점차 하락하여 왔으나 빈곤정도가 덜한 일반 빈곤층의 빈곤탈피율은 비교적 크게 향상되어 왔다. 또한 극빈층의 빈곤탈피는 주로 연금소득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 빈곤층의 빈곤탈피는 상대적으로 기타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집단별로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탈피율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같은 노인가구인 노인단독가구는 사회보장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이 유배우자 가구나 한 부모 가구보다도 오히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1996년 이후 사회보장소득이 양적으로 비교적 크게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소득 포함 전후의 빈곤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특히 극빈층의 비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확대가 빈곤의 증가추세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대 빈곤정책의 양적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 기간 동안 빈곤의 확대 정도보다

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 중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혜 사각지대의 규모도 동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한 빈곤율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양적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소득보장제도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앞의 분석을 보면, 빈곤층 특히 극빈층의 인구구성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원 및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연금이나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기초 소득보장제도가 유일한 빈곤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는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기초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더욱 절실하다. 앞의 분석을 보면, 노인가구 중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율도 낮고,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탈출 효과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초 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의 자격조건 완화와 함께 급여수준을 상당 정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빈곤층의 내부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빈곤자의 특성에 맞는 빈곤대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IMF 경제위기 이전의 경우 빈곤층의 절대 다수가 근로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근로능력 없는 계층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있는 빈곤층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도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단독가구 및 한 부모 가구 가구원의 빈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대책 역시 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정책 목표 및 수단을 다양화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제9장 결론

제 1 절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빈곤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빈곤요인을 규명하거나 비빈곤 또는 전인구층과 빈곤층의 실태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빈곤층의 내부적 양상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본론은 크게 7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의미를 찾기 위한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 빈곤개념에 기초한 <빈곤층의 기본적인 내부 구성 분석>, 소지역별 빈곤율을 추정하고 빈곤도를 그리는 <빈곤의 공간적 구조분석>, 빈곤층을 인구학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분석>,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 역동성 측면에서 빈곤 진입, 탈피 집단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는 <빈곤역동성의 구조분석>, 대빈곤정책이 빈곤층 내부의 어느 집단에게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이 그 것이다.

빈곤구조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는 분석시점을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이후 빈곤급증 기간, 잠시 빈곤이 완화되었던 시기, 그리고 빈곤의 재심화시기가 바로 관심을 두는 시기이다. 각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통계청), 2003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대변할 2006년 가계조사 상반기자료(통계청)를 이용하였다.

본론의 분석내용과 분석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연구의 동향 분석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대체한 부분으로 우

리나라 빈곤 연구의 역사를 개괄하고 빈곤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1960년대부터 2006년 상반기(6월)까지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과거 연구의 총량과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연구의 배경을 밝히며 연구주제에서 도외시 되었던 영역을 찾아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뿐 아니라 이후 빈곤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빈곤연구의 총량은 빈곤율의 증감이나 경기변동, 그리고 기초 데이터의 생산이나 정치적 상황 등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는 빈곤의 지역적 구성이나 빈곤의 인구학적 구성의 전면, 그리고 빈곤의 동태적 분석과 빈곤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된 주제의 연구들은 아직 풍부하게 축적되지 못하였으며 연구방법에서는 질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층의 기본적 내부 구조 분석에서는 다양한 빈곤개념과 빈곤관련 지수들의 의미에 기초한 빈곤층 내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더하였다. 빈곤격차비율이나 센지수 등의 원리를 반영한 빈곤층의 소득수준별 구성비, 빈곤층의 소득분배 상태, 빈곤층 내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6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층 내부에서, 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인구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악화되어 하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고 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빈곤층의 공간적 구조분석에서는 소지역단위인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빈곤율을 서베이자료와 센서스자료의 결합을 통하여 추정하고, 빈곤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빈곤도를 활용하여 가시화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적 구조에서 무엇을 매개로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의 공간적 구조는 산간지역의 빈곤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의 빈곤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통과 산업입지요인이 매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 빈곤의 공간구조가 다소 변화하는데, 수도를 둘러싼 일부 지역, 서해안 일부 지역, 중공업 업체가 자리한 경남 해안 일부 지역의 빈곤율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신도시 개발과 도로의 개통 및 산업의 육성·분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빈곤지역을 표적화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인인구비율, 재정자립도가 지역빈곤율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등은 지역빈곤율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넷째,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분석은 우선 자료의 특성 상 상세한 범주 구분이 가능한 시점(2003년)에 한정하여 다양한 기준을 동시 적용하고 정책표적을 가시화하였으며 시기별로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빈곤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에서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았으며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에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단연 높았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근로능력가구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은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 비중이 높아 근로지원의 영향을 함께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빈곤층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보면 빈곤층에서 단독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 무배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배우가구의 빈곤율도 과거에 비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활용한 자료의 표본차이가 한계로 작용하였지만 대체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변화의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구조분석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를 정교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 중 취업빈곤층의 규모가 작지 않고, 역으로 취업자 중 빈곤층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그리고 취업자 하위 범주별로 일용직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빈곤발생확률이 높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공식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이다.

여섯 번째, 빈곤의 역동적 구조분석에서는 분석의 목적 상 패널자료인 KLIPS

를 활용하였는데 빈곤으로 진입하는 집단과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 그리고 계속 빈곤에 남은 집단의 내부적 구성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빈곤경험을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개인들은 50.5%로 매우 낮지만 7년 내내 빈곤층에 속했던 개인들도 3.5%에 불과하였다. 즉, 빈곤층의 역동성은 매우 활발하여 빈곤위험이 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가구와 단독가구, 노인가구의 빈곤무경험 비율은 전체와 비교하여 더욱 낮았으며, 특히 노인가구의 빈곤무경험 비율은 더 낮았다. 한편 노인가구, 단독가구,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탈출률은 감소하는 반면 빈곤진입률은 높아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비중은 노인가구에 비하여 여성가구와 단독가구에서 더 높았다.

일곱 번째, 대빈곤정책의 수혜구조 분석에서는 공적지원의 수혜가 빈곤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빈곤층 내 공적지원 수혜 집단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수혜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1996-2006년 기간 동안 빈곤집단 내 사회보장수혜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빈곤의 증가추세에 못 미치고 있었다. 사회보장소득의 점유율을 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2003년 이후, 빈곤층의 사회보장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극빈층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빈곤층 내 구성범주별로 비교하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사회보장소득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유배우가구의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탈피율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컸다.

제 2절 정책적 함의

빈곤은 거의 모든 사회, 거의 모든 시대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물론 경제성장기에 다소 문제의식이 누그러지기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성격을 바꾸면서 여전히 주 사회문제로서의 위용을 떨치곤 하였다. 본

연구는 전 사회에서 빈곤이 점한 위치를 찾기보다는 빈곤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였다. 빈곤내부의 구조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이 점이 분석 내내 문제점을 만들었다. 이 문제들이 결국 연구의 한계로 남게 되었지만 빈곤의 숨겨진 속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의지를 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로부터 얻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첫째, 대빈곤정책의 확충 및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10년간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위험은 거의 모든 집단에게서 상승하고 있었다. 대빈곤정책이 일부 보완되어 왔지만 빈곤의 확대와 심화 수준에 못미치어 빈곤층 내부의 정책적 사각지대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과거의 취약인구집단·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으로는 최근의 빈곤양상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우선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났으며 전통적 빈곤층인 취약인구집단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층, 유배우가구의 빈곤율도 높아져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2003년 기준 약 63%에 이른다. 한편 여성과 단독비노인가구의 빈곤진입율도 상승하였다. 결국 빈곤층에서도 취약인구집단 뿐 아니라 근로능력자들이 비교적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빈곤선 바로 아래의 밀집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빈곤의 역동성 구조 분석에서 보면 빈곤을 경험한 인구의 규모가 매우 커서 빈곤역동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빈곤위험이 비교적 넓게 사회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빈곤에 대한 정책이 사후 대응으로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보장 뿐 아니라 탈빈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 대빈곤정책의 대부분은 극빈층·노인가구·주거가구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근로능력자 집단에게 소득보장 중심의 대빈곤정책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할 듯 하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층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리 크지 않았다. 실업률은 낮아 언제나 일자리의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남성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꾸리는 구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일자리 부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이인생계모형(dual earner model)이 수용되는 분위기에 있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적 접근도 분화·정교화되는 추세에 있다.

취업빈곤층으로 또는 근로기간에 따라 구분된 근로빈곤층으로,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등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접근이 구분되기도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접근하여 본다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사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여 진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이들은 우선 근로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근로할 동기를 상실한 사람들, 또는 근로기회가 있어도 근로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지만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이 근로동기를 갖고 기회를 찾도록 하는 고리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강화가 그것이다. 한편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에는 대개 노인, 장애인, 질환자, 아동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근로를 위한 가구여건의 마련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작지 않은 규모가 이미 취업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의 마련과 제공, 노동시장의 공식화,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강화 등 근로가 탈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강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층은 공적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며 공적이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은 빈곤층의 상당비중을 차지한다. 인구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이 경향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1996~2006년 10년간 빈곤율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변화의 기여를 보면 가구의 연령을 기준으로 범주화한 경우에 기여의 폭이 가장 컸다. 노인의 근로능력은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다섯째,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구 또는 개인단위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든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빈곤의 공간적 구조는 지역개발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이 공간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를 가구의 문제, 개인의 인적자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지역의 환경조건들이 더 근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통의 편의성 등은 개도국에서 빈곤의 지역적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인들이다. 지역적 기반이 지역주민의 빈곤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빈곤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이 수용되어야 한다. 최근의 상황에서 본다면 분권화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후 빈곤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빈곤정책의 효과성은 빈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축적으로부터 뒷받침될 것이다. 빈곤연구는 빈곤양상과 원인을 밝히고 빈곤정책의 효과와 효과저하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곤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심각한 장애는 적절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자료의 기근은 빈곤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체험한 한계였다. 빈곤의 세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빈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빈곤연구의 주제를 넓히고 연구방법의 다양화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훈, 「한국의 절대빈곤율의 계절성 분석」, 미발표자료, 2006.
- 강우원,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공간적 분포연구」, 『산경논문』,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제11권, 1989, pp.211~147.
- 고성삼·김지범,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조세학연구』, 제8호, 1996, pp.177~19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공무원연금통계』, 2006.
-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2005a, pp.351~374.
- _____,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동태적 양상」, 『빈곤실태 심포지움 : 통계로 본 빈곤문제, 그 실상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b.
- _____,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 빈곤의 추이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4호, 2004, pp.57~78.
- _____,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2002, pp.82~112.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6.
- 국방부, 『2004년도 군인연금통계연보』, 2005.
-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9권(1), 2006.
- 금재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a.

- _____,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2001b, pp.511~539.
- 김교성·반정호,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2004, pp.31~52.
- _____,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권, 2003, pp.181~204.
- 김교성·최영,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2006, pp.119 ~ 141.
- 김동춘·류정순 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참여연대, 2000.
- 김미곤 외,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영모,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권, 1990, pp.31~61.
- 김종기, 「우리나라 영세민의 지역적 분포 특성과 원인」, 『한국개발연구』, 1981, pp.95~99.
- 김태성·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 김태완, 「성장불평등 및 빈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8.
- 김환준, 『복지국가의 빈곤 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나남, 2005.
- 남재량·성재민·이상호·최효미·신선옥·석상훈,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제7차년도(2004년도)』, 한국노동연구원, 2006.
- 노대명 외, 『2004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한국 근로빈곤층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능후·송미영,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31, 2006.
- 박능후 외, 『기초보장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박능후·여유진·김계연·임완섭·송연경·박소연,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순일·황덕순·최현수,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빈곤층의 소득보장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재규, 「여성가구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3권, 2003, pp.81~112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배진한, 「빈곤의 지역적 구조」, 『경제 논집』, 충남대학교 경영 경제 연구소, 14권. 1998, pp.65~90.
- 백경숙·권용신, 「노인복지 연구동향분석」, 『한국가족 복지학』, 제8권, 2003, pp.23~3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 서우경, 「국내·외 아동학대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1호, 2001, pp.41~77.
- 석재은·김용하·김태완, 『여성의 빈곤실태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Vol.71,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안창수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여유진 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윤석범, 「한국의 빈곤과 분배」, 『연세 경제연구』, 제7권, 2호, 2000, pp.127~145.
- 윤홍식·김혜영·이은주,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3호, 2005, pp.263~288.
- 이병희·정재호,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2002, pp.128~150.
- _____,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노동경제논집』, 제23권(1), 2000.
- 이상은·진영, 「변동계수를 이용한 소지역 통계의 안정성 검토」, 『통계분석연구』, 창간호, 1996, pp.23~40.
- 이원익,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정우·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 2001, pp.79~109.
- 이지연, 「해외 패널조사 현황과 방법론적 문제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인구패널의 효율적 구축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현준, 『한국도시 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개발원, 1986.
- 전병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3), 2003.

- 정영숙, 「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소비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05, pp.195~207.
- 진미정·김은정,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Vol.27, 2005.
- 최일섭·김광역, 「한국사회에 있어서 빈곤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2호,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2, pp.293~310.
- 최현수·류연규, 「우리나라 노인 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2003, pp.143~160.
- 최형아, 「로지스틱 회귀를 활용한 소지역 실업률 추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9.
-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2004, pp.187~209.
- _____, 「가족, 국가,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4권, 2003, pp.321~344.
-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7-4호, 2005, pp.275~290.
- 황덕순, 「절대 빈곤율 추계와 실태」, 『빈곤실태 심포지움: 통계로 본 빈곤문제, 그 실상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 _____,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Adihetty, S., S. Lunn, W. Pitt, Stanborough, J., Vigurs, C., Wilkie-Jones, C.,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DWP, 2003.
- Bigman, D. & H. Fofack, "Geographical Targeting for Poverty Alleviation: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worldbank economic review*, 2000, Vol.14 No.1, pp.129~145.
- Boushey, Heather, "Last Hired, First Fired : Job losses plague former TANF recipients", *EPI Issue Brief*, Economic Policy Institute December 12, 2001 Issue Brief #171, 2001.
- David Bigman and Hippolyte Fofack, "Geographical Targeting of Poverty alleviation: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4, No.1, 2000:129~45.
- Holton, W. C., "Rich map Poor map",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2, no.3, 2004.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EFILWC),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2004.
- Forster, M. and M. Pears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Trends and Driving Forces" *OECD Economic Studies* No (34), 2002.
- Fouarge, D. and R. Layte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2), 2005, pp.407~426
- Hagenaars, Aldi, "A Class of Poverty Indic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8, no 3, 1987,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Inequality II*(F. A. Cowell, edit), 2003.
- Horton, Hayward Derrick and Beverlyn Lundy Allen, "Race, Family Structure and Rural Poverty: An Assessment of Population and Structural Chang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29, 1998.

- Hentschel, J., P. Lanjouw, & J. Poggi, "Combining census and Survey data to study spatial dimension of poverty: A case study of Ecuado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928, 1998.
- Hook, J. A., S. L. Brown & M. N. Kwenda, "A Decomposition of trends in poverty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Demography*, 41:649~670, 2004.
- Hourriez, Jean-Michel, "Que nous apprend l'information statistique disponible sur les travailleurs pauvres?", *Le Colloque Working Poor*, mai 2000.
- Hyman, G., C. Larrea, & A. Farrow, "Method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overty and food security mapping assessments", *Food Policy*, 30(5-6):453~460, 2005.
- Iceland, J., "Why poverty remains high: The role of income growth, economic inequality,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1949~1999", *Demography*, 40: 499~519. 2003.
- L'Horty, Yannick, "<Working poor> en France", *Le Colloque Working Poor*, mai 2000.
- Minot, N., "Generating Disaggregated Poverty Maps: An Application Vietnam.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MSSD discussion paper*, no. 25, 2006.
- Minot, N & B. Baulc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 in Vietnam and the potential for targeting," *MSSD discussion papers*, 42,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2002.
- Musick, K & R.D. Mare, "family structure,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evidence for increasing polarization?", *demography*, 41:629~648, 2004.
- Orshansky M., "Counting the poor: Another look at the poverty profile", *Social Security Bulletin*, 28, 1965.

- Ritakallio, Veli-Matti, "Trend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Cross-National comparison", *LIS working paper*, No.272. 2001.
- Rowntree, Seebohm, *Poverty: The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1901.
- Sen, Amartya,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Vol.44, No.2, 1976.
- Simler, K. R & V. Nhate, "Poverty, Inequality and Geographic targeting: Evidence from small -Area Estimates in Mozambiqu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5.
- Simler, K. R, "Rich map poor map", *Environ health Perspect*, 112, No.3, 2004.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Bulletin*, Vol.65. No.2, 2003/2004.
- Strengmann-Kuhn, Wolfgang,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c Income for Workers?*,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9th International Congress, september 2000, 2002.
- Watts, H., "An Economic Definition of Poverty in D.P. Moynihan", *On Understanding Poverty*, Basic Book, Inc. York, 1968.
- World Bank,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vol 1 Core Techniques and Cross-country issues*, 2002.

<http://booth.lse.ac.uk>

<http://newfirstsearch.oclc.org>

<http://search.koreanstudies.net> 한국학술정보

<http://www.dbpia.co.kr>

<http://www.gepco.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사학연금관리공단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povertymap.net>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

<http://www.whiteband.org>

<http://www.worldbank.org>

【부 록】

〈부표 1〉 빈곤율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 분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5	4.8	8.7	14.4
2000	9.2	7.9	13.1	19.1
2003	11.6	10.5	15.5	21.4
2006 ¹⁾	12.5	11.8	16.4	22.1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2〉 빈곤격차비율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 분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0.5	32.3	29.3	28.1
2000	30.3	33.8	32.3	32.3
2003	36.2	38.9	37.6	37.0
2006 ¹⁾	44.8	46.3	43.6	41.5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3〉 센지수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 분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0.0164	0.0222	0.0368	0.0581
2000	0.0417	0.0376	0.0598	0.0868
2003	0.0639	0.0598	0.0845	0.1136
2006 ¹⁾	0.0767	0.0765	0.1005	0.1289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4〉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

(단위: %)

구분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¹⁾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PL의 10% 미만	5.5	5.5	0.2	3.0	3.0	0.3	9.2	9.2	1.1	16.9	16.9	2.1
PL의 20% 미만	2.2	7.7	0.3	1.9	5.0	0.5	2.4	11.6	1.3	3.9	20.8	2.6
PL의 30% 미만	2.8	10.5	0.4	3.2	8.1	0.7	2.9	14.5	1.7	4.8	25.7	3.2
PL의 40% 미만	3.3	13.8	0.5	4.7	12.9	1.2	4.8	19.3	2.2	5.6	31.3	3.9
PL의 50% 미만	7.2	21.0	0.7	7.8	20.6	1.9	6.2	25.5	3.0	7.5	38.7	4.9
PL의 60% 미만	6.1	27.1	1.0	9.0	29.6	2.7	10.4	35.9	4.2	8.8	47.5	6.0
PL의 70% 미만	12.1	39.3	1.4	11.5	41.1	3.8	12.1	48.1	5.6	10.3	57.8	7.2
PL의 80% 미만	16.1	55.3	1.9	17.3	58.4	5.4	15.7	63.7	7.4	12.2	70.0	8.8
PL의 90% 미만	19.4	74.7	2.6	17.5	75.9	7.0	18.0	81.7	9.4	14.1	84.1	10.5
PL의 100% 미만	25.3	100	3.5	24.1	100.0	9.2	18.3	100	11.6	15.9	100	12.5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빈곤인구 중 누적비율, 3) 전체 인구 중 누적비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5〉 빈곤집단의 빈곤심도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

구분	1996년			2000년			2003년			2006년 ¹⁾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비율	누적 ²⁾	누적 ³⁾
중위 5% 미만	1.7	1.7	0.2	1.7	1.7	0.3	5.2	5.2	1.1	4.5	4.5	2.3
중위 10% 미만	1.0	2.6	0.4	1.3	3.1	0.6	1.6	6.8	1.5	3.2	7.7	2.9
중위 15% 미만	1.8	4.4	0.6	2.7	5.8	1.1	2.5	9.4	2.0	4.7	12.4	3.7
중위 20% 미만	3.0	7.5	1.1	4.1	9.9	1.9	4.4	13.7	2.9	6.2	18.7	4.9
중위 25% 미만	3.8	11.3	1.6	5.8	15.7	3.0	5.6	19.4	4.2	7.1	25.7	6.2
중위 30% 미만	6.1	17.4	2.5	6.7	22.5	4.3	9.4	28.8	6.2	9.4	35.1	7.8
중위 35% 미만	7.1	24.4	3.5	8.6	31.1	5.9	10.1	38.9	8.3	9.3	44.4	9.6
중위 40% 미만	8.5	32.9	4.8	10.4	41.5	7.9	10.1	49.0	10.5	11.2	55.6	11.8
중위 45% 미만	12.5	45.4	6.6	11.9	53.4	10.2	11.5	60.5	13.0	11.5	67.1	14.0
중위 50% 미만	15.1	60.5	8.7	15.0	68.4	13.1	11.9	72.5	15.5	11.2	78.2	16.4
중위 55% 미만	18.9	79.4	11.5	14.5	82.9	15.8	12.9	85.3	18.3	10.7	89.0	19.3
중위 60% 미만	20.6	100.0	14.4	17.1	100.0	19.1	14.7	100.0	21.4	11.0	100.0	22.1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빈곤인구 중 누적비율, 3) 전체 인구 중 누적비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6〉 전계층과 빈곤층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구분	가처분소득		
	전계층	빈곤층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1996	0.2773	0.2362	0.1838
2000	0.3257	0.2156	0.1976
2003	0.3406	0.2987	0.2684
2006 ¹⁾	0.3319	0.2966	0.3134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7〉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1/10분위	1.3	1.3	2.6	2.6	0.3	0.3	0.0	.00
2/10분위	5.3	6.6	5.7	8.3	4.6	4.9	1.1	1.1
3/10분위	7.4	14	7.3	15.6	7.3	12.2	5	6.1
4/10분위	8.9	22.9	8.6	24.2	9.2	21.4	7.9	14
5/10분위	10.2	33.1	9.8	34	10.2	31.6	9.9	23.9
6/10분위	11.5	44.6	10.9	44.9	11.4	43	11.9	35.8
7/10분위	12.2	56.8	11.8	56.7	12.3	55.3	13.5	49.3
8/10분위	13.4	70.2	12.7	69.4	13.5	68.8	15.1	64.4
9/10분위	14.3	84.5	14	83.4	14.6	83.4	16.8	81.2
10/10분위	15.6	100.0	16.6	100.0	16.6	100.0	18.8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부표 8〉 빈곤인구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

(단위: %)

	1996		2000		2003		2006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1/10분위	2.8	2.8	3	3	1.1	1.1	0.4	0.4
2/10분위	6.3	9.1	5.9	8.9	5.3	6.4	2.3	2.7
3/10분위	8.1	17.2	7.7	16.6	7.6	14	5.9	8.6
4/10분위	9.2	26.4	9.1	25.7	9	23	8.2	16.8
5/10분위	10.4	36.8	10.2	35.9	10.1	33.1	10.3	27.1
6/10분위	11.4	48.2	11.2	47.1	11.3	44.4	11.8	38.9
7/10분위	11.9	60.1	12.1	59.2	12.3	56.7	13.4	52.3
8/10분위	12.7	72.8	13	72.2	13.4	70.1	14.6	66.9
9/10분위	13.4	86.2	13.6	85.8	14.4	84.5	15.9	82.8
10/10분위	13.8	100.0	14.3	100.0	15.5	100.0	17.2	100.0

주: 1) 1분기와 2분기 자료만 사용

2)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연구보고서 2006-11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The Structure of Poverty in Korea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8,000원
저자 이현주 외
발행인 김용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400-1 93330